

2021 통일

제40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논문집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이 책자는 「제40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모음집으로, 논문의 내용이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목 차

최우수

- *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MZ세대의 편견과 남북 사회통합.....5
김동규 | 연세대학교 국제관계·안보전공
임정빈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 * 4차산업혁명 발전에 따른 新남북경제협력 정책적 제언..... 47
- 남북 공동 빅데이터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
정윤재 |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우수

- * 통일부 이슈에 대한 대중의 진실성 및 공정성 평가 연구..... 97
- 정책 및 보도자료 제언을 중심으로 -
최예슬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김유나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 *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139
- 융합 교육을 기반에 둔 통일교육 단위 개발을 중심으로 -
전예린 |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장려

- *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 을 위한 정책적 제언..... 177
- DMZ 지뢰 제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박민정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 229**

- MZ세대와 ESG 경영을 바탕으로 -

김혜진 |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임희수 |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 문화적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로 인한 위협과 다양성
이념의 완충 효과의 탐색 263**

이성지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허성진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최우수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MZ세대의 편견과 남북 사회통합

연세대학교 국제관계·안보전공 김동규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임정빈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사회통합과 편견에 관한 이론
- III. 연구방법 및 설계
- IV. 연구결과
- V. 사회통합과 통일의 문제
- VI.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MZ세대의 편견과 남북 사회통합

2020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2018년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에도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10대, 20대 및 30대를 지칭하는 MZ세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통일부는 2030 세대가 통일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통일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조사처럼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면, 통일에 과정에서 마주하는 변화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사회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통합은 국내적 제도와 법 구축, 국제적 지지 도출 및 법적 마무리 등의 거시적 통합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통합은 미시적 통합으로서 사회 내 행위자들 간의 질서정연하거나 갈등적인 관계에 관심을 둔다. 분단국의 사회통합은 동질적 민족이 일정 기간 다른 체제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체계상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 정부는 1994년부터 하위정치 영역(low politics)의 협력이 기능망과 협동망을 형성하여 상위정치 영역(high politics)에도 변화를 가져와 정치통합을 촉진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상기 통일방안은 신기능주의를 이론적 토대로 사회통합을 통일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남북 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은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수단이자 과정으로 상호신뢰 형성을 통해 남북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능력, 나이 및 외모 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은 일상생활과 행동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정체감 혹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독일 통일 이후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 뿐 아니라 소통의 형식,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차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및 소통의 질(quality) 등은 동독 주민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 독일의 체제는 통합되었지만, 사회통합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다. 독일 통일 후 약20년이 지난 2009년 무렵, 동독 주민의 42%가 자신을 독일의 이등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1865년에 종전한 미국 남북전쟁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에는 북부-남부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 지역갈등은 인종 갈등과 같이 격한 대립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남부지역의 독특한 정서와 특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베트남도 북부의 사회주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남부에 적용하였고 이에 대해 남부 주민들은 복종, 탈출 또는 저항 등으로 대처하였다. 남베트남 주민들은 억압이나 고통 및 희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북베트남 주민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편견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단기간에 소멸되지도 않는다. 이렇듯 여러 요인에서 볼 수 있듯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심리적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리나라 MZ세대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정체성, 편견 및 고정관념 인식 등의 심리적 변수가 통일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향후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민족정체성,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적 온정을 식별하였고, 해당 변수가 통일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통일에 대한 MZ세대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 중 보편주의와 통일편의에 따른 선호가 민족주의에 따른 선호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정체성은 높았지만 민족정체성은 낮았다. 이를 통해 MZ세대 간에 ‘우리 민족’이라는 관념은 서서히 없어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우리-그들’의 논리 속 외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통일 지향성 및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에 따른 필요성 인식이 높았다.

또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는 전반적으로 낮지만,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MZ세대가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금강산 등의 경제협력 사업을 통한 북한 주민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MZ세대는 북한 주민에 대해 상위정치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하위정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도적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상위정치 영역과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이 낮을수록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에 따른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가 높았다. 이 경우 상위정치 영역과 하위정치 영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민족정체성이 낮고 북한 주민에 대한 온정이 낮았다. 역설적으로 상위정치 영역에서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집단 간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협력과 교류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관념 내용 모형에 따른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MZ세대의 인식을 살펴보면 온정 인식과 유능성 인식이 모두 낮아 경멸적 고정관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성 수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일어날 남북 사회통합에 주요한 장애요인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중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관한 교육을 확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을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사회통합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우리나라는 반세기 이상 분단된 상황에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냉전의 비동시성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1969년“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통일원”을 개원하고 1998년 통일부로 개칭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통일 논의를 체계적, 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¹⁾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 함양, 균형 있는 대북 확립 등의 목표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20년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통일의식 조사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²⁾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수행한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특히 10대, 20대 및 30대를 지칭하는 MZ세대 사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³⁾ 위 조사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특징은 통일 이후 빈부격차, 지역갈등 및 표현의 자유 제약 등에 관한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⁴⁾

-
- 1) 통일부 홈페이지, “설립목적”, <<https://www.unikorea.go.kr/unikorea/about/Introduce/establishment/>> (검색일: 2021.06.16).
 - 2)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조사발표”, 『통일연구원 보도자료』, 2020.06.25., p.1. <<https://www.kinu.or.kr/brd/board/630/L/menu/399?brdType=R&thisPage=1&bbIdx=57635&searchField=&searchText=>>> (검색일: 2021.06.16.).
 - 3)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인식”, 『단절의 시대, 통일의식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79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2020.10.13.). 동 화상회의에서 발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20대와 30대에서 각각 35.3%와 30.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19.3%와 18.8% 응답한 결과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4) 위의 글.

1990년 독일은 동독의 5개 주(州)가 서독에 가입하는 체제통합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독일의 사회통합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⁵⁾ 구동독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자신들이 여전히 서독 주민들에 비해 이등국민⁶⁾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⁷⁾ 2009년 무렵, 동독 주민의 42%가 자신을 독일의 이등국민으로 인식하였고, 2019년에는 동독 주민의 1/3이 아직도 자신을 이등국민이라고 생각하였다.⁸⁾ 제도적 통일을 달성한 지 약 30년이 지나고 한 세대에 준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회통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 후 실업률 증대, 동서독 격차로 인한 승자와 패자 인식, 빈부격차 등의 요인들은 내적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⁹⁾

통일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실현되는 수준에만 도달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자주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동질성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¹⁰⁾ 그런데도 통일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에서 보여주듯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면, 통일과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커다란 변화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MZ세대는 1980~2004년생(2020년 기준: 16~40세)을 지칭하며 1980~1994

-
- 5)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2010), p.269.
- 6) 이등국민은 일반적으로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의해 정치적 권한에서 차별되는 사람으로 해석한다. Avigail Eisenberg는 권리에 대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사람을 이등국민으로 설명하며 Andrew Stowe는 이등국민은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에서 따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내전 이후 미국의 재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문화적 용광로와 같이 묘사된 뉴올리언스에는 인종 따른 뚜렷한 사회경제적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점이 흑인들의 이등국민성(性)을 보여준다.
- 7) 송은희, 설진배, “독일의 사회통합 인식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2013), p. 368.
- 8)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독주민의 이등 국민정서 고찰 -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 『통일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2020), p. 12.
- 9) 오기성, “통일한국에서 사회통합 연구”, 『평화와 종교』 제9호 (2020), p. 32.
- 10)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p. 271.

년생(2020년 기준 : 26~40세)을 일컫는 ‘M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생(2020년 기준: 16~25세)을 뜻하는 ‘Z세대’를 합한 것이다.¹¹⁾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창립 52주년 행사에서 “2030세대는 마침내 통일의 문을 열 주인공이자 분단의 마지막 세대”라고 하였다.¹²⁾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통일을 마주할 가능성이 가장 큰 MZ세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사회통합 이론과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사회통합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본다. 이어, 편견이 분단국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외국 사례도 일부 인용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체성, 편견 및 고정관념 인식 등 심리적 요인들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내용이 우리 통일정책 및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사회통합과 편견에 관한 이론

1. 사회통합 이론

한 사회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³⁾ 국가통합은 국내 제도·법 구축, 국제적 지지 도출, 통합의 법적 마무리 등 거시적 통합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통합은 미시적 통합으로서 사회 내 행위자들 간의 질서정연하거나 갈등적인 관계에 관심을 둔다.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생활영역의 통합과 도덕이나 가치의 통합 등 사회-심리적

1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 MZ세대 첫 분석...시민 셋 중 한명,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 2021.08.10.,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0668>> (검색일: 2021.08.29.). 동 논문에서 언급되는 MZ세대는 1980~2004년생(2020년 기준: 16~40세)을 지칭한다.

12) “통일부 창립 52주년...이인영 “2030세대가 통일 주인공 될 것”, 『뉴스핌』, 2021.03.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02001013>> (검색일: 2021.06.05).

13) 오기성, “통일한국에서 사회통합 연구”, p. 35.

측면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사회통합 과정은 “다양한 특성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¹⁴⁾ 여기서 거시적 수준의 국가 및 체제통합과 미시적 수준의 사회통합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전자도 후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¹⁵⁾ 이를 위해 남북 사회통합을 위해 남북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접촉지대”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마음 체계의 이론을 구축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¹⁶⁾

분단국 사회통합은 동질적 민족이 일정 기간 다른 체제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체계상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통합을 달성한다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모여 있다.¹⁷⁾ 분단국 사회통합의 최종상태는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와 그 결과들이 구조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¹⁸⁾ 따라서, 남북 사회통합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체제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상호주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2. 우리정부 통일정책과 남북 사회통합

독일과 같이 경제력에 의한 흡수 통일, 예멘과 같은 국력 비례 통일 및 베트남과 같은 공산화 통일처럼 분단국의 통일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¹⁹⁾ 따라서, 각 분단국이 처한 배경과 상황에 따라 통일의 기본원칙, 과정 및 미래상이 달라지며 상응하는 법과 제도가 형성되었다.

남북통일의 형태를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14) 송은희, 설진배, “독일의 사회통합 인식 분석”, p. 369.

15)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p. 271.

16) 이우영, 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 북한연구』 19권 1호 (2016).

17)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2.

18) 위의 글, p. 14.

19) 홍성이, “분단국통일국의 통합과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vi.

핵심적 가치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연히 이러한 정신과 원칙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공식 통일방안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동 정책을 기초로 사회통합의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하위정치 영역의 협력이 기능망과 협동망을 형성하여 상위정치에도 변화를 가져와 정치통합을 추진한다는 신기능주의 접근방식에 기반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정책은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도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남북 간 신뢰형성에 기여할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해 접촉과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²¹⁾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문화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함은 물론 남북 간 주민 왕래를 지원하여 남북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표1>은 통일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주요내용과 사회통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1> 통일부의 공식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²²⁾

단계	구체적 내용	사회통합에 관한 내용
1단계 (화해협력)	- 적대와 불신·대립관계 청산, 상호 신뢰 속 긴장 완화 - 화해를 정착 통한 실질적인 교류 협력 실시	- 평화 정착, 교류·협력 제도화
2단계 (남북연합)	-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 남북연합 기구들의 창설·운영 -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그리고 공동사무처 등 운영(가)	- 사회·문화·경제공동체 실현, 민족공동생활권 구축
3단계 (통일국가)	-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 실현 - 남북 두 체제의 완전한 통합과 1민족 1국가 단일 국가의 완성	- 정치공동체 실현, 단일민족국가 통일

통일방안과 사회통합을 함께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사회통합을

20) 김동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통일과 법률』 통권 제45호 (2021), p. 80.

21)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p. 13.

22) 권형돈,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문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① (2018), p. 32.

통일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²³⁾ 나아가 남북 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은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수단이자 과정으로 상호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한다.²⁴⁾ 따라서 협력과 교류는 평화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데 사회문화 분야에서 직접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통합과 편견의 문제

모든 사람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능력, 나이 및 외모 등에 따라 다양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선입견(perception)은“사태에 관한 모든 계기 혹은 대상에 대한 경험 이전 그리고 최종적인 검토에 앞서 내려지는 주관적 가치를 가진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⁵⁾ 선입견이 합리화 되고 고정되면 편견이 형성된다. 편견은 일상생활과 행동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정체감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해 가지는 편견의 원인에는 체제경쟁과 타자화, 사회문화적 학습 등이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이 역사적으로 자기 체제의 상대적 우위를 강조하였고, 타자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여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기능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이다.²⁶⁾ 특히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쟁과 분단체제 속에서 교육과 언론은 북한을 타자화 해왔는데, 교육에서 “북한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었고 북한 사회는 “동포, 궁핍” 등을 겪는 비참한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23)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p. 30-31.

24) 위의 글, p. 31 그리고 권형돈,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p. 43.

25) 김성중, “선입견의 문제에 관한 고찰: 가다머의 견해를 중심으로”, 『군사과학논집』 제63권 제2호 (2012), p. 271 그리고 남경아, 최영인, 이민영 “(1) 편견을 넘어서는 또 다른 방법, 휴먼라이브러리”, (희망제작소 소식, 2014.01.08.), <<https://www.makehope.org/1-%ED%8E%B8%EA%B2%AC%EC%9D%84-%EB%84%98%EC%96%B4%EC%84%9C%EB%8A%94-%EB%98%90-%EB%8B%A4%EB%A5%B8-%EB%B0%A9%EB%B2%95-%ED%9C%B4%EB%A8%BC%EB%9D%BC%EC%9D%B4%EB%B8%8C%EB%9F%AC%EB%A6%AC/>> (검색일: 2021.06.13.).

26)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통일정책 연구』 Vol.23 No.2 (2003), p. 155.

교육해왔다.²⁷⁾ 이러한 체제경쟁과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타자화 학습을 통해 “우리”를 고정화하고, 북한은 적대적 이미지를 가진 “그들”로 만들었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심리적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과정에서 북한 청소년의 일상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북한 청소년들은 집단주의적이고, 엄격하고, 타율적이고 및 몰개성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²⁸⁾ 이러한 갈등은 오랜 기간의 분단으로 빚어진 것으로, 서로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향후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²⁹⁾ 실제로, 독일 통일 이후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 뿐 아니라 소통의 형식,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차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및 소통의 질(quality) 등은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 주민의 편견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³⁰⁾ 또, 앞서 언급한 ‘우리-그들’이라는 대립적 관계에 기초하여 편견이 형성되어 이질화된 체제경쟁, 남북 간 직접대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및 심리적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도 높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통일사례는 다른 체제 그리고/혹은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이 단기간에 통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강구섭(2020)은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의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서로에 대한 편견으로 사회통합에 큰 장애요인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한다.³¹⁾ 통일 이전 냉전 당시 동서독 주민들은 서로 멸시하는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상호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편견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서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을 역량과 개발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로 인식했으며 동독 주민들은 서독 주민들을 경쟁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받기만 하고 감사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인식했다.³²⁾

27) 위의 글, p. 155.

28) 위의 글, p. 156.

29) 권형돈,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p. 6.

30)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독주민의 이등 국민정서 고찰 -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 p. 14-15.

31) 위의 글, p. 15.

32) 위의 글, p. 15-16.

통일 직후 충분한 소통 과정이 부족하여 상호 간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³³⁾ 이러한 편견은 일부 개선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서독 주민들은 30%가 동독 주민을 낮설게 느끼고 있으며, 동독 주민의 30%는 여전히 서독 주민이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바라보았다. 통일 직후의 분위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20년이나 지난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강구섭(2020)은 이러한 편견이 동독 주민들의 이등국민 정서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2009년 동독 주민의 42%가 자신을 독일의 이등국민으로 생각했고,³⁴⁾ 2019년에는 동독 주민의 1/3이 여전히 자신을 이등국민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강구섭(2020)은 어떤 차이가 동서독 주민들의 이등정서를 유발하는지 여러 요인을 제시하는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별인식과 부정적 편견, 사회적 지위로부터 동독 출신의 제외로 인한 승자-패자 정서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1865년에 종전한 미국 남북전쟁³⁵⁾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에는 북부-남부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 지역갈등은 인종갈등과 같이 격한 대립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남부지역의 독특한 정서와 특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도 ‘남부 정서’ 또는 ‘남부인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 남부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남부연합기는 남부인이라는 정체성 및 주(州)의 권한과 남부 전통의 상징임과 동시에 백인우월주의와 흑인 차별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 한 예로, 1996년 애틀랜타(Atlanta) 올림픽에서 애틀랜타 당국이 남북연합 깃발을 계양하겠다고 하여 흑인 활동가들이 해당 깃발을 계양하는 올림픽 장소에서 시위를 하고 백인 활동가들은 해당 깃발을 강하한다면 시위를 할 것이라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³⁶⁾

33) 위의 글, p. 16-17.

34)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독주민의 이등 국민정서 고찰 -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 p. 12.

35) 미국의 남북전쟁은 표면적으로 노예제 찬반 따른 남부 주와 북부 주의 갈등으로 인해 촉발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예들의 활용을 둘러싼 남과 북의 상이한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에서 기인하였다.

36) Eric Harrison, “Olympics Spark Debate Over Georgia Flag’s Confederate

베트남의 경우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의 항복을 받아냈고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에 성공하였다. 베트남 통일은 하나의 민족이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로 분열과 대립되었다가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폭력으로 통합된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 북부가 남부를 통합하는 형태로 통일을 이루었기에, 사회 통합과정도 북부의 사회주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남북에 부과하여 정치·경제 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남베트남 지배계급의 철폐, 사회 계층구조의 전환 및 사회생활상의 통제 강화 등이 진행되었다.³⁷⁾ 이에 대해 남부 주민들은 복종, 탈출 또는 저항 등으로 대처했다. 또, 남베트남들은 억압이나 고통 및 희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북부 주민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남베트남 군인 출신인 히옌반레는 자신은 베트남의 통일 이후 이등국민으로 살았으며, 남베트남 누구도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기 원치 않았다고 했다.³⁸⁾

Ⅲ. 연구방법 및 설계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적 만 15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소년 및 성인 5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참가자 523명

Heritage”, Los Angeles Times, July 19, 1996,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6-07-19-mn-25755-story.html>>
(Accessed June 14, 2021).

37) 이한우,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남부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주민의 대응과 그 변용」, 『아세아연구』 제50권 3호 (2007), p. 39.

38) 이학민, “[탐방기] 베트남 수평적 소통 문화와 한반도 통일의 지혜”, Daily NK, February 20, 2020, <<https://www.dailynk.com/%ED%83%90%EB%B0%A9%EA%B8%B0-%EB%B2%A0%ED%8A%B8%EB%82%A8-%EC%88%98%ED%8F%89%EC%A0%81-%EC%86%8C%ED%86%B5-%EB%AC%B8%ED%99%94%EC%99%80-%ED%95%9C%EB%B0%98%EB%8F%84-%ED%86%B5%EC%9D%BC%EC%9D%98-%EC%A7%80/>>> (Accessed June 13, 2021).

중 40세를 초과하여 참가 대상이 아닌 41명의 결과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총 41명을 제외한 481명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2>에 제시하였다. 분석에는 IBM SPS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2> 인구통계 변수에 따른 참가자 분포

	구분	남성	여성	응답거부 / 기타	계
연령	10대	16	20	0	36
	20대	216	141	11	368
	30대	53	23	1	77
	계	303	207	13	523

2. 측정도구

가. 대한민국/남북민족공동체 정체성

사회정체성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범주를 기반으로 정의되는 정체성을 말한다³⁹⁾.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을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장하며, 내집단의 긍정적 특징을 통해 자신을 정의함으로써 자존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정체성 이론의 기본 가정은 집단 간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지지 증거가 축적되었으며, 집단 간 갈등, 편견과 차별의 이해 및 해소를 예측하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국가, 지역, 성별, 종교 및 직업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자신을 정의하는데 더 중요한 사회적 범주 및 그에 연합된 사회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⁴⁰⁾. 특히 개인이 소속된

39) Tajfel, H., Turner, J. C.,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IL: Nelson-Hall, 1986), p. 7-24.

40) Turner, J.C. & Reynolds, K. J., "Self-Categorization Theory",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2011), p. 399-417.

사회범주 간에 명시적으로 위계적 계층구조가 존재할 때 개인은 다중 사회 정체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과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남북민족공동체로서의 민족정체성을 동시에 지니며, 민족정체성은 대한민국(남한)과 북한을 포괄하는 상위범주의 사회정체성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중 사회정체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집단 및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은 판단 대상을 내집단 구성원 또는 외집단 구성원으로 인식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민국 및 남북민족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⁴¹⁾에서 사용된 척도의 문항 중 일부를 재구성하였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귀하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귀하는 귀하의 정체성을 대한민국과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십니까?”, “귀하는 스스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귀하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십니까?” 등 4개 문항(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 = .862)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 전혀 아니다 ~ 7점 = 매우 그렇다). 남북민족공동체는 동일한 네 개 문항의 대상 집단을 수정하여 (예: “귀하는 같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남북민족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 = .937) 측정하였다. 두 구성개념 모두 4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고정관념 내용 모형

‘고정관념(stereotype)’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지닌 어떤 특성들에 대해 형성된 믿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판단의 과정에서 판단의 대상을 범주화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정보처리 기제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들은 오직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개인의 실제 특성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어떤 특성과

41)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사회 및 성격』 Vol.33 No.4 통권 100호 (2019).

연합되며, 이는 때때로 편견과 차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고정관념이 같지는 않다.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높은 능력을 갖고 있으나 온정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며,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온정은 높으나 능력은 낮은 사람들로 인식된다. Fiske 외의 고정관념 내용 모형⁴²⁾에 따르면, 사회적 판단에 있어서 사람들은 온정(warmth)과 유능성(competence)의 두 차원을 통해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온정과 유능성은 고정관념 내용 모형에서 설명하는 타인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차원이다. Fiske 외는 사람들은 마주한 타인에 대한 인상과 능력을 판단하여 가깝게 지낼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두 가지 차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대상에 대해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정과 유능성 인식에 따른 평가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의 유형은 <표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⁴³⁾에 사용된 척도의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온정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다음 4개의 온정 관련 형용사 ‘포용적이다, 따뜻하다, 선하다, 진정성 있다’가 어울리는 정도와 경쟁관계 인식을 묻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지원하면 그만큼 남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높일수록 남한 주민들이 받는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남한 주민에게 부당하다” 등 3개 문항을 종합한 총 7개 문항을 7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 7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0.79이다. 유능성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다음 4개의 유능성 관련 형용사 ‘유능하다, 자신감 넘친다, 독립적이다, 똑똑하

42) Fiske, S. T., Cuddy, A. J. C., Glick, P., & Xu, J.,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6 (2002), p. 87-902.

43) *Ibid.*

다'가 어울리는 정도와 지위 인식을 묻는 “북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 “북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다” 등 3개 문항을 종합한 총 7개 문항을 7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 7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0.81이다. 경쟁관계 인식 문항은 역채점하여 두 구성개념 모두 7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 고정관념 내용 모형(Stereotype Content Model)⁴⁴⁾

		유능성	
		낮음	높음
온정	높음	온정주의적 고정관념 (예: 장애인, 노인)	존경심 (예: 내집단 구성원)
	낮음	경멸적 고정관념 (예: 노숙인, 이민자)	선망적 고정관념 (예: 전문직, 고소득자)

다.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

강구섭(2020)은 동서독 통일 이후 소통과 행동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해 생겨난 동독주민들의 이등국민 정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논문에서 강구섭(2020)은 동독주민들이 소통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편견, 사회적 지위로부터의 배제에서 비롯된 편견에 대해 논의하는데, 언어와 태도, 단어 및 소통의 형식 등에서 나타나는 하위정치 이슈에서 비롯된 편견과 정치 엘리트 등 주류계층의 서독화, 동독 공무원들을 망한 국가체제 속에서 일한 서독 공무원들의 인식 등에서 나타나는 상위정치 이슈에서 비롯된 편견을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은 강구섭(2020)을 기초로, 북한의 정치 체제 등에 대한 상위 정치영역의 편견과 소통 방식과 문화 차이 등의 하위 정치영역의 편견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상위 차원의 편견은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은 실패한

44) Ibid.

체제의 사람들이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배워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녹아있을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 같다” 등 5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 전혀 아니다 ~ 7점 = 매우 그렇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0.77이다. 하위 차원의 편견은 “북한 주민들은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할 의지가 부족할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은 변화 의지가 없을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은 수동적이고 창의성이 없을 것 같다”, “북한 주민들과는 같이 어울리기 어려울 것 같다”, “북한 주민은 나와 같은 취미를 공유하기 어려울 것 같다” 등 5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 전혀 아니다 ~ 7점 = 매우 그렇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0.87이다. 두 구성개념 모두 5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라. 통일에 대한 태도

최근 5년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통일문제의 이해』를 살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은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익 담론으로 구분한다. 우선, 민족주의 담론은 최근 5년간 발간된 『통일문제의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남북한 주민이 같은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한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편가치 담론에 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을 통일의 필요성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세계평화와 인권 등 인류보편가치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일편익 담론에 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이 되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만, 2021년에 들어서 “편익”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분단으로 인한 “막대한 분단 비용과 국가역량의 소모”, “많은 기회비용 지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화를 통해 한반도 구성원들의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언급하고 있다.⁴⁵⁾

45) 국립통일교육원, “2021 통일문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1), p. 20.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위 담론만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에는 논리적 결함이 있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비판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반영할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담론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통일에 대한 태도는 통일연구원⁴⁶⁾에서 활용한 통일 지향성 척도 중 일부를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통일 지향성은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의 3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0.90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묻는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한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세계평화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에 기여하는 일이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등 4개 문항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마. 북한 주민과의 교류 의사

북한 주민들과 접촉 혹은 교류를 직접적인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인식이 변화한 사례는 존재한다. 김희경(2016.6)은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주민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인식과 태도를 보였고 한다.⁴⁷⁾ 특히, 한 참가자는 ‘익숙해지니까 탈북자를 대하기가 쉬워졌다’며 접촉을 통해 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⁴⁸⁾ 반대로, 다른 참가자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대부분 대충 물어 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⁴⁹⁾ 이렇듯, 북한이탈주민과의 대면 교류가 남한주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도 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의사를 살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석희, 강정인,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연구』 Vol.26 No.2 (2017), p. 3.

46) 박주화 외 5,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47) 김희경,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제2호 (2016), p. 554.

48) 위의 글, p. 549.

49) 위의 글, p. 548.

본다. “나는 북한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북한 주민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의향이 있다”, “나는 북한 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예: 언어, 생활양식)를 배울 의향이 있다”, “나는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 “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예: 온라인 캠페인)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 “나는 북한 주민들의 독특한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북한 주민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나갈 의향이 있다”의 7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0.95이다. 분석에는 7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변수별 연구결과

가. 종속변수: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 교류 의사

통일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는 <표4-1>에 제시하였다. 통일 지향성의 평균은 3.73이었다. 통일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세부적 근거로 민족주의 담론에 따른 필요성의 평균은 3.31, 보편가치 담론에 따른 필요성의 평균은 4.57, 통일편익 담론에 따른 필요성의 평균은 4.04이다. 이는 MZ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MZ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 민족주의 담론보다 보편가치 담론과 통일편익 담론에 더 크게 공감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 주민과 교류의사의 평균은 4.71이었다. 북한 주민과 교류의사의 평균이 통일 지향성보다 높은 결과는 MZ세대는 단일국가 형성으로서의 통일의 필요성은 지지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과의 교류에는 비교적 호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 주민과 교류 의사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 추상화된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표 4-1>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 교류의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류	평균	표준편차
통일 지향성	3.73	1.72
통일 필요성 - 민족주의 담론	3.31	1.92
통일 필요성 - 보편가치 담론	4.57	1.90
통일 필요성 - 통일편의 담론	4.04	1.66
북한 주민과 교류 의사	4.71	1.38

지금까지 다섯 개의 종속 변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2>에 제시하였다. 다섯 개의 종속 변수가 정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4-2> 종속변수 간 상관

	분류	1	2	3	4	5
1	통일 지향성		.75**	.64**	.74**	.45**
2	통일 필요성 - 민족주의 담론			.54**	.62**	.36**
3	통일 필요성 - 보편가치 담론				.58**	.46**
4	통일 필요성 - 통일편의 담론					.50**
5	북한 주민과 교류 의사					

주: ** p<.01

나. 국가정체성 및 민족정체성이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 교류의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체성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5-1>에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평균은 4.93, 남북민족공동체 정체성의 평균은 3.20이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은 높지만, 남북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결과는 MZ세대는 북한 주민을 내집단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5-1> 국가정체성 및 민족정체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류	평균	표준편차
국가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	4.93	1.24
민족정체성 (남북민족공동체 정체성)	3.20	1.47

사회정체성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은 <표5-2>에 제시하였다. 상관계수(r)를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모든 종속변수들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은 통일필요성, 민족주의 담론, 통일편의 담론, 북한 주민교류의사(각각 $r=0.49, 0.46, 0.48, 0.48$)와 뚜렷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북한 주민을 내집단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인식한다는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에 부합한다.

<표 5-2> 정체성과 종속변수 간 상관

분류	통일 지향성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	북한 주민 교류의사
국가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	.23**	.34**	.22**	.26**	.11**
민족정체성 (남북민족공동체 정체성)	.49**	.46**	.35**	.48**	.48**

주: ** $p<.01$

다. 고정관념 내용 모형에 따른 인식이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 교류의사에 미치는 영향

고정관념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6-1>에 제시하였다. 온정 인식의 평균은 2.84, 유능성 인식의 평균은 3.00이었다. 전반적으로 MZ세대는 북한 주민에 대해 온정과 유능성을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MZ세대는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며 경멸함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1> 고정관념적 온정 및 유능성 인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류	평균	표준편차
온정 인식	2.84	1.00
유능성 인식	3.00	0.95

고정관념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은 <표6-2>에 제시하였다.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모든 종속변수들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 인식은 북한 주민교류의사와 뚜렷한 상관($r=0.60$)을 보이며, 이는 판단 대상에 대한 온정 인식이 대상과의 소통을 촉진한다는 고정관념 내용 모형의 이론적 근거에 부합한다.

<표 6-2> 온정 및 유능성과 종속변수 간 상관

분류	통일 필요성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익 담론	북한 주민 교류의사
온정 인식	.34**	.23**	.29**	.42**	.60**
유능성 인식	.23**	.20**	.20**	.28**	.38**

라.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이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 교류의사에 미치는 영향

편견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7-1>에 제시하였다. 편견은 크게 정치, 경제 체제 등에 관한 상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과 북한 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상에 관한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7-1>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 평균 및 표준편차

분류	평균	표준편차
상위정치 영역 (정치, 경제 체제)	5.06	1.16
하위정치 영역 (문화, 생활상)	3.24	1.42

상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의 평균은 5.06,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의 평균은 3.24이었다. MZ세대는 상위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하위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중도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은 <표7-2>에 제시하였다. 상위정치 영역과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 모두 모든 종속변수들과 부적인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은 통일 지향성,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과 강한 상관을 보였으며(각각 $r=-0.92$, $r=-0.62$, $r=-1.00$), 통일편의 담론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을 보였다($r=-0.15$).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 및 북한 주민 교류의사 ($r=-0.50$)를 제외하고는 종속변수들과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상위정치 및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이 종속변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2> 편견과 종속변수 간 상관

분류	통일 필요성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	북한 주민 교류의사
상위정치 영역	-.92**	-.62**	-.10**	-.15**	-.32**
하위정치 영역	-.17**	-.08**	-.28**	-.25**	-.50**

주: ** $p<.01$

마. 독립변수 간 관계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8>에 제시하였다. 국가정체성과 상위 차원의 편견이 높은 상관 ($r=0.54$)을 보이며, 고정관념 내용 모형에 따른 온정이 민족정체성, 상위 차원 편견, 하위 차원 편견과 높은 상관 (각각 $r=0.43$, $r=-0.55$, $r=-0.48$)을 보였다.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있어 고정관념적 온정 인식이 가장 핵심적인 변수임을 보여준다.

〈표 8〉 독립변수 간 상관

	분류	1	2	3	4	5	6
1	국가정체성		.47**	.15**	.00	-.04	.05
2	민족정체성			-.20**	-.17**	.43**	.40**
3	상위정치 영역				.54**	-.55**	-.34**
4	하위정치 영역					-.48**	-.23**
5	온정 인식						.54**
6	유능성 인식						

주: ** p<.01

2. 종합 연구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 간의 교류의사 간의 관계

앞선 분석에서 통일 지향성,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 북한 주민교류의사 등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변수(종속변수)에 대해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상위 차원 편견, 하위 차원 편견, 온정 인식 및 유능성 인식 등의 심리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각각의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상관분석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9>에 제시하였다. 상대적 영향력은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각각의 종속변수별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표 9>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태도 및 교류의사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통일 지향성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	북한 주민 교류의사
국가정체성	.03	.18**	.10*	.12*	-.03**
민족정체성	.40**	.33**	.21**	.30**	.29
상위정치 영역	.13**	.04	.15**	.13**	.14**
하위정치 영역	-.07	.01	-.23**	-.12*	-.35**
온정 인식	.22**	.12	.16**	.30**	.36**
유능성 인식	-.03	.02	.02	.01	.04

주: ** p<.01, * p<.05

단순 상관분석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와 모든 심리적 변수 간 상관은 유의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일 지향성에는 민족정체성($\beta=0.40$), 상위 차원 편견($\beta=0.13$), 온정 인식($\beta=0.22$)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민족주의 담론에 가장 영향력이 큰 심리적 변수는 사회정체성으로, 민족정체성($\beta=0.33$)이 가장 컸으며, 국가정체성($\beta=0.18$)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보편가치 담론과 통일편의 담론은 유능성 인식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 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는 민족정체성과 유능성 인식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 변수가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온정 인식($\beta=0.36$)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V. 사회통합과 통일의 문제

종합적으로 이번 연구는 MZ세대의 ①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 의사 ②국가 및 민족정체성 동일시 정도와 이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 의사 ③상위정치 및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과 이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 의사 ④북한 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과 이에 따른 통일에 대

한 태도 및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 의사에 대해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요 결과는 <표10>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10> 연구 결과 요약

구분		연구결과
①	통일에 대한 태도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에 따른 통일 필요성 인식이 민족주의 담론에 따른 필요성 인식보다 높음
	북한 주민 교류 의사	통일 지향성은 낮더라도 북한 주민과의 교류 의사는 높음
②	국가/민족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은 높지만 민족정체성은 낮음
	사회정체성의 영향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통일 지향성 및 통일 필요성 인식이 높음
③	편견	상위 차원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하위 차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도적 태도를 보임
	편견의 영향	상위정치 및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이 낮을수록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에 따른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주민과의 교류 의사가 높음
④	고정관념적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온정 인식과 유능성 인식이 모두 낮아 경멸적 고정관념을 지님
	고정관념적 인식의 영향	북한 주민에 대해 온정 인식이 높을수록 통일 지향성과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에 따른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가 높음

1. 통일에 대한 태도와 민족정체성

우선, 통일에 대한 MZ세대의 태도를 살펴보면,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 중 보편주의(M=4.57)와 통일편의(M=4.04)에 따른 선호가 민족주의(M=3.31)에 따른 선호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Z세대의 인식이 크게 변화해온 것이다.⁵⁰⁾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정체성(M=4.93)은 높지만 민족정체성(M=3.20)은 낮았다.

통일부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추진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민족적 화해”, 「6·15 남북공동선언」

50) 박주화 외 5,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p. 19.

제1조는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제1조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 제1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적 원칙,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 재확인과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명시하여 민족담론은 남북 간 합의서 및 선언에서도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MZ세대 간에 ‘우리 민족’ 혹은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우리-그들’의 논리 속 외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과장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⁵¹⁾ 또, 이러한 인식은 통일부의 주장처럼 민족 간 세력과 갈등이 오랜 기간 민족정체성을 훼손시켰다는 우려와 이를 바로잡아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모든 정상급 남북합의서에서 명시한 민족정체성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수이지만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통일 지향성($\beta=0.40$) 및 민족주의 담론($\beta=0.33$), 보편가치 담론($\beta=0.21$), 통일편의 담론($\beta=0.30$)에 따른 필요성 인식이 높았다. 이는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통일과 북한 이해를 반영하여 무의식 속에 민족통합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⁵²⁾ “(이문화에 대한) 교육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개발을 위한 국제경험의 확대와 다문화 교육 진행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⁵³⁾ 통일교육에도 마찬가지이다.

51)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p. 168.

52) 박찬석,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천방안-평화 그리고 화합의 길찾기”, 『교육과정평가연구』 3(1) (2000), p. 2.

53) 정지연, 김영환, “이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문화교류 역량을 중심으로 본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시민교육연구』 제44권 제3호 (2012), p. 238.

2.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

집단 사이의 접촉을 통하여 상호이해에 도달하고, 편견을 없애거나 줄어든 계 할 수 있다. 김희경(2016)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 실제 참여한 참가자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남한 주민에게서 받은 상처가 오히려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⁵⁴⁾ 이처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집중화될수록 판단의 왜곡과 차별이 줄어든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는 전반적으로 낮지만(평균 M=3.73) 북한 주민과의 교류 의사는 높았다.(평균 M=4.71)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MZ세대가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인식을 개선한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같은 작은 통일의 시도가 꾸준히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남북이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통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⁵⁵⁾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남북 근로자들은 서로를 만나면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을 경험했다. 김유연(2020)의 연구는 개성공단 근무경험이 있는 남한 근로자가 북한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인내하기→이해하기→선물주기→부딪치기→신뢰연기⁵⁶⁾의 전략을 구상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주 대화해야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듯,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상호이해에 도달하고, 편견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또한, 과거 통일부는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했었다.⁵⁷⁾ 어느 시점에서 대북 접

54) 김희경,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542면

55) 정용상,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정책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2013), p. 1815.

56) 김유연,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 『통일과 평화』 제12권 제2호 (2020), p. 207-217.

57)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제외(중합2보)”, 『매일경제』 2020.08.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84505/>> (검색일: 2021.06.13.).

축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를 통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상 소요를 줄여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3. 편견의 영향

우리나라 MZ세대는 상위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평균 $M=5.06$) 하위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도적 태도를 보인다(평균 $M=3.24$). 나아가, 상위정치 영역과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이 낮을수록 보편가치 담론(각각 $\beta=0.15$, $\beta=-0.23$), 통일편의 담론(각각 $\beta=0.13$, $\beta=-0.12$)에 따른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주민과의 교류 의사가 높다고 것을 알 수 있었다.($\beta=0.14$, $\beta=-0.35$) 또, 이 경우 상위정치 영역 이슈와 하위정치 영역 이슈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민족정체성이 낮고(각각 $r=-0.20$, $r=-0.17$) 북한 주민에 대한 온정이 낮다(각각 $r=-0.55$, $r=-0.48$)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설적으로 상위정치 영역에서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집단 간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적 방법이다.⁵⁸⁾ 민족공동체 구성원이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강조되었을 때보다 상위정치 영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덜 방어적이고 협동적 선택을 한다.⁵⁹⁾ 예를 들어, 2017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요국 호감도 조사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10점 대의 호감도는 2018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 등을 경험하며 호감도는 40점 대로 상승했다. 참고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꾸준히 5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⁶⁰⁾

상위정치 영역에서의 호감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사회문화 교류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질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⁶¹⁾ 이를 위해 남북

58)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p. 169.

59) 위의 글, p. 169.

60) 이선화, 정한울,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9집 2호 (2019), p. 80.

61) 김희경,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p. 7.

합의서의 지속적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1971년부터 2018년까지 258건의 남북합의서가 채택되었고 667건의 남북회담이 있었다.⁶²⁾ 하지만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예컨대, 남북기본합의서는 합의한 남북 간 기구와 구성을 운영해보기도 전에 북핵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 되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⁶³⁾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구체적 법·제도적 기반을 통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했다.⁶⁴⁾ 따라서 사회적 가치와 이념이 단지 구호나 수사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속력을 가지는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⁶⁵⁾ 이처럼, 남북 간 합의서가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 범위)의 효력범위 구체화, UN에의 등록, 분쟁해결 절차 등을 마련하여 남북합의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고 대북정책 법률주의를 통해 통일정책의 투명성, 정당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⁶⁶⁾

4. 고정관념 인식

고정관념 내용 모형에 따르면, 온정과 유능성이 모두 높게 인식된 경우 사람들은 판단 대상에 대해 감탄(admiration)을 느끼게 된다. 또한 온정은 높지만 능력은 낮게 인식된 경우 연민(pity)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온정은 낮지만 능력이 높을 경우 사람들은 질투(envy)를 느끼며, 모든 차원이 낮은 경우에는 대상을 폄하하는 경멸(contempt)의 감정을 느낀다.⁶⁷⁾

62)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회담통계”,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b/e/usrCmsStat/List.do?tab=1&gn=1>> (검색일: 2021.06.13.).

63) 김동규, “4·27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선언의 조약성(性) 검토를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18, No.1 통권 제52호 (2019), p. 20.

64) 권형돈,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p. 44.

65) 윤민진,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아세아연구』 통권105호 (2001), p. 224.

66) 김동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p. 78.

67) 이병관, 노환호, 임혜빈, “공공 서비스 인식과 디자인 유형의 일치 여부가 소비자의 서비스 기대에 미치는 영향: 고정관념 내용 모형을 중심으로”, 『OOH광고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9), p. 31.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MZ세대의 인식을 살펴보면 온정 인식(평균 M=2.84)과 유능성 인식(평균 M=3.00)이 모두 낮아 경멸적 고정관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고정관념 또한 편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온정을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학생들에게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반편견 교육, 민족정체성 함양,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68,7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통일교육에서 학생 38.9%가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한 만큼,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은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⁶⁸⁾ 또한, 김유연은 남북 간 통일 이후에도 사회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우월감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대화와 교류의 주체로서 북한 주민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⁶⁹⁾

VI. 결론

이 논문에서는 사회통합의 이론과 우리정부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기능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문화 교류를 필수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어, 이러한 교류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통합을 저해하는 큰 요소 중 하나인 편견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동서독, 미국과 베트

68)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평화·통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발표”, 『통일부·교육부 보도자료』 2021.02.08., p. 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15>> (검색일: 2021.06.16.).

69) 김유연,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 p. 209.

남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 편견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는다. 독일, 미국, 베트남 등도 내전 그리고/혹은 통일 이후 편견이 일부 주민에 대해 이등국민 정서를 유발하는 등 사회통합에 혼란을 유발하였다. 예컨대, 동독 주민의 이등국민 정서는 통일 30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지 150년이 더 지난 시점에도 북부와 남부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베트남 또한 강제로 통합된 체제에 대한 남베트남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견의 근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국현(2003)은 사회적 학습, 인지적 기원 및 감정적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고,⁷⁰⁾ 사회문화적 학습은 언론과 교육이 북한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어 편견을 형성하고 심화시켰다고 하였다.⁷¹⁾

통일부는 “2030 세대가 통일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⁷²⁾ 이처럼 MZ세대는 향후 통일을 이끌어가고 마주할 세대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MZ세대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정체성, 편견 및 고정관념 인식 등의 심리적 변수가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향후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민족정체성,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적 온정을 식별하였고, 해당 변수가 통일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과 교류의사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일에 대한 태도와 민족정체성,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 편견의 영향, 고정관념 인식 4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한 MZ세대의 태도는 변화하여 민족정체성을 살펴보면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익 담론 중 보편주의와 통일편익에 따른 선호가 민족주의에 따른 선호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대

70)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p. 154.

71)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p. 154.

72) 통일부 정례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4.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445935>> (검색일: 2021.06.13).

한국 국민으로서 국가정체성은 높지만 민족정체성은 낮았다. 이를 통해 MZ세대 간에 ‘우리 민족’이라는 관념은 서서히 없어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우리-그들’의 논리 속 외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통일 지향성 및 민족주의 담론, 보편가치 담론 및 통일편의 담론에 따른 필요성 인식이 높았다.

또한, 북한 주민과의 교류의사에 관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는 전반적으로 낮지만 북한 주민과의 교류 의사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MZ세대가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인식을 개선한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금강산 등의 경제협력 사업을 통한 작은 통일이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편견의 영향에 관해 우리나라 MZ세대는 상위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하위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도적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상위정치 영역과 하위정치 영역에 대한 편견이 낮을수록 보편가치 담론, 통일편의 담론에 따른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주민과의 교류 의사가 높다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상위정치 영역 이슈와 하위정치 영역 이슈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민족정체성이 낮고 북한 주민에 대한 온정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설적으로 상위정치 영역에서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집단 간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협력과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관념 내용 모형에 따른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MZ세대의 인식을 살펴보면 온정 인식과 유능성 인식이 모두 낮아 경멸적 고정관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고정관념 또한 편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강구섭(2020)은 동서독의 심리적 갈등을 바탕으로 ①대등한 통일의 상대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 ②변화의 주체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 제고 ③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의 경험 축적이 통일교육에의 시사점이라고 주장한다.⁷³⁾ 김국현(2003)은 재범주화와 탈범주화, 상위범주의 활성화, 역할채택과 차별의 경험, 고정관념 불일치 모델과 정보, 집단 간 접촉과 협동학습, 공감 증진 활동 등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반편견 교육의 시사점이라고 주장한다.⁷⁴⁾

독일은 통일 이후 탈냉전과 세계화의 국제정치, 유로존이라는 경제 블록화 등의 변화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사회 혼란을 겪고 장기 침체를 경험하여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다.⁷⁵⁾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 현재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한국의 1인당 GDP가 OECD 2위로 상승할 수 있다는 등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왔다.⁷⁶⁾ 통일의 효과 추정이란 연구는 불가피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명확하다. 따라서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그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필요하다. 다만, 통일의 과정에서 상위정치 영역의 정치와 법의 통일은 하위정치 영역의 사회통합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거시적 수준의 국가 및 체제통합과 미시적 수준의 사회통합은 분리될 수 없으며 국가통합도 사회통합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에 도달할 수 있다.⁷⁷⁾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일어날 남북 사회통합에 주요한 장애요인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 주민에 대해 중단기적으로는 교육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을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사회통합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73)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독주민의 이등 국민정서 고찰 -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 p. 21-24.

74)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p. 168-172.

75) 양무진, “동서독 통일의 관점에서 본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쟁점”, 『현대북한연구』 제18권 제2호 (2015), p. 203.

76) 정규득, “통일은 과연 대박일까 희망적 보고서 잇따라”,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월간 마인더스 통일경제 2015년 7월호), <http://www.yonhapmidas.com/print/150724184238_633499> (검색일: 2021.06.13).

77)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271면.

[참고문헌]

▣ 국내 문헌

가. 단행본

- 국립통일교육원, “2021 통일문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1)
박주화 외 5,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나. 논문

-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독주민의 이등 국민정서 고찰 -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 『통일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2020).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2010).
권형돈,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① (2018),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통일정책연구』 Vol.23 No.2 (2003).
김동규, “4·27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선언의 조약성(性) 검토를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18, No.1 통권 제52호 (2019)
김동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통일과 법률』 통권 제45호 (2021),
김성중, “선입견의 문제에 관한 고찰: 가다머의 견해를 중심으로“, 『군사과학논집』 제63권 제2호 (2012).
김유연,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 형성 전략”, 『통일과 평화』 제12권 제2호 (2020).
김희경,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제2호 (2016).

- 박찬석,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천방안-평화 그리고 화합의 길찾기”, 『교육과정평가연구』 3(1) (2000).
- 송은희, 설진배, “독일의 사회통합 인식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2013),
- 양무진, “동서독 통일의 관점에서 본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쟁점”, 『현대북한연구』 제18권 제2호 (2015).
- 오기성, “통일한국에서 사회통합 연구”, 『평화와 종교』 제9호 (2020).
- 윤민진,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아세아연구』 통권105호 (2001).
- 이병관, 노환호, 임혜빈, “공공 서비스 인식과 디자인 유형의 일치 여부가 소비자의 서비스 기대에 미치는 영향: 고정관념 내용 모형을 중심으로”, 『OOH 광고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9).
- 이석희, 강정인,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연구』 Vol.26 No.2 (2017).
- 이선화, 정한울,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9집 2호 (2019).
- 이우영, 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북한연구』 19권 1호 (2016).
- 이한우,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남부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주민의 대응과 그 변용」, 『아세아연구』 제50권 3호 (2007).
- 정용상,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정책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2013),
- 정지연, 김영환, “이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문화교류 역량을 중심으로 본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시민교육연구』 제44권 제3호 (2012),
-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사회 및 성격』 Vol.33 No.4 통권 100호 (2019).
- 홍성이, “분단국통일국의 통합과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다. 기타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인식”, 『단절의 시대, 통일의식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79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2020.10.13.).

남경아, 최영인, 이민영 ”(1) 편견을 넘어서는 또 다른 방법, 휴먼라이브러리“, (희망제작소 소식, 2014.01.08.),

<<https://www.makehope.org/1-%ED%8E%B8%EA%B2%AC%EC%9D%84-%EB%84%98%EC%96%B4%EC%84%9C%EB%8A%94-%EB%98%90-%EB%8B%A4%EB%A5%B8-%EB%B0%A9%EB%B2%95-%ED%9C%B4%EB%A8%BC%EB%9D%BC%EC%9D%B4%EB%B8%8C%EB%9F%AC%EB%A6%AC/>> (검색일: 2021.06.13.).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제외(종합2보)”,

『매일경제』 2020.08.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84505/>>

(검색일: 2021.06.1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 MZ세대 첫 분석...시민 셋 중 한명,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 2021.08.10.,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0668>> (검색일: 2021.08.29.).

이학민, “[탐방기] 베트남 수평적 소통 문화와 한반도 통일의 지혜”, Daily NK, February 20, 2020,

<<https://www.dailynk.com/%ED%83%90%EB%B0%A9%EA%B8%B0-%EB%B2%A0%ED%8A%B8%EB%82%A8-%EC%88%98%ED%8F%89%EC%A0%81-%EC%86%8C%ED%86%B5-%EB%AC%B8%ED%99%94%EC%99%80-%ED%95%9C%EB%B0%98%EB%8F%84-%ED%86%B5%EC%9D%BC%EC%9D%98-%EC%A7%80/>> (Accessed June 13, 2021).

정규득, “통일은 과연 대박일까 희망적 보고서 잇따라”,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월간 마이더스 통일경제 2015년 7월호),

<http://www.yonhapmidas.com/print/150724184238_633499> (검색일: 2021.06.13.).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평화·통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발표”, 『통일부 교육부 보도자료』 2021.02.08., p. 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15>>
(검색일: 2021.06.16.).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회담통계”,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be/usrCmsStat/List.do?tab=1&gn=1>> (검색일: 2021.06.13.).

통일부 정례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4.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445935>>
(검색일: 2021.06.13).

“통일부 창립 52주년.. 이인영 “2030세대가 통일 주인공 될 것”, 『뉴스핌』, 2021.03.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02001013>> (검색일:
2021.06.05).

통일부 홈페이지, “설립목적”, <<https://www.unikorea.go.kr/unikorea/about/Introduce/establishment/>> (검색일: 2021.06.16).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조사발표”, 『통일연구원 보도자료』, 2020.06.25., p.1.
<<https://www.kinu.or.kr/brd/board/630/L/menu/399?brdType=R&thisPage=1&bbIdx=57635&searchField=&searchText=>> (검색일: 2021.06.16.).

Eric Harrison, “Olympics Spark Debate Over Georgia Flag’s Confederate Heritage”, Los Angeles Times, July 19, 1996,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6-07-19-mn-25755-story.html>> (Accessed June 14, 2021).

▣ 외국 문헌

Fiske, S. T., Cuddy, A. J. C., Glick, P., & Xu, J.,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6 (2002), pp. 87-902.

- Tajfel, H., Turner, J. C.,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IL: Nelson-Hall., 1986), pp 7-24.
- Turner, J.C. & Reynolds, K. J., “Self-Categorization Theory”,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2011), pp. 399-417.

최우수

4차산업혁명 발전에 따른 新남북경제협력 정책적 제언

- 남북 공동 빅데이터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정윤재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북한 빅데이터 산업 인식 현황
- IV. 북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 현황
- V. 남북 빅데이터 산업 협력의 문제점 및 필요성
- VI. 남북 빅데이터 협력 발전방안
- VII.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4차산업혁명 발전에 따른 新남북경제협력 정책적 제언

- 남북 공동 빅데이터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

지난 2011년 12월 17일, 북한 기관지 로동신문의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높이 경제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일으키자》라는 기사에 처음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구호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2012년, 실질적인 집권에 들어간 김정은은 북한 과학기술, 그 중에서 빅데이터 관련한 기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기술 변화가 명확히 포착되고는 있지만, 빅데이터 기술의 대대적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방대한 자료의 축적과 이를 위한 데이터 센터 설립 등에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남한 역시 4차산업혁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 때문이다.

또한 2016년, 개성공단의 폐쇄와 더불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이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협력은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어, 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의 전무한 경제협력 상황, 북한 당국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과 이에 대한 제한된 투자 현실, 남한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빅데이터 기술과 자본은 있으나 실천의 어려움, 남북 공동 데이터 유실 등은 곧 남북의 공동 빅데이터 관련 협력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자는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경제협력으로 남북 공동 빅데이터 교류협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우선 김정은 시기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관련 인식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북한 경제 논문지 <경제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 시기 집권 초기(2012~2015) 총 536개의 논문에서 70개의 논문이 관련 논문들로

채워졌다.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논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총 674개의 논문 중 79개의 논문이 관련 논문들로 채워지며,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관련 인식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의 대부분 내용은 빅데이터를 비롯한 지식경제산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속적인 반복 게재를 통해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인식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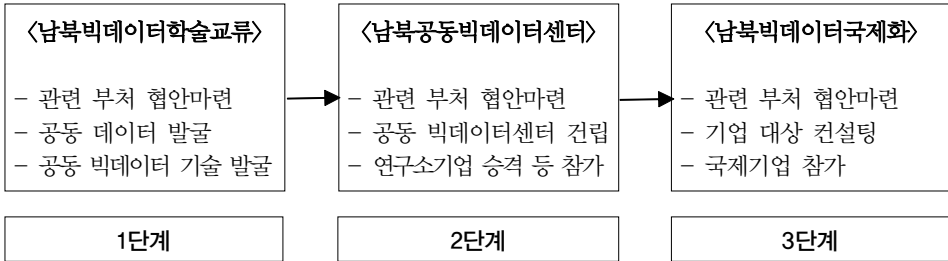
또한 김정은 집권 시기 초반의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단순 명령처리하는 기계화, 무인화 즉 2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여, 실생활에 편리함을 가지도록 하는 기술 확보 단계인 5단계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격의료체계, 자동번역기술을 비롯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기관들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 연구 역시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9년 헌법에서 정보화 등을 추가하였고,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등 하위 법안까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시설 투자 자원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부재하다. 또한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남한 역시 빅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가 존재한다. 빅데이터 산업 기술의 적용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의 중단에 따른 남북 공동 데이터 유실 가능성과 한반도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부재하여, 자연재해 예방이 불가능한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를 위해 남북 간의 공동의 빅데이터 관리 및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산업협력의 유형 중 기술협력의 유형에 따라, 본 연구자는 남북 공동 빅데이터 협력 방안을 3단계 로드맵으로 제시하였다. 대북제재 등의 현실 상황에 따라 빅데이터 협력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공유한 데이터 등을 조사하는 등의 학술 교류 협력 단계이다. 이후 대북제재 해제에 따라, 데이터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남북 공동

빅데이터 센터 (가칭) 건립이 요구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빅데이터를 원하는 기업 혹은 세계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제화, 산업화 단계로 발전 할 수 있다.

〈표 13〉 남북 빅데이터 교류 협력 로드맵



그러나 본 연구는 현 남북관계로 인해 실제로 북한 지역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인식과 발전 현황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정책적 제언의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현실성이 다소 약화된 한계점은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올해 2021년은 남북이 분단된지 76주년이 되는 해이다. 긴 세월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수백배에 이를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이는 곧 남북의 경제협력은 전무한 이 상황에서 공동의 산업혁명을 공동으로 대비하여, 기존의 남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남북의 경제협력의 물꼬를 틔와 동시에 새로운 경제협력의 유형을 생산할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남북의 경제협력에서 본 논문이 선행 연구 역할을 하여, 남북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이바지를 하기 바란다.

I.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지난 2011년 12월 17일, 북한 기관지 로동신문의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높이 경제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일으키자》¹⁾라는 기사에 처음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²⁾이라는 구호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새 세기 산업혁명이란, “현 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 지식과 경제의 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우리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현대화된 지식산업으로, 사회주의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한 경제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 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 높이 어버이수령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므로써 위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자.”라고 주장하며, 앞으로의 김정은 시기 과학기술의 정책을 새 세기 산업혁명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³⁾ 이는 곧 새로운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새로운 발전 전략임을 암시하는 구호였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고려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북한은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당의 정책 등을 교양하고 있다. 더군다나 새로운 정권에 새롭게 등장한 구호는 단연 그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12년, 실질적인 집권에 들어간 김정은은 북한 내부의 다양한 변화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는 특히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한 변화

1) 김정은 (2011),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높이 경제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p. 1

2) 새 세기 산업혁명이란, 북한식 표현을 빌리자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 지식경제의 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우리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현대화된 지식산업으로, 사회주의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한 경제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이며, 일종의 4차산업혁명을 뜻한다.

3) 김정은 (2011),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높이 경제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p. 1

발전을 촉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한 국가 경제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주창한 이후, 그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의 과업인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⁴⁾화를 유훈 과업으로 지정하며, 집권 초기, 그의 과학기술 성과 발전은 주로 북한 내 전 공장 및 설비 등의 CNC화, 즉 무인화 사업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온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제 75주년 열병식에서 드론을 활용한 화려한 열병식의 면모를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동신문은 삼지연시 인민병원의 원격의료봉사체계 구축,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원격교육대학 설립 등 상당한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앞다퉀 보도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집권 초기 김정일 시기 과학기술의 강조에 따른 CNC화를 강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발전이었다. 집권 초기 기계화, 무인화에서 현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편의 기술 발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북한 내부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변화가 명확히 포착되고는 있지만, 빅데이터 기술의 대대적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방대한 자료의 축적과 이를 위한 데이터 센터 설립 등에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 제재로 인하여, 평양과기대 등 관련 우수인력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있다.

한편, 남북의 경제교류협력 역사를 살펴보면, 주로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되고 여기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투입된 이른바 위탁가공교역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위탁가공교역에서도 주로 의류, 식기류, 신발류 등 비교적 낮은 단계의 산업인 경공업산업에 치중되어있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과학기술 중심의 4차산업 혁명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경공업산업의 남북경제협력이 과연 구미가 당기는 경제협력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4) CNC란, computer numerical control의 약어로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를 자동화하며, 이 기계에 컴퓨터를 삽입하여, 오동작을 줄이고 기계를 자동으로 조종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더불어 남한 역시 4차산업혁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등의 개발이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및 발전되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은 다소 늦은 경향이 있다. 지난, 2015년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를 선도할 산업으로써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19가지 산업⁵⁾을 선정 및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후,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통용되기 시작⁶⁾했으며, 알파고와의 바둑대전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차원의 인식과 지원이 시작되었다. 민간차원의 4차산업혁명 준비외에도 정부 부처의 4차산업혁명 도입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3월 통일부는 AI 기술,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북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정보포털을 글로벌화 시킨다는 목표를 담은 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의 폐쇄와 더불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이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협력은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어, 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폐쇄된 개성공단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자, 내부 기업들의 관련 중요 데이터 역시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남북의 전무한 경제협력 상황, 북한 당국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과 이에 대한 제한된 투자 현실, 남한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빅데이터 기술과 자본은

5) 19가지 산업은 다음과 같다.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실감형콘텐츠, 착용형스마트 기기, 지능형사물인터넷, 지능형반도체, 고기능무인기, 지능형 로봇, 빅 데이터, 융복합 소재, 심해저 해양플랜트,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웰니스케어,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멀티터미널 고압직류 송배전 시스템,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첨단소재가공시스템

6) 현재호 (2016), 4차 산업혁명 정의 및 거시적 관점의 대응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p. 8

있으나 실천의 어려움, 남북 공동 데이터 유실 등은 곧 남북의 공동 빅데이터 관련 협력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자는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경제협력으로 남북 공동 빅데이터 교류 협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신 경제협력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왜 빅데이터 산업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 시기의 빅데이터 산업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에 따라 앞으로 신 남북경제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어지는 1장 2절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분석하며, 2장 1절과 2절에서는 빅데이터 개념과 본 연구의 신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차용한 산업협력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논한다. 더불어 이어지는 2장 3절에서는 연구방법, 자료, 범위에 대하여 논하고, 3장 본론에서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빅데이터 산업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며, 끝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남북 빅데이터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2. 기존연구 검토

본 연구에 앞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접근과 해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의 주제는 주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변화 양상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첫 번째 유형은 북한의 지도자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변화 양상과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 양상을 정리한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김근배(2002)⁷⁾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를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7) 김근배 (2002),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변천, <과학기술정책> 통권 134호, p. 99-109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김일성 집권 초기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발전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조되는 과학적 사상의 함양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그의 논문에서 북한이 소련의 과학기술을 모방하는 정책에서 이후에는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자체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주체과학 정책으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세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선진과학 정책으로 변모한다고 밝혔다.

변상정(2010)⁸⁾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김정일 시기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는 경제 성장의 목적이 아닌 체제 안정과 선군정치를 표방한 내부 안보를 위해 변화하였다. 특히 그는 김정일이 집권 초기부터, 강성대국을 강조하며, 경제강국의 건설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구한 것과 달리 점차 실리적 분야의 과학기술보다 정치, 국방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강조 및 정책을 강조한 것에 대해 기형적으로 변형된 왜곡된 정책임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위 기술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첫 번째는 최근 김정은 시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망을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꾸준히 제기되는 연구의 한계점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한 지역의 변화는 꾸준히 추적 관찰하여, 그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하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한 시기를 특정지어 연구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북한 내부 자료를 중심으로 내재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 발간하는 내부 공식 문헌의 적실성과 객관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의 발전 성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의 변화를

8) 변상정 (2009),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체제안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p. 1-289

중심으로 앞으로 남북의 경제협력 방안 및 전망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내부의 공식문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문헌은 주로 북한 당국의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자세히 반복적으로 기술해놓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빅데이터 개념

빅데이터(Big Data)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⁹⁾를 의미한다.

빅데이터가 4차산업혁명의 큰 화두가 되기 시작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등장 배경은 ‘데이터의 부화의 증대’ 때문이다. 데이터의 용량 자체는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데이터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가 데이터화 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부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잡성이 증대한 탓에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 등장 배경은 ‘디스크의 성능 개선과 비용의 절감’ 때문이다. 부화가 증대된 데이터를 처리, 관리할 수 있는 디스크 등의 기기들이 성능은 증대된 반면, 비용이 낮아져, 관련 기초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져, 4차산업혁명의 큰 화두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배경은 ‘오픈소스’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서비스 하기 위하여 관련 소스들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일반 기업뿐만이 아닌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무료로 오픈소스를 통해 빅데이터를

9)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91554&cid=42171&categoryId=42183> (검색일 : 2021년 09월 09일)

분석 및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빅데이터가 4차산업혁명의 큰 화두로 등장할 수 있었다.¹⁰⁾

한편,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있다. 1단계는 빅데이터 수집단계로, 발굴하고자 하는 지식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필요 없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혹은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가공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빅데이터 처리 단계로 저장된 빅데이터를 저장, 수집, 관리, 유통, 분석 처리하는 일련의 기술이 확보되는 단계이다. 5단계는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저장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예측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 기술 단계가 이에 속한다. 마지막 6단계는 분석한 빅데이터들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시각화 하는 단계이다.¹¹⁾

2.2 산업협력 - 경제협력사업

산업협력(Industry Cooperation)이란, 개별 국가간의 산업에 상호 경쟁력을 보완할수 있도록 자본, 기술, 노하우 등의 투입물을 이전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출물의 교역을 촉진하는 제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 상호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교류를 의미한다.¹²⁾

산업협력은 개별 국가의 상호 위상, 즉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라 그 행태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간의 산업협력은 비교적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임한다. 이를 통해 상호 취약한 산업조정을 통하여 상대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산업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비교적 취약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 때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10) Itonair, “빅데이터 출현 배경 3가지,” <http://www.itonair.tv/빅데이터의-출현-배경-3가지/> (검색일 : 2021년 09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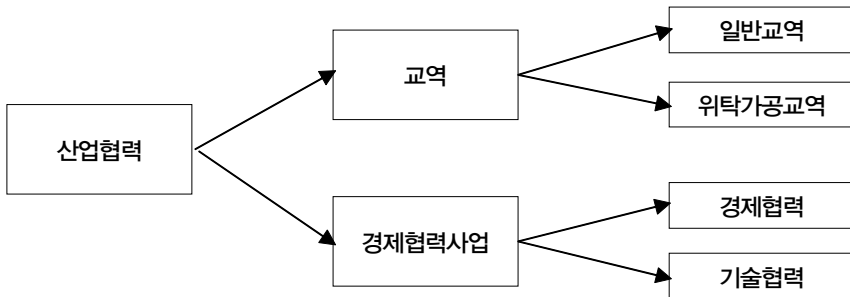
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빅데이터 활용단계에 따른 요소기술별 추진동향과 시사점, <방송 통신기술 이슈&전망>, 10호, p.4-14

12) 윤우진 외(1987), 한일산업협력의 현황 및 전개방향, <산업연구원>, p.26-27, 배도용 (2008),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방안, <산업경제연구> 제 21권 제1호, p. 113 재인용

분야에서 경쟁력확보를 이룩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의한 투자촉진, 현지 중소기업육성, 기술이전의 촉진에 역점을 두게 된다.¹³⁾ 2016년 공식적으로 폐쇄된 남북의 산업협력은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산업협력의 형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협력은 다시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교역이란, 좁은 뜻으로는 직접적인 물물교환, 넓은 뜻으로는 물품의 교환 및 매매를 포함하는 무역의 동의어¹⁴⁾로, 국가 간의 상품 거래 행위를 뜻한다. 교역은 다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으로 분류된다. 일반교역이란, 농림수산물을 중심으로 국가간의 매매, 교환 등의 무역을 의미한다. 반면, 위탁가공교역이란, 필요한 원부자재를 타국에 반출하고, 타국에서 이를 가공한 다음 가공비를 지불하여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상대국에 반입하는 교역형태를 의미한다.¹⁵⁾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의 개성공단사업과 같이 상호 공동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의 물리적 장소를 건설 및 운영, 생산하는 사업이 있으며, 상호간의 특정 기술을 협력하는 사업이 존재한다.¹⁶⁾

<표 1> 산업협력의 분류, 배도용 (2008),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방안, <산업경제연구> 제 21권 제1호, p. 113 재인용



13) 위 논문, p. 113

14) 네이버 지식백과, “교역,”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5519&cid=40942&categoryId=31864> (검색일 : 2021년 09월 15일)

15) 배도용 (2008),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방안, <산업경제연구> 제 21권 제1호, p. 114

16) 위 논문, p. 114-116

2.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2.3.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인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왜 빅데이터 산업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즉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인식과 인식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한 1차 자료는 북한의 경제 연구지 <경제연구>이다. 경제연구에 대해 북한은 “맑스-레닌주의 경제이론의 일반적 원칙과 그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현명한 경제정책과 그의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이론화한 논문들을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체 근로자들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천명한 경제과학논문들을 게재”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제기되는 실천적인 경제문제들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경제연구의 논문 투고자는 “경제학자들과 교육자 및 경제기관 실무일군들과 광범한 독자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 독자 계층은 “경제관계일군, 과학 실무일군들을 포함한 경제학도”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⁷⁾

일반적으로 북한 연구를 위해 1차 자료로써, 주로 통용되는 노동신문, 신년사 등의 1차자료는 북한 당국의 정책과 방향에 관한 성과와 선동적 자료만 기술되는 한계로 인하여, 북한 내부의 실질적 변화, 배경 등을 소상히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북한의 대외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 내각의 기관지 민주조선 역시 대외선전을 위한 일방적 선전 기사들만이 다뤄지고 있다. 반면, 경제연구의 경우 북한 당국의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시행착오와 배경, 과정, 인식 등을 타 문헌에 비해 자세히 기술해놓은 점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소상히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질문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 1차 자료로 선정하였다.

17) 양문수 (2009),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12권, p. 9

더불어 <경제연구>에 기술된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성과의 적실성을 판단하고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성과 등을 고찰하였다. 문헌에서 기술된 성과를 물리적 매체와 수단을 통하여 그 적실성을 판단하여야 그 성과를 인정할 수 있지만, 현 남북관계의 한계로 인해 북한의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의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동당의 정책과 이에 대한 성과를 소개하는 로동신문을 통해 그 적실성을 판단하였다. 로동신문에 보도된 사진의 경우 고화질의 사진을 추출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이들의 보도를 재보도 하는 조선신보 및 우리동포끼리 웹 홈페이지 및 국내 언론사의 사이트 사진을 2차자료로써 활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국가 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소상히 밝히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잦은 개헌을 단행하고 있다. 그의 집권 시기 동안 총 3번의 개헌을 한 사회주의 헌법은 최근 2019년 빅데이터와 관련한 변화가 돋보여, 이에 대한 변화와 그 의미 등을 소상히 밝히고자 <사회주의 헌법>을 1차자료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현황 및 북한의 내부 관련 법안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국내 법제처 자료를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북한 자료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 연구, 과학 기술 선행 연구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 시각을 설정하였다.

2.3.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연구 주제 및 연구 질문을 입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범위는 김정은의 실질적 집권의 시작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의 연구 범위는 김정일 시기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는 타 선행 연구를 통해 소상히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 시기의 빅데이터의 거시적 변화 및 성과는 국방 관련 분야에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본격적인 북한의 빅데이터 관련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거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시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주 1차 자료인 <경제연구>를 비롯하여 관련 발전 성과, 인력 양성, 법안 등 모든 자료 역시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빅데이터를 주로 ‘과학기술’, ‘지식경제’, ‘CNC’와 같은 단어와 함께 논하거나 관련 성과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관련 인식, 발전성과,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할 때, 전술한 단어가 함께 언급된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3.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질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택한 연구 방법은 내재적 접근법에 의한 북한의 1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 분석 방법을 차용하였다. 북한의 빅데이터 발전 현황을 직접 연구하는 현장연구는 남북의 특수적 상황으로 인해 제한되어있는 한계로 인해 문헌 분석 방법을 차용하였다. 물론 북한의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공식 문헌의 경우 북한 당국의 사상의 선전 및 선동에 가까운 논설이 많으며, 객관적인 지표와 이에 따른 성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인해, 북한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그 적실성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발전 단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닌 북한 내부 당국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 발전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예측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우선 문헌분석방법 중에서도 본 연구는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모두 차용하였다. 양적방법의 경우 <경제연구>의 논문 중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 관련 단어인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를 핵심어로 설정하여, 이와 관련한 논문을 우선적으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1,210개의 논문 중 149개의 논문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본 연구의 연구 범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기의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인식과 주안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질적

방법의 경우 <경제연구>의 빅데이터 관련 단어인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 논문들에서 북한 당국이 인식을 강조하게 된 배경을 언급한 문장을 카테고리화 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 당국이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부차적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로동신문의 관련 성과 보도를 분석하였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디지털검색자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자료’, ‘원격’, ‘CNC’, ‘지식경제’ 등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핵심어로 설정하여 검색하였고, 이에 대하여 성과를 보도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빅데이터 기술 발전 6단계에 따라 이들의 기술 단계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관련 법안과 인력 양성 등의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발전현황 자료는 선행연구 등 2차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산업협력의 기술협력단계를 바탕으로 남북의 신 경제협력방안인 남북 빅데이터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Ⅲ. 북한 빅데이터 산업 인식 현황

본 장에서는 김정은 시기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산업 인식에 대하여 분석한 바를 논하고자 한다. 전술하였지만, 빅데이터와 관련한 단어인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를 핵심어로 설정하였다. 주로 이와 같은 주제 논문에서 빅데이터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 방법론 중앙적 분석을 통해 <경제연구> 내의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와 관련한 논문들을 추출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시기 집권 초기(2012~2015) 총 536개의 논문에서 70개의 논문이 과학기술과 지식경제와 관련한 논문이었다.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논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총 674개의 논문 중 79개의 논문이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에

대해 서술한 논문이었다. 집권 초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연구 내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의 논문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김정은 시기 북한의 주 정책과 방향이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경제연구의 경우 주로 첫 번째 논문과 두 번째 논문은 주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교시와 이에 대한 선전을 담은 논문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논문의 경우 논문의 제목 혹은 논문 저자의 이름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김씨 일가의 교시 이후 바로 언급되는 논문이 2012년부터 2019년 최신포까지 모두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와 관련한 논문이었다. 이는 곧 북한 당국이 과학기술과 지식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과 강조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2〉 <경제연구> 관련 논문 언급 횟수(2012 ~ 2019) 필자 작성

연도	언급 횟수	연도	언급 횟수
2012	2012, 1 : 32개 중 2번	2016	2016, 1 : 40개 중 8번
	2012, 2 : 31개 중 4번		2016, 2 : 41개 중 4번
	2012, 3 : 33개 중 5번		2016, 3 : 42개 중 6번
	2012, 4 : 33개 중 8번		2016, 4 : 44개 중 3번
2013	2013, 1 : 34개 중 4번	2017	2017, 1 : 44개 중 4번
	2013, 2 : 33개 중 1번		2017, 2 : 42개 중 X
	2013, 3 : 34개 중 7번		2017, 3 : 42개 중 6번
	2013, 4 : 34개 중 4번		2017, 4 : 48개 중 5번
2014	2014, 1 : 35개 중 4번	2018	2018, 1 : 45개 중 6번
	2014, 2 : 32개 중 5번		2018, 2 : 43개 중 7번
	2014, 3 : 33개 중 6번		2018, 3 : 42개 중 6번
	2014, 4 : 35개 중 1번		2018, 4 : 38개 중 6번
2015	2015, 1 : 33개 중 7번	2019	2019, 1 : 41개 중 10번
	2015, 2 : 33개 중 4번		2019, 2 : 41개 중 2번
	2015, 3 : 35개 중 1번		2019, 3 : 40개 중 4번
	2015, 4 : 36개 중 7번		2019, 4 : 41개 중 2번
계	536개 중 70번 언급	계	674개 중 79번 언급

[핵심어] : 과학기술, 지식경제, 과학, 지식, 전민인재기술화, CNC, 대자료 등 한편, 김정은 시기의 북한 당국은 어떤 사유, 배경에 의해 빅데이터 관련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를 강조하고 있을까? <경제연구>에서 나타난 빅데

이더 관련 주변 단어인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 논문들을 질적으로 그 요인과 이들의 현재 인식에 대해분석해보았다. 이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하자면, 이는 곧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대내적 요인은 내부의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효과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인이며,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시대 경제발전의 기본추세입니다.”¹⁸⁾

이들의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관점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곧 내부의 공장 및 기초 경제 생산력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로 인한 생산력 발전이 곧 내부의 경제 활성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내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써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연구에서의 연구자들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로동이 더욱더 지능화, 기술화되어가는 과정은 정보설비들이 착안도입되고 기계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이 효율높은 정보기술공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정보설비는 사람의 지적로동기능의 일부를 대신하는 고급한 지능설비이며 정보설비로 장비된 생산공정은 사람의 직접적 참가없이도 물질적부를 생산하게 한다. 이것은 산로동의 효과성, 로동생산능률을 비상이 높게 한다. 현실적으로 정보설비로 장비된 생산에서 로동능률은 기계기술로 장비된 생산에 비하여 몇십배 지어 몇백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로동의 지능화, 기술화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중요요인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¹⁹⁾

18) 음철 (2012), 과학기술지식의 로화방지는 지식경제시대 사회적생산의 효과성제고의 중요 담보, <경제연구>, 루계 제 154호, p. 14

19) 박기영 (2012),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로동의 지능화, 기술화, <경제연구>, 루계 제 156호 p. 15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의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과 근로의 효율을 드높여 내수 경제의 활성화에 포함과 동시에 이러한 활성화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기타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대내적 요인은 사회주의 강국 완성이라는 목표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가 곧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나라가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된 조건에서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강국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와 과학기술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는데 큰 힘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²⁰⁾

북한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강국으로의 달성의 하위 목표으로써,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경제강국 달성을 사회 내부적으로 달성해야하는 최대 과제로써 당원 및 인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하면, 북한 내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정치사상강국을 달성하였으며, 핵을 비롯한 비대칭전략무기의 개발 성공으로 인해 군사강국을 달성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주의 강국의 완성 중 남은 사안은 오직 경제강국이다. 그리고 경제강국의 달성은 곧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의 발전을 통해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의 발전을 통한 경제 강국 완성을 통해 사회주의 강국 완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최근 호에서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20) 김철남 (2012),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의 본질과 합법적성, <경제연구>, 투계 제 157호, p. 8

“우리 공화국이 병진의 기치 높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나라의 인적, 물질,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²¹⁾

세 번째 대내적 배경은 인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과업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거하면,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를 통한 발전이 기술 혁신을 불러일으켜, 기술이 곧 인민들의 육체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인민들이 비로소 힘든 노동의 해방을 불러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로동이 더욱더 지능화, 기술화되어가는 과정은 정보설비들이 창안도입 되고 기계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이 효율높은 정보기술공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정보설비는 사람의 지적로동기능의 일부를 대신하는 고급한 지능설비이며 정보설비로 장비된 생산공정은 사람의 직접적 참가없이도 물질적 부를 생산하게 한다. 이것은 산로동의 효과성, 로동생산능률을 비상이 높 이게 한다. 현실적으로 정보설비로 장비된 생산에서 로동능률은 기계 기술로 장비된 생산에 비하여 몇십배 지어 몇백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로동의 지능화, 기술화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중요요인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²²⁾

즉, 과거 2차, 3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발된 기계는 빠른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완전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 하는 새 세기 산업혁명, 즉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기술이 고도로 지능화

21) 안명훈 (2018),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 <경제연구> 루계 제 180호, p. 5

22) 박기영 (2012),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로동의 지능화, 기술화, <경제연구>, 루계 제 156호, p.15

됨에 따라, 모든 기계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것을 강조하고 육성해야만이 비로소 북한 내부의 인민들의 노동의 완전한 해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산업은 사람들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하는 데서도 우월한 산업 부문이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인간해방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순차적인 혁명과정이다.” 23)

북한은 1948년 국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의 열악한 노동 해방을 혁명의 과업으로써 주창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4차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인 과학기술 및 지식 기술의 발전이 곧 프롤레타리아인 인민들의 노동을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대내적 요인은 인민들의 물질적인 생활 향상이라는 과업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의 발전이 곧 생산력 발전을 추인하여,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된 소비품 등의 개발을 통해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식경제시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나서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로동의 효과성을 높여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러운 것 없는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과 관련된다.” 24)

북한 당국은 김정은 집권 시기에 접어들며, 국가의 구호 중 하나로써 우리나라제일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또한 이 구호의 하위 목표로써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보장토록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23) 김란영 (2012), 지식산업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루계 제 156호, p.17

24) 방학철 (2012), 지능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리용하는 것은 지식경제시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루계 제 155호, p.19

지식을 발전시킴으로써, 힘든 노동의 해방과 더불어 보다 더 발전된 소비, 생산품등의 개발을 통해 물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최신 호의 경제연구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친환경 생태계 조성 때문이다. 김정은 시가 북한은 실용적인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하위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친환경 생태계 조성이다. 특히 김정은은 실용적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의 수준, 세계의 기준에 맞출 것을 내부로 하여금 다그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생태계조성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역시 김정은이 중요한 사안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산업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녹색산업이다..... (중략)...지식자원은 그 활용과정에 폐물이 나오지 않으며 지식자원을 아무리 개발리용하여도 생태계의 불균형을 조성하지 않는다. 지식자원은 도리어 환경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리용되어 환경산업을 창조한다. 지식산업을 발전시키면 현시기 지구적인 문제, 전인류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환경파괴를 막고 인간에게 유리한 생태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²⁵⁾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산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천연자원이 아닌 지식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발 및 발전에 따른 자원의 폐기물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식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전 세계의 막중한 사안 중 하나인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들은 김정은 시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의 발빠른 발전의 강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 강조의 배경은 대내적 요인만이 아닌 대외적 상황 역시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중 첫 번째 대외적 요인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25) 김란영 (2012), 지식산업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루계 제 156호, p. 17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론 우주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지배영역은 날을 따라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는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은 지난 세기에 비할바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전체 인민이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하는 것은 하루 빨리 지식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매우 절박한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²⁶⁾

이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과업은 북한 당국만이 아닌 전세계의 주요한 관심 사안이며, 이에 뒤처지지 않고,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 발전의 선도를 통하여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에 발맞추는 것이 곧 실용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과업임을 강조한 김정은은 과학기술의 강조 역시 세계의 추세에 맞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대외적 요인은 지식 자원의 절약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로, 지식산업은 자원의 제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 부문이다. 지식자원은 여러 생산단위들이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반복하여 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지식자원은 그 활용과정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부화된다.”²⁷⁾

즉, 지식산업의 자원의 특징이 곧 과거의 천연자원과 달리 소모되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오히려 자원이 풍부해지기에 자원에서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천연자원은 한번 활용하면, 폐기 처리 되기 때문에 자원의 순환성 및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로가 공유하면서 또 다른 자원을 생산하는 지식

26) 한정민 (2019),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루계 제 182호, p.9

27) 김란영 (2012), 지식산업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루계 제 156호, p. 16

자원은 천연자원과 달리 자원의 순환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절약으로 인해 곧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절약된 자본을 지식경제에 투자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며, 이들은 지식경제의 빠른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대외적 요인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게 북한의 경제 연구자들은 경제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타 요인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제국주의자들이 <고도기술무기>와 <물질기술적우세>로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첨단기술개발과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지식경제강국건설투쟁에서는 그 주체를 바로 세우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애로와 난관이 조성된다고 하여 경제기술 발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실현하려 한다면 언제가도 진정한 강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경제기술적으로 예속될 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의존함이 없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첨단연구기지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첨단과학 기술들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그렇게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였지만 첨단과학 기술의 주력부대로 런하기계집단을 꾸리고 cnc 기술을 연구개발하였으며 그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경제전반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경제기술분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주의를 타파하고 최첨단을 돌파하여 경제강국을 이룩하는 최상의 방도는 주체적립장에서 자력갱생하는 길이다.”²⁸⁾

이들은 애로와 난관의 조성이라는 주장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 산업 육성은 곧 국제사회로의 귀속을 의미하기에 주의하고 있다. 그 이유인 즉슨,

28) 리동수 (2012), 새 세기 산업혁명과 그 주요특징, <경제연구>, 루계 157호, p. 6

기존의 경제 산업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들은 해외의 자원과 해외 과학기술 및 지식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외 경제와 기술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외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시장으로 둘러싸인 불리한 조건속에서 진행되는 어려운 혁명투쟁이다.....세계적인 경제파동과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속에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한다. 과학기술은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생명선이며 과학기술의 위력이자 곧 자력자강의 위력이다.....자립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출로는 설비와 자재, 원료와 연료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우리의 힘과기술에 기초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자면 우리의 과학기술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야한다.”²⁹⁾

이들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들이 처한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성장은 곧 자력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이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이것이 곧 내부의 자체적인 공장 설비 등을 현대화시키고, 이곳 등지에서 개발된 원료와 연료 등 역시 내부에서 생산됨으로써 온전히 경제를 자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들은 지속적으로 현재의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북한 당국이 빅데이터와 관련한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를 강조하고 이를 집중 투자하게 된 배경을 소결하자면, 대내적으로 내부의 경제성장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제 사회의 압박 속 자립적, 절약적 경제 성장들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이 곧 과학기술과 지식경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와 같은 목표의

29) 김경일 (2018),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요과업, <경제연구>, 루계 제 179호, p. 7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의 발전과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관련 산업의 육성에 굉장한 관심이 쏠려있으며, 당국차원에서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여진다.

IV. 북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 현황

본 장은 김정은 시기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산업 발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물리적인 발전 성과, 관련 법,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1. 북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성과

앞서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집권 초기 그의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전국의 공장 및 시설 설비등을 현대화하는데 집중하였다. 그중에서도 김정일의 주요 사업이었던 CNC화와 무인화에 주력을 쏟았는데, 지난 2013년 6월 24일 김정은은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 하며, 이 곳의 무인화된 시설 설비 성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 공장은 “CNC화의 가장 높은 단계인 무인화를 실현할데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구상에 따라 꾸려진 무인화 직장은 기계제품의 가공, 검사,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컴퓨터로 조종관리운영³⁰⁾” 되고 있다며, 그 진가를 보도하였다. 이렇듯 로동신문의 빅데이터와 관련한 김정은 집권 초기의 보도에 따르면, 이 당시 과학기술 성과는 주로 국방과학기술 및 공장 등지의 시설의 현대화,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무인화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단순한 명령어 처리를 통해 기계화 및 무인화하는 빅데이터의 발전 2단계에 머물러있다고 볼 수 있다.

30) 김정은 (2013),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p. 4



[그림 1] 김정은 CNC화 공장 현지지도
https://www.chosonsinbo.com/2013/06/kcna_130624-2



[그림 2] 김정은 CNC화 공장 현지지도
https://www.chosonsinbo.com/2013/06/kcna_130624-2/

그러나 이후, 점차 지식 관련 산업,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2013년을 분기점으로 북한 당국은 빅데이터 발전의 5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는 관련 정보들을 빅데이터화하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하여 머신러닝 등의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즉, 기계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사람의 뇌가 데이터를 처리하듯, 직접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머신러닝,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한 AI (인공지능), 자동번역, 원격의료 등이 있다.

우리의 원격의료체계와 유사한 북한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는 지난 2013년에 그 성과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을 통해 그들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도입한 먼거리수술지원체계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데 기초하여 상급병원의 유능한 외과전문의들이 아랫단위의 수술환경과 조건을 원격으로 감시, 조종하면서 직접수술지도를 줄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형식의 첨단의료봉사체계³¹⁾”라고 설명하며, 순천시 인민병원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각 상급-하급병원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듭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객관적으로 이들의 기술의 적실성을 측정할 수 없으며, 원격의료체계가 도입된 것은 평양이 아닌 지방이라는 점과 지방의 낙후된 의료 시설로 인해 이와 같은 의료체계가 도입된 점은 한계점으로 꼽히지만, 이들의 성과 자체는 가히 주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1) 김정은 (2013), 먼거리의료봉사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로동신문, p. 1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은 빅데이터 기반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였는데, 지난 2014년 11월 4일 북한은 매년 개최하는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장을 개최하며, 기계번역, 문자인식 프로그램, 생산공정의 CNC화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농업 생산분야에서 농작물의 재배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해주는 기술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붉은별의 최신호를 공개하며, 이들의 지식기반 산업의 성과³²⁾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집권 초기 CNC화 및 국방과학의 성과에만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매년 개최하는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를 통해 지난 2019년 북한은 AI 기술을 선보였다. AI가 조종하는 로봇축구경기장의 모습을 비롯하여, 전국의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의 음성인식, 문자인식, 기계번역 등의 지식기반 성과를 선보였으며, 특히 정보와 관련한 성과들을 대거 공개하였다. 우리의 스마트폰 SIM 카드와 유사한 <울림> 칩카드와 우리의 안면인식체계와 유사한 <눈빛 얼굴인식출입관리체계, 우리의 통합검색망과 유사한 <내 나라> 홈페이지 통합검색체계³³⁾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2019년에 들어와서는 관련 물리적 성과만이 아닌 연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연구 성과 역시 돋보이고 있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보과학 2019년 제65권 제4호에 ‘망(네트워크) 자료 흐름에서 중간결과를 위한 자료형식 선택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논문이 수록되기도 하였다. 해외서적과 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³⁴⁾

32) 김정은 (2014),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우리의 프로그램기술 제25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노동신문, p. 2

33) 김정은 (2019), 수자경제를 지향하는 정보화열풍을 더욱 고조시키자 - 전국 정보화성과전람회 2019를 보며, 노동신문, p. 1

34) 강진규, “북한이 대자료 분석에 하둠을 활용하고 있다,” NK경제,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4> (검색일 : 2021년 09월 18일)

더불어 2020년에는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표했다. 그들은 우선 악성프로그램의 작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기계모래통(가상머신 샌드박스)에 의하여 악성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작동 특성을 분류했다고 한다. 이를 이후 빅데이터화 하였다. 이후 K-NN(K-Nearest Neighbor) 방법, SVM(Support Vector Machines) 방법, 결정나무(Decision Trees) 방법, 자유나무(Random Forests) 방법 등과 같은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 기계 스스로가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인지 사전에 분류하여 차단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³⁵⁾

<표 3> 김정은 시기 북한 빅데이터 관련 산업, 기술 발전 현황

분야	발전성과
CNC화	자율이동로봇 개발, 무인화 공장, 3D 프린터 등
정보통신	양자암호통신, 영어·중국어·조선어 자동번역기술, 바코드기반 결제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AI)	언어번역 프로그램, 음성인식, 문자인식, 공정효율화, 게임 등 다방면에서 활용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홈, 지능스피커, 빅데이터클라우드 : 거대자료 분석기술프로그램, 구름(클라우드) 계산체계
교통	평성 무궤도전차 주행위치, 거리, 속도, 전력모니터링 체계 소개
교육, 의료	원격교육, 원격의료, 증강현실 AR, VR 이용 교육
에너지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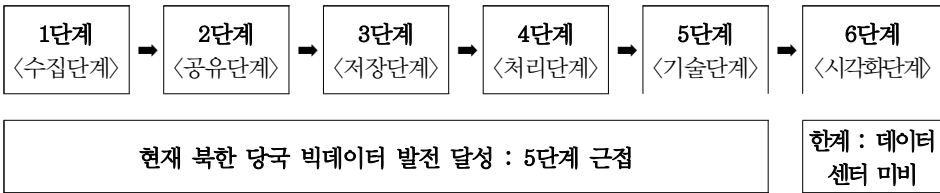
[출처 : 임을출 (2019), 북한의 4차 산업혁명 : 대응전략, 추진방식과 성과, <동아연구>, 77권, p. 26]

로동신문 내용의 적실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이들이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초반의 국방과학기술 및 시설 설비 등에서의 현대, 무인화의 기술에서 머물렀던것과는 달리 현재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산업 기술은 다량의 정보들을 빅데이터화하여, 이를 저장하고, 빅데이터화 된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실질적인 생활에서 북한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기술로까지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35) 강진규, “북한 머신러닝 기반 악성코드 분류법 개발,” NK경제,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검색일 : 2021년 09월 18일)

기술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건립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내부의 관련 보도도 전무하며, 해외의 소식지에서도 관련 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이 단계까지 이룩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김정은 시기 북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 단계 및 한계, 필자 작성



4.2. 북한 빅데이터 관련 법안 현황

한편 김정은 시기 빅데이터 발전은 북한의 헌법인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다음은 김정은 시기 중에서도 2019년에 단행된 개정본을 중심으로 이전 헌법과 비교하여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2장 경제 26조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경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로써 새로운 ‘정보화’ 목표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의 내수 경제를 정보 관련 산업으로 육성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표 5> 사회주의 헌법 중 관련 법안 변화, 필자 작성

연도	장	내용
2009	제 2장 경제 26조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³⁶⁾
2019	제 2장 경제 26조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³⁷⁾

더불어 북한은 제 2장 경제 27조의 개정을 통해 기술혁명을 사회주의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지속적인 강조를 하는 한편, 과학기술력을 국가의 중요 거점 자원으로 설정함으로써, 2019년을 기반으로 국가의 중요 거점 산업은 과학기술력임을 대대적으로 공표하였다.

〈표 6〉 사회주의 헌법 중 관련 법안 변화, 필자 작성

연도	장	내용
2009	제 2장 경제 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³⁸⁾
2019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³⁹⁾

위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2019년 헌법 제 3장 문화 40조에서는 인민들의 문화 혁명을 주요 과업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온 인민과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인테리화를 삭제하고, 전민과학 기술인재화를 추가 수정하였다. 이는 곧 북한 당국이 전 인민의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었다.

〈표 7〉 사회주의 헌법 중 관련 법안 변화, 필자 작성

연도	장	내용
2009	제 3장 문화 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⁴⁰⁾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⁴¹⁾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이외에도 북한당국은 2019년 사회주의헌법 제 3장 문화 46조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개정을 살펴보면 과거의 사회주의 헌법은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기술자와 전문가를 육성시키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2019년에는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해야함을 강조한다.

<표 8> 사회주의 헌법 중 관련 법안 변화, 필자 작성

연도	장	내용
2009	제 3장 문화 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42)
2019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43)

또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헌법 제3장 문화 50조에서도 과학기술 관련 개정을 도모하였다. 과거 헌법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 표면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2019년의 개정을 통해서는 과학기술 연구 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2019년을 계기로 헌법을 통해 북한 대내외 사회로 하여금 과학기술 관련 변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와 강조를 밝혀내었으며, 관련 변화가 상당히 두드러진 한 해였다. 지식경제, 즉 빅데이터 발전과 관련한 헌법의 주요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얼마나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중요시 하는 지를 인식적 차원에서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표 9> 사회주의 헌법 중 관련 법안 변화, 필자 작성

연도	장	내용
2009	제 3장 문화 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44)
2019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45)

사회주의 헌법에서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하위 세부 법안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 육성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관련 법안으로는 현재까지 체신법, 과학기술법, 발명법, 저작권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법, 전파관리법, 컴퓨터망관리법, 전자인증법, 유기산업법이 제정되어있다. 1990년대 말 체신법, 과학기술법, 발명법을 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관련 법안의 기초를 마련한 이후,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등의 하위 세부 법안을 마련하여, 내부의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전술한 관련 법안 중 빅데이터와 가장 밀접한 몇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주로 컴퓨터, 전기 관련 법안들인데,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주요 수단이 컴퓨터이며, 컴퓨터의 전원 공급이 전기이기 때문에 관련 기초 법안을 사전에 마련한 듯 하다. 주요 내용은 기본의미와 등록 및 가입 절차,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방법, 지도 통제 및 형사처벌 관련 조항들로 구성되어있다. 관련 지도 통제와 형사 처벌이 있어 완전한 빅데이터 관련 발전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만을 다룬 법안 자체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표 10>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이춘근, 김종선, 남달리 (2014),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정책연구>, 28호, p.12 재인용

장	제목	특징
제1장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의기본	- 저작권 보호를 통한 S/W발전 - 외국 S/W 보존
제2장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등록	- 접수 3개월 내 심의, 바이러스검사 - 공개 6개월 내 이의신청 - 외국 도입 S/W도 심의, 등록
제3장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저작권	-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보호 - 미성년도 저작권 소유 가능
제4장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 무기한 인격적 권리 보호 - 재산권 보호 30년, 20년 연장 가능 - 교육/법기관, 무상 S/W는 자유이용
제5장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지도통제 강화 - 미풍양속 저해, 불법행위 엄단

<표 11> 컴퓨터망 관리법

이춘근, 김종선, 남달리 (2014),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정책연구>, 28호, p.15 재인용

장	제목	특징
제1장	컴퓨터망관리법의 기본	- 망 관리 운영, 이용 엄격 진행 - 인민경제 정보화 촉진 - 서비스 품질 향상, 보안 강화
제2장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 전국망/지역망/부문망/국부망 구분 - 장기계획 수립 - 사용자 등록, 경비 납부 - 망 운영실 출입 통제
제3장	컴퓨터망의 가입	- 미가입자 이용 금지 - 중앙체신기관에 등록, 승인 - 전자증명서 발급
제4장	컴퓨터망 정보봉사	- 망을 통한 자료수집, 교환, 이용 - 승인신청, 심의, 등록, 업종 준수 - 불법침입, 바이러스 전파 엄격 방지
제5장	컴퓨터망 보안	- 보안체계 수립, 보안 심의 - 보안프로그램 시행, 시스템 갱신
제6장	컴퓨터망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통일적인 지도 - 엄격한 감독 통제 - 행정적, 형사적 책임 부과

4.3. 북한 빅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현황

북한 당국이 현재 내부의 빅데이터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주요 학교와 대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선 각 도에 위치하여 북한의 수재만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1 고등중학교에서 당국 차원에서 마련한 설비를 통해 컴퓨터 등의 과목들을 조기에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고등중학교에서 조기 교육을 마친 학생들의 대부분을 졸업 이후, 주요 대학으로 진학시켜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주요 대학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그리고 희천체신대학 등이 있다. 이 대학들에서는 빅데이터 전문 학과라기 보다는 컴퓨터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이 내부에서 빅데이터 관련 인력들을 교육 및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선 김책공업대학의 경우 1988년에 컴퓨터공학부를 창설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기계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여 보다 더 관련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원격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프로그램인 ‘리상’을 개발하여 전국 각 지역에 통신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책공업대학의 경우 저학년부터 많은 전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효과적인 관련 인재 양성에 앞다투고 있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은 1985년 평양고등물리학교를 확대 개편되어 설립되었다. 컴퓨터공학부와 정보공학부의 2개 학부에 5개 학과가 존재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인민경제의 컴퓨터화 실현”을 강조하여, 관련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학과로는 정보체계학과, 컴퓨터조종체계학과 그리고 프로그램학과가 존재한다. 이 대학의 경우 김책공업대학에 비해 컴퓨터 실습 비중이 더 높아 보다 더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

46) 이춘근,김종선,남달리 (2014),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정책연구>, 28호, p17-21

한편, 북한 내부의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과학원, 체신성, 전자공업성, 기업 그리고 전술한 대학 등으로 다소 분산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중 국가과학원이 가장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과학원 산하에 소속된 다수의 연구소들이 주로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학연구소, 전기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미소전자연구중심, 집적회로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공업정보연구중심, 정보공동연구소, 과학전자출판사 등이 소속되어있다.

V. 남북 빅데이터 산업협력의 문제점 및 필요성

5.1. 북한의 문제점

전술한 바에 따라, 김정은 시기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인식과 발전 단계, 인력 양성은 상당히 우수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빅데이터 시설 투자 자원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건립이다. 다량의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이를 기반으로한 갖가지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에 있어서 막대한 자원은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지식저장센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천문학적인 자본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고 축적되어야하며,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차원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경우 빅데이터 센터 존재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자본 투자 역시 제한적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하는 상황에서 당면한 방역 사업과 내부 민심 경제를 살리기에 급급한 북한 당국으로써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는 곧 국제사회의 투자로 이뤄져야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하여 이는 쉽지 않다. 더불어 평양과기대 등 관련 우수인력 역시 있지만, 자본 등의 투자가 제한적이어서, 우수 인력이 대기하고 있는 등 인력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우수 인력 역시 유출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대북제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대규모 투자와 정보의 축적은 제한되기 때문에, 이들의 발전은 제한된 발전으로 이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북한은 혈맹국인 중국으로 편향된 발전을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들어 중국과의 과학 기술 교류 및 북한 내부의 과학기술 인재의 유학 증대와 인재 유출을 살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더불어 2014년 5월 30일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북한 기업 자율성이 대대적으로 보장되며, 제조업, 소비품 기반의 기업 수와 제품 개발 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8만 5천여 점이 출품된 8.3 전국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북한 내부의 기업들이 북한 내부의 주요 소비층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마케팅 관련 사업이 돋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된 광고는 총 73여건으로 광고 마케팅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광고의 성공 요인은 주 소비 타겟층의 적절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 수요는 주로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 및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듯, 빅데이터 기술은 있지만 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부재로 인하여, 북한 기업들의 광고 기술은 제한적인 것이 문제이다.

5.2. 남한의 문제점

한편, 남한 역시 빅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가 존재한다.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빅데이터 산업은 정부의 뉴딜 산업으로 지정되며, 북한과 달리 대대적인 자본 투자가 도입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실에 도입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6%가 대북 사업에 희망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북한

시장에 대한 기업 차원의 마켓 분석이 부족하며 더불어 자체적으로 북한 시장과 기업문화 등을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의 무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중 57.9%가 북한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컨설팅을 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남한에는 남한 기업이 북한으로의 교류 협력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지원협회 차원의 남북경협 컨설팅은 존재하나, 사업의 타당성/대북 제재 해당여부를 검토하는 거시적 차원의 컨설팅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미비하다.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은 주로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의 노동력에 의해 북한 지역에서 위탁 가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과거 남북의 교류협력 유형이 아닌 새로운 교류 협력의 유형을 기대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인도협력과 관련한 주장에서 살펴보면, 인도적 협력이 아닌 기술적 협력을 주장하고 있으며,⁴⁷⁾ 또한 <경제연구>⁴⁸⁾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술, 인재, 연구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자본 및 시설 설비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남북 상호간 동등한 위치에서의 기술, 인재, 연구의 교류 협력을 기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남북경협의 유형을 촉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구시대적인 경협이 과연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게도 구미가 당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관망된다.

47) 변학문, 권영덕 (2017), 북한 과학기술정책에 따른 평양시 변화와 남북 교류협력, <서울연구> 제 22권, p.63

48)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며, 선진과학기술은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었든 그것은 다 인류 공동의 재부로서 나라들 사이의 과학기술교류를 통하여 널리 보급되고 더욱더 높은 단계에 발전하게 된다. 다른나라들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잘 하여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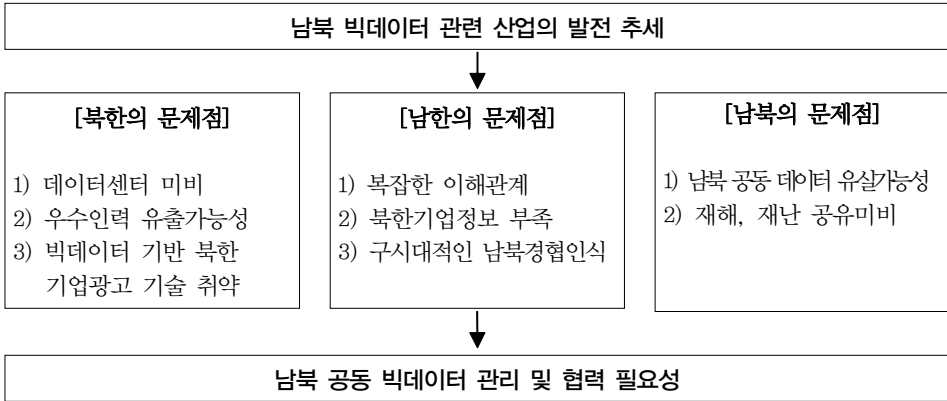
5.3. 남북 공통 문제점과 필요성

이외에도 남북이 공통으로 떠안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의 폐쇄와 더불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 이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협력은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어, 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농후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폐쇄된 개성공단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자, 내부 기업들의 관련 중요 데이터 역시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열린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의 내부의 중요 정보들을 빅데이터화 하여, 관리하고 있다. 남한의 경상남도 역시 정부헤드헌팅이라는 사업으로 경상남도와 관련한 주요 정보들을 모두 빅데이터화 하여 유실을 방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폐쇄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로 인해 남북 간 교류 협력에 관한 행정 및 경제 데이터 등의 유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형상 한반도이지만, 분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북에서 발생하는 홍수, 댐 개방 등의 자연 재해를 남한에서 미리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지만, 북의 호응 없이는 해결되기 쉬운 사안이 아니다. 이 역시 남북의 상호 재난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일이다. 이에 미래 지속적인 남북 협력 보장 차원에서 남북의 데이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전무한 경제협력 상황 극복, 북한 당국의 제한된 투자 극복, 남한의 제한된 기술 실현 상황 극복, 남한 기업에 대한 부족한 북한 시장 데이터 제공, 및 남북 공동 데이터 유실 방지, 자연 재해 예방 및 미래 한반도를 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남북 간의 공동의 빅데이터 관리 및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표 12> 남북 공동 빅데이터 관리 및 협력 필요성, 필자작성



Ⅵ. 남북 빅데이터 협력 발전 방안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술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남북 공동의 빅데이터 기술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그리고 정부, 기업, 연구교육기관 차원으로 역할을 분류하여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제안하였다.

6.1. 1단계 (대북제재 해제 전), '남북 빅데이터 공동학술/연구 싱크 탱크' 조성 단계

현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UN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 따라 '대량 현금(bulk cash)'의 대북 유입이 금지된 상황이다. 더불어 UN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과의 어떠한 형태로든 합작사업 역시 금지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대외적 상황에 따라, 초기 1단계에서는 남북 간 금융거래가 동반된 합작사업은 극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관련 회담 등의 분위기 조성과 함께,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빅데이터화하며, 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협력 등 우선적으로 남북 간의 학술 교류 협력으로 시작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부처와 관련기업 그리고 교육기관별로 그 역할을 세분화할 수 있다.

우선 정부 부처 중 남북협력을 관장하는 통일부의 경우 우선적으로 남북 협력기금의 미집행 된 1조 2000억원대의 기금을 활용하여, 학술협력을 위한 사전 연구 용역 조사와 북한 부서와의 회담을 위한 기반 기금을 활용해야한다. 또한 북한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내각과 남한의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회담 마련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내각 총리와 남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회담개최를 통하여 남북 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한 협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북 교류 협력을 시도했거나 도중의 중단된 협력을 소유한 타 정부부처 역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역시 관련 북한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협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의 역할에 따라 협력을 위한 기초 작업이 완료된다면, 국내 연구 교육기관은 대북제재에 위해되지 않으며, 남북 공동의 데이터 유실 방지와 자연 재해 예방, 차후 남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북 시장 조사 및 데이터 기반 예측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남북간의 인력, 기술, 학술 교류 협력을 준비해야한다. 여기에는 전술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그리고 희천체신대학 등의 북한연구교육기관과 남한의 KIST 및 주요대학 등의 연구기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상호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연구교류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기존의 남북협력과 관련한 데이터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의 주요 데이터와 남북 자연 재해와 관련한 데이터,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북한 시장에 관한 주요 데이터들을 상호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빅데이터의 초기 기법인 아카이빙 (기록화)을 통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싱크탱크의 구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향후 대북 시장 조사 및 조사 데이터 기반 예측 프로그램 관련 기술 공동 개발 역시 요구된다.

6.2. 2단계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공동 빅데이터센터 (가칭)’ 조성 단계

2단계에서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현금 등의 유입과 관련한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체에 발맞춰, 남북의 공동 빅데이터 자료를 영구적 보관 및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 ‘남북 공동 빅데이터 센터’ 조성이 필요로 한다. 우선 정부부처 중 통일부의 경우 공동 빅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적절한 장소 선정에 대한 사전 자료를 조사가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입법부 국회에서는 관련 특별 기구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통일부는 남북공동빅데이터센터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후 통일부와 국회 차원에서 국내 주요 기반을 마련하면, 북한 내각 주무부처와 국내 과학 기술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의 협력을 통해 남북공동 빅데이터 센터의 주요 역할, 내용 업무 분장 등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1단계에서와 같이 이 곳에 참가를 원하는 타 부처 역시 관련 북한 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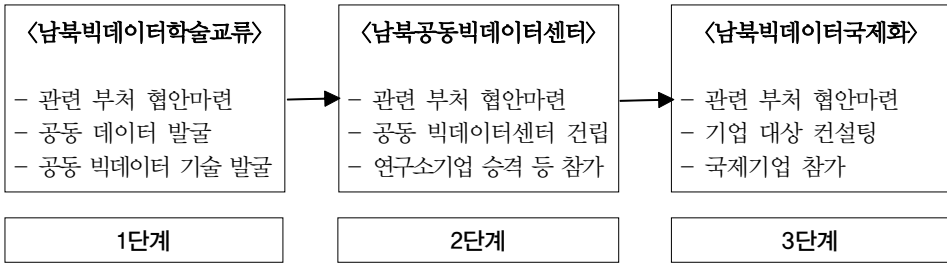
이후, 남북 공동 빅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 곳에는 남한 및 북한의 연구교육기관의 입주도 이뤄질 수 있다. 남북 공동의 데이터 유실 방지를 희망하며, 남북 교류 협력을 진행했던 국내 역사, 과학, 등의 연구소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관련 연구소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2조 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및 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한 목적의 설립으로 되었을 경우 기업 승격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연구교육기관이 연구소기업으로의 승격을 통해 이들은 차후 1 단계에서 마련한 공동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6.3. 3단계 (대북제재 완전 해제), ‘남북 공동 빅데이터 상업 및 국제화 단계

3단계는 1, 2단계보다 더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의 완화, 남북관계 활성화에 따라, 남북 공동의 빅데이터를 국제화하는 단계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기술 성과물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북한 시장에 관한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제공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계에서 역시 통일부는 북한의 내각과 협력하여, 수익 창출 구조 및 분배 방식, 수익 창출 주체 등과 관련하여 협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수익 창출 주체는 정부 부처가 아닌 앞서 2단계에서 연구소기업으로 승격한 남북 연구교육기관들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요청 기업의 사업 분야에 따른 구매잠재력이 있는 북한 주민의 주 타겟층 분석 및 컨설팅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광고 플랫폼 및 지역 소개와 북한 내부의 유관 기업을 알선하고, 고객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북한 주민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존하고 있는 대북제재 등 리스크 분석이 가능한 단계이다. 컨설팅 수수료 및 자료 제공 수수료를 통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단계이다. 또한 여기에는 북한 내부의 마케팅을 희망하는 북한 내 제조업, 소비품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묘향천호합작회사, 김정숙평양종합방직회사 등이 참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컨설팅 역할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특별법의 개성공업지구 광고 규정 20조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측기업의 광고에 따른 수수료를 통한 수입창출 경험 이 있다. 더불어 국내외 기업의 경우 비로소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 및 분석을 할 수 있어 보다 더 효과적인 북한 시장 진출이 이뤄질 수 있다.

〈표 13〉 남북 빅데이터 교류 협력 로드맵



6.4. 기대효과 및 위험성

남북 공동의 빅데이터 교류 협력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 공동 데이터 기술 개발, 공동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교두보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 그동안 전무했던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다는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의 빅데이터 잉여 인력을 남북 연구 교류 협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 조사, 빅데이터 기술자 고용 등을 통해 남북 상호 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기대된다.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UN 대북제재에 위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의 공동 데이터를 관리하고 향후를 대비하며, 남북의 교류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UN 대북제재에 접촉되지 않으며, 북한의 현재 빅데이터 사업 관심도 충족에 따라 매우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라 할 수 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센터의 건립과 남북한 연구교육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1단계에서 이뤄낸 연구 성과물과 빅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 유실 방지와 남북 공동의 자연 재해를 사전 예방 하는 등의 현실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함께 국제 기업의 참여로 국제사회 개입 도모되어 남북관계를 넘어서서 국제화를 할 수 있는 큰 의의가 있다. 그간 남북 경제협력의 경우 세계인들의 참여가 제한

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세계인이 참가하지 않아 구속력이 다소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빅데이터 교류 협력에 있어서 위험성 역시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부대 등으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안보로 활용해왔던 북한 당국이 빅데이터 인력과 상호 기술을 활용하여 남북의 공동 빅데이터를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 데이터와 주요 기술들을 DRM 및 난독화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난독화란, 불법복제, 변조방지, 유출방지를 위해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킹 확인 기술이 탑재되며, DRM으로 보호가 된 파일은 통상 설정된 횟수 이상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기기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Ⅶ. 결론

이상으로 남북 공동 빅데이터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북한의 빅데이터 발전 인식 및 발전 현황, 남북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협력 사업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 번째 한계점은 북한 당국의 실질적 인식과 발전 현황을 직접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장 연구의 한계와 현 남북관계로 인해 실제로 북한 지역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인식과 발전 현황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정책적 제언의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 인해 실질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현실성이 다소 약화된 한계점은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올해 2021년은 남북이 분단된지 76주년이 되는 해이다. 긴 세월

남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 체제가 구축되었고,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수백배에 이를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모든 구성원들이 새로운 산업의 물결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에 민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북한 역시 새세기산업혁명, 지식경제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남북이 모두 새로운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음과 동시에 남북의 경제협력은 전무한 이 상황에서 공동의 산업혁명을 공동으로 대비하여, 기존의 남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남북의 경제협력의 물꼬를 틔와 동시에 새로운 경제협력의 유형을 생산할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남북의 경제협력에서 본 논문이 선행 연구 역할을 하여, 남북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이바지를 하기 바란다.

[참고 문헌]

▣ 한글 문헌

- 김근배 (2002).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변천. <과학기술정책> 통권 134호.
- 김경일 (2018).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요과업. <경제연구>. 루계 제 179호.
- 김란영 (2012). 지식산업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루계 제 156호.
- 김정은 (2011).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높이 경제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일으키자. 노동신문.
- _____ (2013). 먼거리의료봉사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노동신문.
- _____ (2013).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 _____ (2014).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우리의 프로그램기술 제25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노동신문.
- _____ (2019). 수자경제를 지향하는 정보화열풍을 더욱 고조시키자 - 전국 정보화 성과전람회 2019를 보며. 노동신문.
- 김철남 (2012).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의 본질과 합법칙성. <경제연구>. 루계 제 157호.
- 리동수 (2012).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 식 지식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로선. <경제연구>. 루계 제156호
- 박기영 (2012).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노동의 지능화. 기술화. <경제연구>. 루계 제 156호.
- _____ (2012).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노동의 지능화. 기술화. <경제연구>. 루계 제 156호.
- 방학철 (2012). 지능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리용하는 것은 지식경제시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루계 제 155호.
- 배도용 (2008).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방안. <산업경제연구> 제 21권 제1호.

- 변상정 (2009).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체제안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변학문. 권영덕 (2017). 북한 과학기술정책에 따른 평양시 변화와 남북 교류협력. <서울연구> 제 22권.
- 안명훈 (2018). 경제건설에 충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 <경제연구> 루계 제 180호.
- 양문수 (2009).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 연구>. 12권
- 이춘근, 김종선, 남달리 (2014).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정책연구> 28호.
- 윤우진 외(1987). 한일산업협력의 현황 및 전개방향. <산업연구원>.
- 음철 (2012). 과학기술지식의 로화방지는 지식경제시대 사회적생산의 효과성제고의 중요담보. <경제연구>. 루계 제 154호.
- 임을출 (2019). 북한의 4차 산업혁명 : 대응전략. 추진방식과 성과. <동아연구>. 77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_____ (20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빅데이터 활용단계에 따른 요소기술별 추진 동향과 시사점. <방송 통신기술 이슈&전망>. 10호.
- 한정민 (2019).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루계 제 182호.
- 현재호 (2016). 4차 산업혁명 정의 및 거시적 관점의 대응방안 연구. <산업통상 자원부>.

▣ 인터넷 자료

강진규, “북한이 대자료 분석에 하둡을 활용하고 있다,” NK경제,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4> (검색일 : 2021년 09월 18일)

_____, “북한 머신러닝 기반 악성코드 분류법 개발,” NK경제,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검색일 : 2021년 09월 18일)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91554&cid=42171&categoryId=42183> (검색일 : 2021년 09월 09일)

_____, “교역,”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5519&cid=40942&categoryId=31864> (검색일 : 2021년 09월 15일)

김정은, “김정은원수님,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 조선신보, https://www.chosonsinbo.com/2013/06/kcna_130624-2/ (검색일 : 2021년 09월 17일)

Itonair, “빅데이터 출현 배경 3가지,” <http://www.itonair.tv/빅데이터의-출현-배경-3가지/> (검색일 : 2021년 09월 12일)

우수

통일부 이슈에 대한 대중의 진실성 및 공정성 평가 연구

- 정책 및 보도자료 제언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최예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김유나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문헌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 VI. 보도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1]

【요약문】

통일부 이슈에 대한 대중의 진실성 및 공정성 평가 연구

- 정책 및 보도자료 제언을 중심으로 -

한국 사회에서 통일부 관련 이슈에 대한 논쟁은 북한의 도발 및 정부의 대북정책 등의 주제로 다양하다. 통일부와 관련된 이슈는 대개 자신의 안위와 직결되거나, 대북지원 및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체로 국고금 투자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뉴스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통일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한국 사회구성원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통일부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 사회구성원이 집단적 특성(e.g., 정치적 성향, 소득분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결정 과정에서 계획조차 수립하기 어렵거나, 정책의 정당성 혹은 투자 가치 등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정책의 기조나 정부의 정치적 성향만 보고 일방적으로 거부 및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이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파악하여,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 정부의 정책과 보도자료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통일부 보도자료에 대한 대중의 지각된 진실성, 공정성 및 이슈 관여도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설문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일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게재된 기사 총 6가지(이후 상위 3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 교류협력, 인도적 협력)를 참가자에게 제공한 후,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과 공정성, 관여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정 통일부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평가 차이를 관찰한 후, 세부적으로 집단적 특성(e.g., 정치적 성향, 소득분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슈별로 수용자의 평가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i.e., 한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이슈) X 3(i.e.,

카테고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협력) X 3(측정 변인: 지각된 진실성, 지각된 공정성, 이슈 관여도) 피험자 내 설계 (within-subjects design)를 바탕으로 각 이슈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각된 진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이슈 관여도의 차이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 측면에서 대중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를 더 진실하게 평가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보다 이슈의 진실성을 높게 판단하였으며, 20대가 50~60대보다 이슈의 진실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이슈의 지각된 공정성 측면에서 대중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이슈보다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를 더 공정하게 평가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이슈를 더 공정하게 판단하였고, 20대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보다 이슈 공정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한편, 이슈 관여도 측면에서는 대체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남북협력 관련 이슈보다 인도적 협력 이슈의 관여도가 더 높은 범주에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보다 해당 이슈에 대한 관여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지각된 소득분위가 상위층인 사람이 위 이슈에 대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이슈 관여도는 개인이 갖는 주관적인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과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한국 사회 구성원이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 공정성, 관여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 이슈는 인도적 협력의 ‘폭우 피해 지원’ 이슈였고, 가장 낮게 평가한 이슈는 남북교류협력의 ‘남북협력기금’ 이슈였다. 이를 통해, 폭우 피해 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같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슈의 경우, 대체로 공정하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과 같이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의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남북 교류의 진전이 눈에 띄지 않는

시기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하는 것은 한국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여겨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구성원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남북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사회구성원은 폭우 피해로 인한 북한의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일부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을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지원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과 국민의 정서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통일부가 배포할 보도자료에 대한 이슈 및 카테고리별 지침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북한 및 통일부 관련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파적인 특성을 가지고, 매우 제한된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뉴스 수용자는 스스로 정보에 대한 진실성 판단에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이슈에 대한 진실성을 판단할 때, 정보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지각된 진실성, 즉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를 통해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과 같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기 쉽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각된 진실성과 공정성은 실제 사실 및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의 경우, 보도자료 배포 시기와 헤드라인 작성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남북협력기금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대중의 진실성과 공정성 평가가 타 이슈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작성 계획을 세울 때, 배포 예상 시기의 전후를 기점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금 관련 정책 및 보도자료의 배포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통일부 관련 정책을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는 국민적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구성원 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일 경우, 타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사회구성원이 역차별 및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발표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정책을 발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헤드라인 작성 시에도

최대한 가치 편향적인 단어 사용이나 불가피한 부연설명은 최소화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 어떠한 특성을 지닌 일부 한국 사회구성원만 이해가 가능한 정책이 아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정책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중의 특정 이슈에 대한 민감성과 편향된 태도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구성원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인 문제 보다는 문화, 관광, 인도적 협력 등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장려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치를 독려하고, 국민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한 열린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이 자신과 상관없는 이슈라고 여기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주제어: 통일부 이슈, 진실성, 공정성, 이슈 관여도, 통일부 보도자료

I. 서론

분단 이후, 통일부 관련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매년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한국 사회구성원에게 통일부 관련 이슈는 개인의 입장과 견해 차이에 따라 극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필수 과제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한 국가일 뿐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분단 이후,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국제사회 지원요청에 한국 정부는 1995년 식량 지원을 시작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 및 지속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¹⁾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제1차 남북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졌고, 2007년과 2018년 제2차, 제3차 남북정상 회담을 거듭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²⁾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이 실행되면서 다양한 통일부 관련 이슈가 대거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구성원의 의견은 분분하게 나뉘었다. 왜냐하면 대북정책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은 한국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북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통일부 관련 이슈에 대한 논쟁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 소득 분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집단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수 집단은 진보 집단에서 주장하는 대북지원의 정책을 ‘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진보 집단은 보수 집단의 대북정책을 ‘압박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자신이 어떤 소득 계층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주목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중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국가

1) 국립통일교육원 (2021)

2) 박형준 (2020)

및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이다. 대북정책 및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통일교육원 등의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대중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재를 다루게 된다. 한국 사회구성원은 개인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해 정의하는 개념과 견해 및 정서가 다르다. 때문에,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과 비교가 되면서,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개인의 입장 및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및 공공기관은 뉴스 제공자로서 수용자들이 북한과 관련된 주제 중 대중이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슈를 편향되게 평가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보도자료 작성 시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거나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 헤드라인, 배포 시기, 단어 선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슈에 대한 평가가 특정 집단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매체 및 언론사 선정, 보도자료의 노출 정도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1 통일백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통일부에서 배포했던 보도자료 중 다음과 같이 6개의 이슈를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 양육 가산금), 남북교류 협력(남북협력기금, 올림픽), 인도적 협력(백신 지원, 폭우 피해 지원)

본 연구에서는 이슈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다음과 같은 하위 항목으로 측정했다: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 이슈의 지각된 공정성, 이슈 관여도. 이슈의 진실성과 공정성은 대중이 특정 이슈를 정보 그 자체로 신뢰하거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일컫는다. 이는 실제로 특정 이슈가 얼마나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정한 시각에서 전달되는지와는 무관하다. 또한, 이슈 관여도는 주로 특정 이슈에 대한 대중의 주목도 혹은 관심도로 표현된다. 특히, 이슈 관여도는 행동적 차원의 정보 공유 행위와도 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평가로서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³⁾

3) 박현갑, 김선호, 양정에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부에서 배포한 6개의 보도자료에 대해 대중의 진실성, 공정성, 이슈 관여도를 일차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특정 이슈 및 사안에 대한 수용자의 평가를 각각 알아본 후, 집단적 특성(e.g., 정치적 성향, 소득분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수용자의 평가가 달라지는지 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통일부가 배포할 보도자료에 대한 이슈 및 카테고리별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문헌 검토

1. 통일부 관련 이슈

한국 사회에서 통일부 이슈에 대한 입장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인 소재로 이용한 역대 정부로부터 파생되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대북제재와 인도적·평화적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사이에서 진보와 보수 정부에 따라 포용 또는 압박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화해 및 협력정책과 평화번영정책, 그리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대북포용정책 패러다임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북한의 호응과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실행했다. 또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체제보장, 평화적 대화 등의 유인수단을 활용하여 경제교류협력의 효과를 기대했다.⁵⁾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상생 공영정책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대북압박정책 패러다임으로 북한의 대외 접근망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중시하였다. 즉, 포용정책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외교적 압박,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 등의 압박

4) 황지환 (2017)

5) 황지환 (2017)

수단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겼다.⁶⁾ 이때, 진보 정부와 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이슈에 대해 북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피주기 정책'이라 비판하였고, 보수 정부와 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 정부의 대북압박정책 이슈에 대해 북한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며 질타하였다.⁷⁾

분단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자가 대거 발생하였다. 북한의 국제사회 지원요청에 한국 정부는 1995년 식량 지원을 시작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⁸⁾ 이와 동시에, 식량난을 이유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점차 체제에 대한 불만,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⁹⁾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졌고, 2007년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거듭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¹⁰⁾ 이후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이 실행되면서 다양한 통일부 관련 이슈가 대거 등장하였고, 대중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 소득 분위, 성별 등 대중의 개별 특성에 따라 이슈를 다르게 평가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협력의 범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이슈와 그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의 견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슈

2020년 기준, 총 3만 3천 7백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구성원

6) 통일연구원 (2017)

7) 황지환 (2017)

8) 국립통일교육원 (2021)

9) 국립통일교육원 (2021)

10) 박형준 (2020)

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중 여성 입국자의 비율은 72%로, 남성 입국자에 비해 2.5배가량 많은 여성화 특징을 보인다.¹¹⁾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입국 초기 생활 지원을 위한 정착기본금과 함께 주거 지원금, 기타 가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국가 교육기관과 사회적 기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취업보호 등 특화된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부터 정부에서는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정에 양육가산금을 지급하여, 일반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은 금액의 정착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였다.¹²⁾

하지만 현재의 취업지원 및 직업교육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에 있어서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15.5%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육아 때문에(22.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7.6%가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답했다.¹³⁾ 이는 양육가산금 및 양육지원 대상 가정에 아직 도움이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은 54.4%로 일반 국민보다 6.0%p 낮고, 실업률은 9.4%로 일반 국민 평균 실업률보다 6.3%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9년보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3.8%p 감소하고, 실업률은 3.1%p 높아진 수치이다.¹⁴⁾ 또한, 남북하나재단에서 2020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단순 노무 종사자(28.6%)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16.0%), 판매 종사자(9.9%) 등 대부분 저소득 직업군이나 비정규직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⁵⁾ 이는 북한이탈주민 중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50.4%로 절반 정도이고,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보건·의료 분야(28.9%), 음식·제과·미용 등 서비스 분야(25.1%), 사무·회계 분야(23.3%) 순으로 많은 것에 비해, 직업교육훈련을 수료한 분야에서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52.0%로 절

11) 통일부 (2021)

12) 통일부 (2021)

13) 남북하나재단 (2021)

14) 남북하나재단 (2021)

15) 남북하나재단 (2021)

반가량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¹⁶⁾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취득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선택에는 비교적 한계가 있다.¹⁷⁾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5.4%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을 가하는 당사자는 일반 시민(20.6%), 직장 상사(17.9%), 직장 동료(16.5%) 등으로 조사되었다. 차별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는 아무 대처를 못 하는 경우(27.7%)가 가장 많았다.¹⁸⁾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후 직무상 불이익 및 여러 차별과 선입견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직장 상사 및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 등으로 직장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의 고용률과 실업률 변화에 비해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현 상황으로 인해 고용안정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통합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65.3%)’가 가장 많고, 그 뒤로 ‘대학교 재학 이상(15.2%)’, ‘전문대학 졸업 이하(14.4%)’ 등으로 나타난다.¹⁹⁾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한국 평균 대학진학률이 79.4%인 것과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진학률은 29.6%로 한국 평균보다 49.8%p 낮다.²⁰⁾ 일반적으로 좋은 학력이 좋은 취업 자리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북한이탈청소년의 62.5%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 이상의 교육을 기대한다.²¹⁾ 이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16) 남북하나재단 (2021)

17) 김종량 (2019, 7, 26)

1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2017, 3, 14)

19) 남북하나재단 (2019)

20) 문광민 (2021, 1, 14)

21) 남북하나재단 (2019)

가정의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북한이탈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맞춤형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입학 희망자의 경우에는 특례입학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일정 기준에 의해 등록금의 50% 보조부터 전액 면제까지 가능하다.²²⁾

하지만 특례입학이나 등록금 면제 등의 정부 지원으로 자신의 수학능력과는 상관없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례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반면, 언어 부적응이나 기초학력 부족 등으로 학업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오히려 특례입학제도가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북한이탈대학생 중도탈락률은 일반대학생 탈락률보다 2.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대학생의 휴학 및 중퇴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은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로 밝혀졌다. 기초학력을 포함하여 언어, 외국어,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여러 부분에서 일반 대학생들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요건을 맞추기 위한 부담 또한 크게 작용할 수 있다.²³⁾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특례입학제도 이슈에는 한국 사회구성원과의 공정성 문제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의 외 특례입학’에 대해서 한국 사회구성원 44.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²⁴⁾ 특히, 공정성을 중시하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특례입학이 동일한 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 특혜라고 생각하여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2) 남북교류협력 이슈

남북교류협력은 남북의 왕래, 교역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공동이 문화, 관광, 경제, 체육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²⁵⁾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개성공단 사업, 남북단일팀, 남북철도연결사업, 겨레말큰

22) 통일부 (2021)

23) 남북하나재단 (2021)

24) 김정범 (2019, 10, 2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3, 9)

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²⁶⁾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 상승에 큰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류 확대에 의해 안보 위협이 해소된다면, 국가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북정책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나 인도적 협력에 비해 북한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혹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남북관계 침체기에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서도 2005년, 18개 기업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 이슈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천안함 사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여러 번의 폐쇄 위기가 있었고, 현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대북제재와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고, 입주기업을 철수시킨 이후 5년째 중단된 상태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직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수는 125개로 2005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누적 생산액은 32억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한 남한 근로자는 820명, 북한 근로자는 5만 5천여 명으로, 남북교류협력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인력이 참여한 사업이었다.²⁷⁾ 개성공단 사업 이슈에 대해 한국 사회구성원은 ‘조건부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52.1%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었고, ‘현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25.6%)’,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한다(22.3%)’는 입장이 그 뒤를 따랐다.²⁸⁾ 어떠한 조건 내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은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차례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크고 작은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그 중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이슈는 당시 한국 사회

26) 통일부 (2021)

27) 김종수 (2021)

28) 남북교류협력단 (2021)

구성원에게 크게 작용한 이슈 중 하나였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급하게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과의 사전 협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북 단일팀 선수들은 급하게 팀워크를 맞추어야 했다. 또한, 북한 선수가 필수적으로 출전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몇몇 한국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공정성 이슈로 불거지게 되었다. 이에 MZ세대를 필두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수들이 무고하게 희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선수들이 노력해서 얻은 기회를 한순간에 빼앗길 위기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⁹⁾ 당시 올림픽 직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일팀 구성 찬성은 40%, 반대는 50%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20대의 부정 여론은 62%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올림픽 시작 이후에는 단일팀 구성 찬성이 50%, 반대가 36%로 긍정 여론이 반대 여론을 역전하는 양상을 보였다.³⁰⁾

3) 인도적 협력

인도적 협력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이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 혹은 식량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의 유무상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개선, 이산가족 문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및 민간 부문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³¹⁾

인도적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게 빈곤의 책임을 돌리면서, 대북지원정책을 주로 인도적 차원에서 호소했던 것과는 달리,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빈곤의 피해자로 설정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했다. 또한, 한민족으로서 북한에 대한 연민과

29) 이헌재, 박훈상 (2018, 1, 16)

30) 류지복 (2018, 8, 23)

31)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1)

인도적 지원 의무를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구성원의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남북평화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이익 측면을 강조했다.³²⁾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원조에 대한 무형의 책임을 지니며, 대부분의 선진국 그룹들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볼 때,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인 북한에 대한 원조에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의무와 책임에 기대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도덕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인도적 협력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조건부로 확대해야 한다(56.4%)’는 입장이 가장 많았고, ‘이전처럼 중단해야 한다(35.6%)’, 그리고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7.9%)’는 순서로 응답하였다. 백신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 달성 이후 지원해야 한다(67.0%)’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19.1%)’,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13.9%) 순으로 응답하였다.³³⁾ 이를 통해, 한국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 및 공정성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이하 이슈의 진실성)은 특정 문제가 얼마나 진실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슈가 실제로 얼마나 사실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다시 말해, 실제로 특정 이슈가 사실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개인이 받아들이는 이슈의 진실성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렇듯, 이슈에 대한 대중의 진실성 평가는 실제 사실이 주관적인 인지

32) 김육성 (2010)

33) 남북교류협력단 (2021)

작용을 거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왜곡되어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이슈의 진실성은 보도자료 작성 주체에 대한 신뢰도와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슈 진실성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받는다.³⁴⁾ 예를 들어, 통일부 보도자료에 대한 이슈 진실성은 우선 통일부라는 보도자료 작성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당 이슈의 중심 내용과 함께,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 (e.g., 정치적 성향, 소득분위 등)의 견해를 참고하여 형성된다.

선행 연구에서 이슈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공통적으로 중립성과 균형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이민웅 외, 1993; 박재영, 2005; 문종대 외, 2007).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공정성과 별개로 지각된 이슈의 공정성(이하 이슈의 공정성)은 수용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가 얼마나 중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슈의 진실성과 함께 이슈의 공정성 역시 대중의 주관적인 평가의 하위 항목으로써, 이슈의 공정성은 개별 수용자의 이슈에 대한 태도, 정치적 성향 등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기존 태도가 강하지 않거나, 반대로 자신의 태도와 일치할수록 이슈의 공정성이 더욱 높은 범위에서 지각되었다.³⁵⁾ 한편, 일반적으로 보도자료의 주체가 불공정하다고 느낄수록, 해당 기관에서 배포하는 개별 보도자료에 대한 공정성도 낮게 평가된다.³⁶⁾ 역으로, 각각의 보도자료에 대한 개인의 공정성 평가가 낮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관에 대한 책임과 그 평가가 고스란히 투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이슈의 진실성과 공정성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주체와 그 중심내용에 대한 신뢰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도자료 작성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도자료 작성의 주체보다는 보도자료 중심내용에 따른 대중의 이슈 진실성 및 공정성 평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34) Li & Yasuaki (2014)

35) 손영준 (2011)

36) 이준웅 (2005)

특정 정책에 대한 대중의 태도 및 견해가 통일부에서 배포하는 대북정책 보도자료의 진실성 및 공정성 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양육 가산금’, ‘폭우 피해 지원’, ‘취업 가산점’ 등 다수의 대북 정책은 국가의 자금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슈의 진실성보다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대두될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 가산점’ 정책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지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이슈에 대한 공정성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낮게 평가할 것이다. 다만, 다수의 한국 사회구성원이 ‘노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가치관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보다 물리적인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커진다.³⁷⁾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 역시 이슈의 공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매일경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문제’, ‘집 계약’, ‘가족 구성원으로서 수용’ 등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삶에 관여가 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감과 선입견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³⁸⁾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발표 시 공정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는 항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최대한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수용자가 어떤 이슈를 가장 진실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지, 혹은 기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질문 1. 대중은 통일부에서 배포한 6개의 보도자료 중 어떤 이슈의 진실성을 가장 높게 평가할 것인가?

연구질문 1-1. 각 이슈의 주제에 따른 이슈 진실성은 대중의 정치적 성향, 소득분위,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37) 구분상 (2020)

38) 김정범 (2019, 10, 22)

연구질문 2. 대중은 통일부에서 배포한 6개의 보도자료 중 어떤 이슈의 공정성을 가장 높게 평가할 것인가?

연구질문 2-1. 각 이슈의 주제에 따른 이슈 공정성은 대중의 정치적 성향, 소득분위,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3. 이슈 관여도

이슈에 대한 진실성 및 공정성 평가와 특정 이슈가 자신과 얼마나 관련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는 이슈 관여도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슈 관여도는 특정 문제나 이슈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자신과 얼마나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는지 등 지극히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이슈 관여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이슈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울인다.³⁹⁾ 한편, 지각의 하위 범주로서의 이슈 관여도는 ‘실제로 해당 이슈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슈에 대한 개인의 관여도가 역으로 이슈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⁴⁰⁾ 또한, 이슈 관여도는 단순히 개인의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주목성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와 연관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동기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초와 보스터(2005)는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려는 동기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박현갑과 그의 동료들(2016)은 높은 이슈 관여도가 탐색된 정보를 공유하려는 경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이슈 관여도가 높은 개인은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 처리 등의 적극적인 인지작용을 거쳐 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공유하는 행동적인 차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도자료가 각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중대한 결정이나 소식을 사실적으로 전달하지만, 대중은 이러한 보도자료를 그 자체로 수용하기

39) 육건엽, 정용국 (2019)

40) Haley (1996)

보다는 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와 인지작용을 통해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정보를 해석한다. 정보의 수용자에게는 특정 이슈가 얼마나 사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보다 개인적으로 특정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이슈를 수용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⁴¹⁾ 또한, 이슈 관여도는 개인의 인지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특정 문제를 심각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이 보도자료의 주체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⁴²⁾ 뿐만 아니라, 이슈 관여도가 높은 개인은 해당 이슈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보도자료를 예시로 든다면,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대중의 수용 정도, 심각성, 주체로의 책임 귀인 등의 문제가 모두 이슈 관여도로부터 파생이 가능한 변인들이라는 것이다.

보도자료의 주제, 헤드라인 등 정보의 특성과 대중의 성별, 정치적 성향, 소득 분위 등과 같이 정보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슈 관여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당 질병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이슈 관여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2021년 6월 15일 통일부에서 배포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한 이슈 관여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이슈가 높은 주목을 받는 만큼,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려는 의도도 높을 것이다. 실제로,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에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데, 박현갑과 그의 동료들(2016)은 감염병과 같이 자신의 신체적 안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슈 관여도는 이를 타인에게 전하려는 정보의 공유 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⁴³⁾ 대중의 이슈 관여도가 높은 만큼 정보 공유 의도도 높다는 것은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해당 이슈가 왜곡되어 공유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이다. 즉, 이슈 관여도가 높은 보도자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자신이 납부한 세금과 같이 특정 이슈가

41) 이은지, 김미경, 성동규 (2019)

42) 육건엽, 정용국 (2019)

43) 박현갑 · 김선호 · 양정애 (2016)

사회적, 경제적으로 개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역시 이슈 관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대중의 특성은 정보의 특성과 이슈 관여도 사이의 매개변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관여도는 낮을 수 있다. 2016년 통일부에서 배포한 ‘양육 가산금’ 문제의 경우, 소득 상위 계층은 ‘양육 가산금’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적을 것이고,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해 타 이슈와 비교하여 자신과 관련이 적은 뉴스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치적 성향도 중요한 매개 변인이 될 수 있는데, 각 정치 성향에 따라 주목하는 이슈가 다를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의 깊게 보려는 정보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이 제시될 수 있다.

연구질문 3. 대중은 통일부에서 배포한 6개의 보도자료 중 어떤 이슈에 가장 높은 관여도를 보일 것인가?

연구질문 3-1. 각 이슈의 주제에 따른 이슈 관여도는 대중의 정치적 성향, 소득분위,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실험참가자

본 연구는 2(i. e., 한 카테고리에 포함된 이슈) X 3(i.e., 카테고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협력) X 3(측정 변인: 진실성, 공정성, 이슈 관여도) 피험자 내 설계(within-subjects design)를 바탕으로 각 이슈에 대한 참가자들의 진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이슈 관여도의 차이를 측정했다. 실험은 한 조사전문업체(엠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실시되었으며,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참가자들의 수를 할당한 뒤,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그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9세 사이의 참가자 33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M

= 44.12, $SD = 13.63$). 참가자들의 소득 분위는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n = 143$), 출신 지역은 수도권($n = 215$)과 영남권($n = 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7점 척도(1 = 매우 보수적이다, 7 = 매우 진보적이다)로 물어본 결과, 그 중 ‘1~3 = 보수’, ‘4 = 중도’, ‘5~7 = 진보’로 간주했을 때, 중도($n = 166$)라고 응답한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진보($n = 86$), 보수($n = 78$)가 그 뒤를 이었다($M = 4.01$, $SD = 1.10$).

설문 실험은 2021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세 개의 카테고리(i.e.,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 교류협력, 인도적 협력)에 각각 할당된 두 가지의 세부 이슈, 즉 총 6개의 헤드라인 및 기사 요약본을 읽고, 해당 측정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그 이후,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적 질문과 스스로 경제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i.e., 지각된 소득분위)와 자신의 정치적 성향(1 = 매우 보수적이다, 7 = 매우 진보적이다; $M = 4.01$, $SD = 1.10$)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삽입하여, 각 변수의 특징별로 이슈에 대한 진실성, 공정성, 이슈 관여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통계 검증을 위해 보수, 중도, 진보 등의 3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1~3 = 보수, 4 = 중도, 5~7 = 진보).

2. 실험설계

1)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측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통일부에서 배포한 6개의 보도자료에 대한 사람들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이슈 관여도를 측정하였다. 제시된 이슈들은 2021년 기준, 5년 이내 배포된 통일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20대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 가운데 선정하였다. 선별된 이슈들은 2021 통일백서에서 분류해놓은 범주 중 일부를 기준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i.e.,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협력)로 구분하였으며,⁴⁴⁾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슈를 두 개씩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기사를 참고하여 헤드라인의 길이, 글자 수, 문장의 짜임새 등을 일관되게 수정하여 참가자들이 이슈의 주제(혹은 기사의 중심내용)에만 주목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통제

<표 1> 설문 참가자 특성

구분	항목	응답수 (명)	비율 (%)
성별	남성	165	50
	여성	165	50
연령	만 20~29세	66	20
	만 30~39세	66	20
	만 40~49세	66	20
	만 50~59세	66	20
	만 60~69세	66	20
지각된 소득 분위	하위(하류)층	36	10.91
	중하층	112	33.94
	중간층	143	43.33
	중상층	37	11.21
	상위(상류)층	2	0.61
출신지역	수도권	215	65.15
	충청권	27	8.18
	호남권	28	8.48
	영남권	55	16.67
	강원권	3	0.91
	제주	2	0.61
최종 학력	고졸 미만	3	0.91
	고졸	49	14.85
	대학교 (전문대 포함) 재학 혹은 중퇴	30	9.09
	대학교 (전문대 포함) 졸업	209	63.33
	대학원 이상	39	11.82

하고자 하였다. <표 2>에서 각 이슈별로 참고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메시지의 진실성 ($\alpha > .93$)을 측정하는 문항은 맥코넬과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측정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했으며,⁴⁵⁾ 공정성 측정 문항 ($\alpha > .96$)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슈 관여도 ($\alpha > .93$) 측정 문항의 경우, 남경태(2020)가 잭코브스키(198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일부를 수정해서 본인의 연구에 이용한 문항들을 이용했다. 진실성과 공정성의 경우, 7점 의미분석 척도(1 = 진실이 아니다, 7 = 진실이다; 1 = 불공정하다, 7 = 공정하다)를 사용하여 각각 6개의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이슈 관여도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혹은 자신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슈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위 이슈에 대한 정보를 관심 있게 본다.’, ‘위 이슈는 나와 관련이 있는 이슈이다.’ 등 총 5가지 문항이 사용되었다.

2) 이슈별 카테고리 구분에 대한 조작 점검

위와 같이 선정된 이슈가 연구자가 구분한 카테고리(i.e.,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협력)에 적절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작점검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한 개의 이슈당 9개의 범주(실업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양육 가산금 지원, 남북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 올림픽, 백신 지원, 인도적 협력, 폭우 피해) 중 해당 이슈의 핵심 주제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두 가지를 선택했다. <표2>는 각 이슈별로 응답률이 높은 상위 2개의 항목을 나타낸 것으로, 총 6개의 모든 이슈에 대한 조작 점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이슈 1과 2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슈 3과 4는 ‘남북교류협력’, 이슈 5와 6은 ‘인도적 협력’ 카테고리로 통합 및 구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5) McCormack et al (1992)

<표 2> 이슈별 카테고리 분류에 대한 조작 점검

이슈 ¹⁴⁶⁾ (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		이슈 ²⁴⁷⁾ (양육 가산금 지원)		이슈 ³⁴⁸⁾ (남북협력기금)		이슈 ⁴⁴⁹⁾ (올림픽)		이슈 ⁵⁵⁰⁾ (백신 지원)		이슈 ⁶⁵¹⁾ (폭우 피해 지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실업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양육 가산금	남북 협력기금	남북 교류협력	남북 교류협력	베이징 올림픽	백신 지원	인도적 협력	폭우 피해	인도적 협력
220 (66.7)	127 (38.5)	209 (63.3)	180 (54.5)	220 (66.7)	183 (55.5)	215 (65.2)	177 (53.6)	215 (65.2)	165 (50.0)	201 (60.9)	171 (51.8)

* 응답자 (%)

IV. 연구 결과

1. 주효과

본 연구에서 대중이 통일부 보도자료를 각 카테고리별로 진실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시행했다. 통계적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각된 진실성 및 공정성

세 가지 상위 카테고리(i.e.,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협력)로 구분한 통일부 보도자료에 대하여 대중의 진실성 및 공정성 인식적 측면에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참가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M = 4.55$, $SD = 1.25$)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M = 4.38$, $SD = 1.25$)보다 진실되며 정직하다고 평가했다, $t(329) = 3.51$, $p = .001$, $\eta^2 = .04$. 또한, 인도적 협력 관련

46) 신용아 (2021, 5, 18)

47) 강나루 (2016, 7, 24)

48) 정래원 (2021, 9, 2)

49) 배영경 (2021, 9, 9)

50) 박예나 (2021, 6, 15)

51) 김나경 (2021, 8, 9)

이슈($M = 4.53$, $SD = 1.32$) 역시 남북교류협력($M = 4.38$, $SD = 1.25$) 관련 이슈보다 진실하다고 평가되었다, $t(329) = -3.65$, $p < .001$, $\eta^2 = .0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와 인도적협력 관련 이슈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성 인식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와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329) = -2.38$, $p = .018$, $\eta^2 = .02$. 즉, 참가자들은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M = 4.31$, $SD = 1.39$)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M = 4.18$, $SD = 1.37$)보다 더욱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M = 4.12$, $SD = 1.31$)보다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M = 4.31$, $SD = 1.39$)를 더욱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t(329) = -4.40$, $p < .001$, $\eta^2 = .06$.

각 카테고리의 하위 이슈에 대하여 대중의 진실성 및 공정성 인식적 측면에서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표본 t 검정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 중 ‘남북협력기금’ 이슈에 대해 가장 진실성($M = 4.30$, $SD = 1.35$) 및 공정성($M = 4.05$, $SD = 1.43$)을 낮게 평가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 중 ‘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 이슈의 진실성($M = 4.60$, $SD = 1.31$)을, 인도적협력 관련 이슈 중 ‘폭우 피해 지원’ 이슈의 공정성($M = 4.34$, $SD = 1.45$)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t(329) = 4.14$, $p < .001$, $\eta^2 = .05$, $t(329) = 3.69$, $p < .001$, $\eta^2 = .04$.

2) 이슈 관여도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M = 3.44$, $SD = 1.32$)보다 인도적협력 관련 이슈($M = 3.55$, $SD = 1.32$)에 더욱 높은 이슈 관여도를 보였다, $t(329) = -2.56$, $p = .011$, $\eta^2 = .02$. 즉, 참가자들은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보다 의미 있는 이슈로 여기며,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와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329) = -4.24$, $p < .001$, $\eta^2 = .05$. 참가자들은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M = 3.55$,

$SD = 1.32$)를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M = 3.37$, $SD = 1.30$)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3> 변수별 평균 및 표준화 편차

M(SD)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			인도적협력		
	이슈 1	이슈 2	부분합	이슈 3	이슈 4	부분합	이슈 5	이슈 6	부분합
정치성	4.60 (1.31)	4.49 (1.36)	4.55 (1.25)	4.30 (1.35)	4.46 (1.36)	4.38 (1.25)	4.52 (1.39)	4.54 (1.40)	4.53 (1.32)
공정성	4.21 (1.43)	4.16 (1.49)	4.18 (1.37)	4.05 (1.43)	4.19 (1.41)	4.12 (1.31)	4.28 (1.49)	4.34 (1.45)	4.31 (1.39)
이슈 관여도	3.50 (1.38)	3.38 (1.46)	3.44 (1.32)	3.40 (1.40)	3.34 (1.39)	3.37 (1.30)	3.68 (1.46)	3.42 (1.39)	3.55 (1.32)

2. 상호작용효과

1) 정치적 성향

개인의 특성에 따른 통일부 보도자료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슈의 진실성 판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F(10, 1635) = 1.88$, $p = .044$, partial $\eta^2 = .03$. 즉,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일수록 이슈에 대한 진실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누었을 때 성향별 이슈에 대한 진실성 판단을 확인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 검증 결과,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 내 ‘양육 가산금’ 이슈($M = 4.22$)가 가장 진실하다고 응답했으며,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 내 ‘폭우 피해 지원’ 이슈($M = 5.09$)가 가장 정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 중 ‘백신 지원’

이슈($M = 3.57$)에 대한 정직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 중 ‘남북협력기금’ 이슈($M = 4.64$)가 가장 부정적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슈 관여도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검증됐다, $F(10, 1635) = 2.48, p = .006, \text{partial } \eta^2 = .01$. 즉,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일수록 통일부 보도자료에 대한 이슈관여도가 높았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누었을 때 성향별 이슈 관여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 내 ‘양육 가산금’ 이슈($M = 3.41$)에 가장 큰 관심을 표했으며,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 내 ‘백신 지원’ 이슈($M = 3.84$)가 가장 자신과 관련이 깊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 내 ‘남북협력기금’ 이슈($M = 2.83$)에서,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슈 내 ‘양육가산금’ 이슈($M = 3.30$)에서 가장 낮은 이슈 관여도를 보였다.

2) 지각된 소득 분위

지각된 소득 분위(i.e.,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위층)와 이슈 관여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F(20, 1625) = 1.85, p = .013, \text{partial } \eta^2 = .003$. 평균값 비교 결과, 중상층($M = 3.58$)과 상위층($M = 2.88$)에서 통일부 보도자료에 대한 관여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상위층이 가장 낮은 관여도를 보였는데, 6개의 이슈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 내 ‘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 이슈($M = 1.50, SD = 0.97$)에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 내 ‘백신 지원’ 이슈($M = 4.30$)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하위층을 제외한 네 가지 지각된 소득분위의 사람들은 백신 관련 이슈에 가장 높은 관여도를 보였으며, 하위층은 백신 관련 이슈($M = 3.34$)에 대해 가장 낮은 주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 내 ‘양육가산금’ ($M =$

3.73)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3) 성별 및 연령

남녀에 따른 공정성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F(5, 1640) = 2.23, p = .049$, partial $\eta^2 = .00$. 다시 말해, 여성($M = 4.22$)이 남성($M = 4.19$)보다 이슈에 대한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사후 검정 결과, 여성은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 중 ‘폭우 피해 지원’ 이슈를, 남성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 중 ‘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 이슈를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남성($M = 4.06, SD = 0.11$)과 여성($M = 4.03, SD = 0.11$) 모두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사 내 ‘남북협력기금’ 이슈를 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연령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실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후 검정 결과, 20대는 50대(만50-59세)와 60대(만60-69세)보다 이슈에 대한 진실성을 낮게 평가했다($M = 4.18$). 이슈 별로 분석한 결과, 20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 내 ‘남북협력기금’ 이슈($M = 3.99, SD = 0.17$)를 가장 진실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이슈 내 ‘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 이슈($M = 4.34, SD = 0.16$)를 가장 정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0대(만 20-29세)는 30대(만 30-39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이슈에 대한 공정성 역시 가장 낮게 평가했다($M = 3.71$). 20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사 내 ‘남북협력기금’ 이슈($M = 3.54, SD = 0.18$)를 가장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인도적 협력 관련 기사 내 ‘폭우 피해 지원’ 이슈($M = 3.91, SD = 0.18$)를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V. 결론

북한의 도발과 정부의 대북정책 등 여러 분단 문제 및 통일정책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통일부 이슈를 다른 어떤 국가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자주 접한다.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한국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작용했다. 통일부와 관련된 이슈는 대개 자신의 안위와 직결되거나, 대북 지원 및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고금 투자가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뉴스거리가 되어왔다. 따라서, 통일부 이슈가 발생할 때는 대부분 한국 사회구성원이 집단적 특성(e.g., 정치적 성향, 소득분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결정 과정에서 계획조차 수립하기 어렵거나, 정책의 정당성 혹은 투자 가치 등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정책의 기조나 정부의 정치적 성향만 보고 일방적으로 거부 및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이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파악하여,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 정부의 정책과 보도자료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일부 보도자료에 대한 대중의 진실성, 공정성 및 이슈 관여도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일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게재된 기사 총 6가지를 참가자에게 제공한 후, 이슈의 진실성과 공정성, 관여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특정 통일부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평가 차이를 관찰한 후, 세부적으로 집단적 특성(e.g., 정치적 성향, 소득분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슈별로 수용자의 평가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표 4> 참가자 특징별 이슈의 진실성, 공정성, 관여도의 평균 및 표준오차

			전체 평균	상위			하위		
				이슈	평균	표준오차	이슈	평균	표준오차
정치적 성향	진실성	보수	3.94	2	4.22	0.25	5	3.57	0.25
		진보	4.91	6	5.09	0.26	3	4.64	0.25
	이슈 관여도	보수	3.09	2	3.41	0.27	3	2.83	0.25
		진보	3.62	5	3.84	0.57	2	3.30	0.27
소득	이슈 관여도	하	3.48	2	3.73	0.24	5	3.34	0.24
		중하	3.42	5	3.66	0.14	3	3.31	0.13
		중간	3.45	5	3.72	0.12	2	3.29	0.12
		중상	3.58	5	3.90	0.24	4	3.28	0.23
		상위	2.88	5	4.30	1.04	1	1.50	0.97
성별	공정성	남	4.19	1	4.28	0.11	3	4.06	0.11
		여	4.22	6	4.44	0.11	3	4.03	0.11
연령	진실성	20대	4.18	1	4.34	0.16	3	3.99	0.17
		50대	4.68	1	4.84	0.16	3	4.36	0.17
		60대	4.63	1	4.95	0.16	3	4.42	0.17
	공정성	20대	3.71	6	3.91	0.18	3	3.54	0.18
		40대	4.31	5	4.49	0.18	2	4.19	0.18
		50대	4.39	1	4.51	0.17	3	4.19	0.18
		60대	4.50	1	4.68	0.17	3	4.26	0.18

* <표 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언급되어 있다.

** 이슈 1은 '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 이슈 2는 '양육가산금', 이슈 3은 '남북협력기금', 이슈 4는 '올림픽', 이슈 5는 '백신 지원', 이슈 6는 '폭우 피해 지원'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결과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 측면에서 대중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이슈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를 더 진실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하면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보다 이슈의 진실성을 높게 평가했는데, 진보적 성향의 사람은 ‘폭우 피해 지원’ 이슈를 가장 진실하게, 보수적 성향의 사람은 ‘양육 가산금’ 이슈를 가장 진실하게 판단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사람은 ‘남북협력기금’ 이슈를 가장 진실하지 않게, 보수적 성향의 사람은 ‘백신 지원’ 이슈를 가장 진실하지 않게 평가하였다.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 판단은 보도자료 작성 주체에 대한 신뢰도와 정보의 내용,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견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진보 집단이 보수 집단보다 통일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진보 집단에서는 ‘폭우 피해 지원’ 이슈를 가장 긍정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이슈를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보수 집단에서는 ‘양육 가산금’ 이슈를 가장 긍정적으로, ‘백신 지원’ 이슈를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인도적 협력 문제에 대해 진보 집단이 보수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이해가 가능하다. 한편, 연령별로 확인했을 때는 20대가 50~60보다 이슈의 진실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20대는 ‘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 이슈를 가장 진실하게 판단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을 가장 정직하지 않게 판단하였다. 이는 20대의 통일부에 대한 신뢰도가 50~60대 보다 낮다고 볼 수 있으며, ‘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을 긍정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슈의 지각된 공정성 측면에서 대중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관련 이슈보다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를 더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고, 여성은 ‘폭우 피해 지원’ 이슈에 대한 공정성을 높게 판단하고, 남성은 ‘실업률 지원’ 이슈에 대한 공정성을 높게 판단했다. 또한 남녀 모두 ‘남북협력기금’ 이슈를 가장 불공정하게 판단했다. 한편,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20대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이슈 공정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20대는 ‘남북협력기금’ 이슈를 가장 불공정하게 평가하고, ‘폭우 피해 지원’ 이슈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슈의 공정성은 이슈 혹은 이슈의 주체에 대해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주관적인 이슈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기반하여 해석해보면, 20대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통일부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폭우 피해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대체로 공정하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처럼 현재 남북교류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결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여러 사업 및 정책에 국고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슈 관여도 측면에서 대중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남북교류 협력 관련 이슈보다 인도적 협력 관련 이슈의 관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정치적 성향과 소득분위에 따라 이슈의 관여도를 다르게 평가했는데,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보다 이슈 관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백신 지원’ 이슈에 관심을 갖고, ‘양육가산금’ 이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반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양육 가산금’ 이슈에 주목했고, ‘남북협력기금’ 이슈에 주목하지 않았다. 한편, 소득분위에서는 상위층이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특히 ‘탈북민 맞춤형 취업 지원’에 관심이 없었으며, 대신 ‘백신 지원’에 관심을 가졌다. 반면에, 하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신 지원’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하위층은 ‘백신 지원’에 관심이 가장 낮았고, ‘양육가산금’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국고금, 즉 세금이 투여되는 이슈들에 상위층은 자신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로 여기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이자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 ‘백신 지원’ 이슈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슈 관여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관심과 주목의 정도로,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구성원이 이슈의 지각된 진실성, 공정성, 관여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는 이슈는 인도적 협력의 ‘폭우 피해 지원’ 이슈였고, 가장 낮게 평가하는 이슈는 남북교류협력의 ‘남북협력기금’ 이슈였다. 정부 및 통일부의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운용해야 하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얼어붙은 남북교류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한국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삶과 직결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주목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한국 사회구성원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가장 먼저 한국을 주시하고, 한국의 역할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 사회구성원은 폭우 피해로 인한 북한의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일부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북한은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으로써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통일부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원 추진 의지와 국민의 정서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이슈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사업들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도록 관련된 정책 및 사안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도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집단 내 설계(within-subject design)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의 대상이 되는 개인 간의 차이를 소거함으로써 실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반복된 측정으로 인해 실험 참가자가 피로도를 느낄 수 있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실험의 진행 시, 개인마다 이슈 처치물의 순서를 랜덤하게 변경하여 피로감으로 인한 불성실 답변의 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슈 처치물은 각 카테고리 별로 5가지씩, 총 20개의 이슈 처치물을 선정하여 파일럿 스터디를 한 결과, 가장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처치물 두 가지를 선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정된 이슈 6개 중 5개의 이슈가 2021년에 논의되었던 이슈임에 반해, '양육 가산금' 이슈는 2016년에 논의된 이슈로, 논의된 시기에 차이를 보였다.

Ⅵ. 보도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및 정책적 제언

북한 및 통일부 관련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파적인 특성을 가지고, 매우 제한된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뉴스 수용자는 스스로 정보에 대한 진실성 판단에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이슈에 대한 진실성을 판단할 때, 정보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지각된 진실성, 즉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를 통해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과 같이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쉽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지각된 진실성과 공정성은 실제 사실 및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시기와 헤드라인 작성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남북협력기금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대중의 진실성과 공정성 평가가 타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작성 계획을 세울 때, 배포 예상 시기의 전후를 기점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금과 관련된 정책 및 보도자료의 배포 일정 및 내용을 확인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세금 증액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관련 보도자료 직전에 배포하였다면, 이를 연달아 보도할 경우 대중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향을 가질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양육가산금’ 이슈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상의하여 일반 국민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보도자료 배포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등 시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타이밍을 잡는다면 해당 정책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부 관련 정책을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는 국민적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구성원 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일 경우, 타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사회구성원이 역차별 및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발표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헤드라인 작성 시에도 최대한 가치 편향적인 단어 사용이나 불가피한 부

연설명은 최소화해야 한다. 즉, 간결하게 필수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 어떠한 특성을 지닌 일부 한국 사회구성원만 이해가 가능한 정책이 아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정책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중의 특정 이슈에 대한 민감성과 편향된 태도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발표 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구성원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인 문제보다는 문화, 관광, 인도적 협력 등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좋다.

결국, 통일부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와 협조가 있을 때,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북한과의 긍정적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치를 독려하고, 국민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한 열린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에 반대하는 이견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이 자신과 상관없는 이슈라고 여기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내 학술지

- 구본상 (2020). 공정성 인식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평화연구>, 28권 2호, 77-111.
- 김육성 (2010). 한국대북지원정책의 도덕적 근거 평가. <윤리교육연구>, 21권, 201-222.
- 김종수 (2021). 개성공단 운영 평가와 재개를 위한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193-220.
- 남경태 (2020). 기업의 갑질과 CSR 효과: 기업-CSR 적합성과 소비자의 CSR 이슈 관여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권 3호, 101-122.
- 문종대 · 안차수 · 진현승 · 안순태 (2011).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8권, 183-210.
- 박재영 (2005). 공정성의 실천적 의미.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167-195.
- 박현갑 · 김선호 · 양정애 (2016).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보 노출과 이슈 관여도가 정보의 영향력 지각, 예방 행동, 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권 3호, 7-48.
- 박형준 (2020).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상관관계 연구: 2000년 2018년 개최 시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3권 2호, 235-264.
- 손영준 (2011). TV 뉴스 공정성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122-158.
- 육건엽 · 정용국 (2019). 뉴스 프레임과 이슈 관여도가 수용자 반응, 이슈 지각, 책임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권 4호, 117-142.
- 이규창·김수경·박종철·신종호·이우태·한동호·홍민·호우택 (2017). 지속가능한 통일, 대북정책: 환경분석과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17권 1호 1-132.
- 이민웅·이창근·김광수 (1993). 보도 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 언론인 과 시청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36, 180-213.

- 이은지 · 김미경 · 성동규 (2019). 소셜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대한 뉴스 소비자의
확증편향과 관여도 매개효과: 진짜뉴스와 가짜뉴스 비교.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권 4호, 765-784.
- 이준용 (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규범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권 2호, 139-171.
- 황지환 (2017).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통일정책연구>, 26권
1호, 29-49.

▣ 국내 보고서

-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1). 2021 통일문제 이해, <국립통일교육원>,
1-252.
- 남북교류협력단 (2021). KBS 2021 국민 통일의식 조사, <남북교류협력단>,
1-10.
- 남북하나재단 (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1-6.
- 남북하나재단 (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1-195.
- 남북하나재단 (2021). 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1-232.
- 남북하나재단 (2021). 2021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일반대학).
<남북하나재단>, 1-220.
- 통일부 (2021). 2021 통일백서. <통일부>, 1-299.

▣ 국내 신문기사

- 강나루 (2016). 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금에 '양육 가산금' 추가. <KBS>.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317376>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B6%81%EA%B5%90%EB%A5%98%ED%98%91%EB%A0%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2017). 북한이탈주민의 약 50%, 북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경험. <국가인권위원회>. Retrieved from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0763>

김나경 (2021). 통일부 “北폭우 피해, 인도적 협력방안 마련할 것. <파이낸셜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fnnews.com/news/202108091103017125>

김정범 (2019). 탈북민도 우리 국민 84%, 내 며느리로 괜찮아 9%.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0/855711/>

김종량 (2019). 의사 탈북자 한국 의사 가능?... 31명 의사면허시험 격.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6085100371>

류지복 (2018). 남북단일팀 구성 잘된 일 50%... 찬성여론 우세로 역전.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3068000001>

문광민 (2021). 고3 수험생 출자... 대학진학률 79.4% 최고.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46266/>

박예나 (2021). 통일부 "北에 백신 직접 지원할 수도...여러 가능성 검토. <서울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N9PQ14R>

배영경 (2021). 통일부, 北 올림픽 참가제동에 "남북 평화계기 계속 찾겠다.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084700504>

신용아 (2021). 코로나로 탈북민 실업률 9.4%...위기 경보 전 맞춤형 지원.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18500153>

이현재 · 박훈상 (2018). 한국선수 탈락 없다지만.. 출전기회 줄어들어.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116/88182239/1>

정래원 (2021). [2022예산] 남북협력기금 1.9% 증액... 4년째 1조원대 유지(종합).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37151504>

▣ 해외 문헌

- Cho, H., & Boster, F. J.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value-, outcome-, and impression-relevant involvement scales. *Communication Research*, 32(2), 235-264.
- Haley, E. (1996). Exploring the Construct of Organization as Source: Consumers' Understandings of Organizational Sponsorship of Advocacy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25(2), 19-35.
- Li, H., & Sakamoto, Y. (2014). Social impacts in social media: An examination of perceived truthfulness and sharing of inform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1, 278-287.
- McCornack, S. A., Levine, T. R., Solowczuk, K. A., Torres, H. I., & Campbell, D. M. (1992). When the alteration of information is viewed as deception: An empirical test of information manipulation theory. *Communication Monographs*, 59(1), 17-29.
- Zaichkowsky, J. L. (1985).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59(1), 341-352.

[부록 1] 실험에 사용된 이슈 처치물

구분	기사 요약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p>통일부, 코로나로 탈북민 실업률 증가에 “맞춤형 지원 강화하겠다”</p> <p>코로나19 상황에서 탈북민의 실업률이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일부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p> <hr/> <p>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금에 ‘양육 가산금’ 추가</p> <p>통일부가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에 ‘양육 가산금’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p>
남북교류협력	<p>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상향 편성… 남북교류 촉진에 중점</p> <p>남북관계 교착국면에서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지만, 통일부는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촉진, DMZ 평화지대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뉴딜 비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 편성했다.</p> <hr/> <p>통일부, 北올림픽 참가제동에 “남북 평화계기 계속 찾겠다”</p> <p>통일부는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로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진 상황과 관련하여 "남북정상이 이미 합의한 대로, 남북 간 평화의 계기와 스포츠 교류의 계기를 찾아 나갈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다.</p>
인도적 협력	<p>통일부 “北에 백신 직접 지원할 수도…여러 가능성 검토”</p> <p>통일부는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는 나라가 없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측이 북한에 직접 백신을 제공하거나, 글로벌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p> <hr/> <p>통일부 “北 폭우 피해, 모든 가능성 열고 협력할 것”</p> <p>통일부는 북한 함경남도 폭우 피해와 관련해 "남북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수해도 당국과 민간, 국제기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

우수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융합 교육을 기반에 둔 통일교육 단위 개발을 중심으로 -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전 예 린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논의를 시작하며
- II. 이론적 배경
- III. 본론
- IV. 논의를 마치며

【참고문헌】

【요약문】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융합 교육을 기반으로 둔 통일교육 단위 개발을 중심으로 -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미래는 막연하고 두렵지만, 준비된 미래는 때로 설레기까지 한다. 다가올 미래에 통일된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통일교육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 사례를 마냥 성공 모델로 보지 않는 이유는 준비된 통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 일환인 통일교육은 여러 해결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통일교육은 아동의 삶의 맥락과 닿아 있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소수의 연구학교를 제외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1년에 1~2시간가량 관련 영상을 보는 것이 전형인 듯하다.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83.3%가 동영상 시청을 통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지만, 동영상 시청이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법이라고 답한 초등교사는 28.4%에 불과하다(통일부, 2020). 이는 통일교육 자료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교사들이 통일교육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로 교육 자료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된다면 교사들도 동영상 시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자료의 부족 외에도 학교 통일교육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에는 통일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교육과정 시수 부족 등이 꼽혔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은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살아갈 통일 사회는 삶의 문제이며 삶은 여러 교과가 융합된 형태다. 이를 고려하면 통일교육도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과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점이 통일교육과 유사한 다문

화 교육의 경우 거의 모든 교과에서 반영된다. 교과서 삽화를 그릴 때도 여러 인종을 그리고, 다문화 음악이나 미술 등이 실리지 않은 교과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구도 다문화 교육에 비해 적으며, 여러 대학에서 다문화 교육 전공은 설치되어 있어도 통일교육 전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ggins와 McTighe(2005)에 의해 개발된 백워드 설계 모형(Backward Design)을 적용하여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음악과, 미술과를 융합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학교 통일교육이 도덕과와 사회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과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게다가 기존 교과에서 학습해야 하는 지식과 기능, 가치를 배우면서 통일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일교육 수업 시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과에서 토의와 토론에 대해 학습할 때, 토의 주제를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정하여 국어과에서 학습해야 할 기능과 통일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학습자가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습자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과 기능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징은 융합 교육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유사하다. 융합 교육은 지식이 본질적으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을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여러 교과가 융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임을 표방하였고, 역량의 특징은 학습의 전이 가능성과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이다. 종합하면 백워드 설계 모형과 융합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전통적으로 평가 계획은 교수학습 설계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졌다. 하지만 백워드 설계 모형은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평가 계획 단계가 수업 계획 단계보다 선행된

다. 각 단계는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1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2단계)’,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하기(3단계)’로 총 세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단원명은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이며, 총 16차시, 20개의 학습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의 학습을 마친 후 학생들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는 ‘통일 의지’이다. 평가는 3개의 수행과제와 기타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각 수행과제는 ‘통일 노래 만들기’,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원 포트폴리오 만들기’이다. 수행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타 평가 자료는 동료 평가와 세 번째 수행 과제의 관객이 되는 가족의 평가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막연하게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통일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양한 교과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 통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 문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통일을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초등학교, 통일교육, 융합 교육, 백워드 설계 모형, 이해중심 교육과정

I. 논의를 시작하며

과연 통일은 ‘우리의 소원’일까. 「2020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의 52.8%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¹⁾했으나, 24.7%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²⁾했다(김범수 외, 2021).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떨까? 통일부와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62.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4.2%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통일부, 2020).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더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인이 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간의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유지하기에 부족했다는 간접증거인 셈이다.

통일교육을 이론과 실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론적 측면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70년 분단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다소 달라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이 지점은 다문화 교육의 본질과 일정부분 같은 영역을 공유할 것이다.³⁾ 그런데도 다문화 교육에 관한 관심에 비해 통일교육에 관한 관심은 현저하게 적다. 종합대학의 일반대학원이나 교육전문대학원,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전문대학원에서 다문화 교육 전공

1) ‘매우 필요하다’ 와 ‘약간 필요하다’ 라고 답한 경우

2) ‘전혀 필요하지 않다’ 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 라고 답한 경우

3)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통일 담론은 다문화 사회 관련 담론과 구분하여 논의됐다. 다문화 사회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이라 종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 통일 담론은 ‘다문화 사회’ 라는 거대 담론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통일 문제는 독일을 제외하면 국제 사회에서 논의될 필요조차 없었으며, 현재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분단된 국가는 우리나라와 북한뿐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깊게 동의한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통일 담론과 다문화 담론은 동일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며, 보다 이론적 기반이 튼튼한 다문화 사회 담론이 통일 담론에 적용되면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다. 전재영(2011)이 초등도덕과에서 통일교육을 다문화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은 있지만, 통일교육 전공은 미미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통일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인력도,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통일은 아직 우리 사회가 직면하지 않은 일이고 다문화 사회는 현재진행형이기는 하나, 통일은 언젠가 닥칠 미래이며 준비된 미래는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다. 특히 태도나 실천을 비롯한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은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교육의 실제적 측면은 통일부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2020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 중 교육 자료 부족을 62점으로 가장 높게 꼽았고 교육 목표와 방향성 혼란, 교육 시수 부족이 그 뒤를 이었다(통일부, 2020). 여러 선행연구(이수경, 2001; 서미옥, 2005; 박지영, 2017; 김아현, 2020)에서도 특정 교과와 학습 내용을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뿐, 체계적이고 완성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통일교육 시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점이 눈에 띈다. 매년 통일교육 주관을 운영하고 있고 90%에 가까운 교사가 이를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교과수업 중 통일교육을 실시한 시간에 관한 질문에 1시간에서 2시간이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한 시간도 1~2시간이 55.1%로 가장 높았다. 물론 통일을 다루는 성취기준은 도덕과에서는 3-4학년군에 1개, 5-6학년군에 1개이고, 사회과에서는 5-6학년군에 1개이다. 하나의 성취기준을 약 4차시에 걸쳐 다루는 관행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랐을 때 한 학년에 통일을 다루는 차시는 대략 2~4차시에 불과하다.⁴⁾ 이 시간은 가치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특정 프로그램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최소한 15차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질적인 측면을 차지해 두고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 초등학교의 경우 한 차시는 40분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마저도 초등학교에서 통일을 다루는 교과는 도덕과와 사회과가 유일하다. 이는 음악 교과서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악에 대해 알아보는 소단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 교과서 삽화에서는 다양한 인종을 그리는 등 여러 교과가 다문화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과 사뭇 차이를 보인다. 미래에 살아갈 통일 사회는 우리 삶의 문제이며 도덕과와 사회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와 닿아있다. 사용하는 말의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은 국어과, 공유하는 문화 예술이 다른 점은 국어과의 문학 영역과 음악과, 미술과 등 모든 교과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은 도덕과나 사회과 같은 특정 교과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가 통·융합된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교과 간 통·융합이 원활하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비교적 어린 연령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ggins와 McTighe(2005)에 의해 개발된 백워드 설계 모형(Backward Design)을 적용하여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음악과, 미술과를 융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백워드 설계 모형은 삶의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백워드 설계 모형뿐 아니라 융합 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목표와 이상이 유사한 모형과 이론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적용해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일 것이다. 융합 교육을 바탕으로 한 본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교육 자료의 부족과 도덕과와 사회과에서만 통일을 다루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교과에 배정된 시수를 활용하여 각 교과의 학습 내용과 통일교육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시수가 부족한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융합 교육

가치 있는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으로서 학교가 갖는 권위는 추락한 지 오래다.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학교를 통해서만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도 자연스럽게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가르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 교육이 선택한 방법은 기존의 지식 중심 교육에서 개념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습득할 수 있는 역량(competency)과 여러 문제가 얽혀 복잡해진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융합 교육은 교육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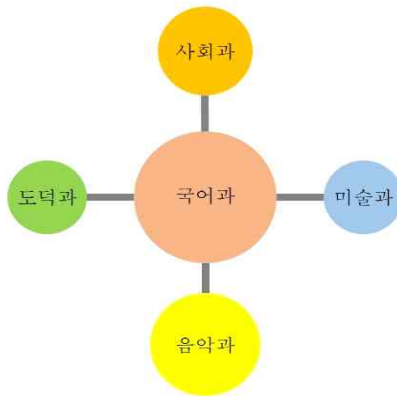
학교 현장을 비롯하여 학술적인 논의에서조차 융합 교육과 함께, 또는 융합 교육을 대신하여 통합, 융복합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통합 교육과 융합 교육은 구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의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Drake(1993)는 통합을 학문적 형태의 통합과 교육적 형태의 통합으로 구분했다. 학문적 형태의 통합에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통합, 학제적(interdisciplinary) 통합,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통합이 있으며 다학문적 통합에서 초학문적 통합으로 갈수록 통합의 정도가 강해진다. 교육적 형태의 통합에는 개념 중심(concept-centered) 통합과 이슈 중심(issue-centered) 통합이 있으며, 개념 중심 통합보다는 이슈 중심 통합이 통합 정도가 강하다.

이 구분은 교과 간 통합,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 융합 교육 등 여러 관련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에 따라 번역이 달라졌고, 융합 교육과 통합 교육의 구분도 모호해졌다. 김용희(2016)에 따르면 통합 교육(interdisciplinary education)과 융합 교육(integrated education) 모두 서로 다른 영역의 학습 내용을 의미 있게 모은 것을 말하지만 융합 교육은 더욱 강한 정도의 통합이 이루어져 새로운 교과를 만들어 내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서 통합 교육은 Drake(1993)의 구분에서 학제적 통합에 해당한다. 박휴용(2018)은 통합과 융합의 정의를 내린 후 교육과정 통합과 교육과정 융합을 구분하였다. 박휴용(2018)에 따르면 통합(integration)은 부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보이고, 부분의 합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상태를 말한다. 반면에 융합(infusion)은 부분이 결합한 것을 넘어 부분의 구분이 무의미할 만큼 자연스럽게 뭉쳐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통합과 교육과정 융합을 살펴보면 이들은 두 가지 차이를 갖는다. 교육과정 통합이 하나의 교과 지식에 다른 교과 지식을 끼워 넣거나 결합하는 형식이라면, 교육과정 융합은 여러 교과를 동등하게 다루면서 교과 내용 간의 결속이 더욱 잘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통합은 지식이나 학문 영역을 우선 고려하고 이를 통합하여 현실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 교육과정 융합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먼저 인식한 후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학문의 역할을 정한다(박휴용,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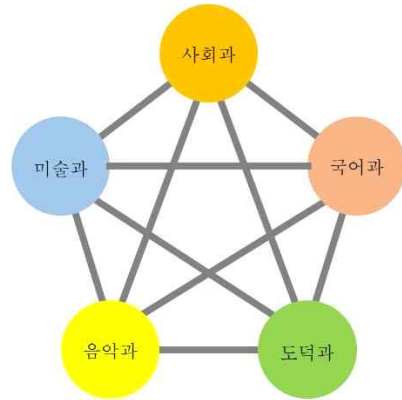
김용희(2016)는 integrated education을 융합 교육으로 번역하였지만, 박휴용(2018)은 integration을 통합이라 번역하고 융합은 infusion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통합 교육과 융합 교육에 대해 내리고 있는 정의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융합 교육은 통합 교육에 비해 더욱 강한 정도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합은 원래의 교과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새로운 하나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음악과, 미술과를 융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단원을 구성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융합 교육의 시작은 1960년대 미국에서 브루너(Bruner) 등을 필두로 이루어진 교육 개혁 정책이다. 구 소비에트 연방이 미국보다 스푸트니크 1호를 먼저 발사시키면서 미국 사회가 받은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로 미국 학생들의 수학·과학 학력에 관심이 쏠렸다. 그 시기에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STS(Science, Technology, Society)나 MTS(Mathematics, Technology, Society) 교육이 등장했고 이들이 융합 교육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등장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이나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교육도 특정 교과가 추가되거나 빠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사조는 크게 변함이 없다. 과학기술 인재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STEM 교육에서 A(Art)가 추가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 관련 교과는 도구적 성격에 한정되었다. 석문주, 최미영, 정다은과 정지혜(2014)가 STEAM 교육에서 음악과가 갖는 도구적 지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그간 도구적 성격에 그쳤던 음악과의 지위를 제고하여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결국에는 다른 교과가 도구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

STEAM 교육을 비롯한 융합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정효, 2015; 한윤이, 2015; 이소율, 이영준, 2017; 남혜원, 2020).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각 교과 교육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하므로 깊이 있는 논의를 가능케 한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을 갖는다. 구심점이 명확하다는 것은 그 구조가 분명하고 체계화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와해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심점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각 요소는 그저 독립된 개체일 뿐이다.



[그림 1]



[그림 2]

위의 [그림 1]과 [그림 2]를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림의 각 원이 융합의 대상이 되는 교과라고 한다면,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융합하는 경우 [그림 1]의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국어과를 중심으로 융합 교육 방안을 구상한다면, [그림 1]의 가운데 원에 국어과가 위치하게 되고, 음악, 미술, 도덕 등 나머지 교과들은 그 주변에 위치한다. 국어과와 음악과, 국어과와 미술과, 국어과와 도덕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음악과, 미술과, 도덕과는 서로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 한편 [그림 2]의 경우에는 특정 교과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 국어, 음악, 미술, 도덕 등 융합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교과가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그 구조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각 교과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 교과가 융합된 새로운 맥락 속에서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 [그림 1]보다는 [그림 2]의 관계가 교과의 벽을 넘어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융합의 본질에 가깝다. 즉,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하다 보면 각 교과가 분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과 간 통합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교과를 만들어 내는 ‘융합’의 수준에 이르기 어렵다.⁵⁾

5) 융합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것은 많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분야를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여러 교과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융합 교육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구하지 않았던 타 교과의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CK)과 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Knowledge, PK)이 필요하다.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에서

2. 통일교육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냉전 이후 이념 갈등을 이유로 분단된 유일한 국가이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배경에 의해 생겨난 개념으로 통일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담론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남북관계에 따라 그동안 통일교육의 기초는 달라져 왔다. 제7차 교육과정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199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⁶⁾ 6·25전쟁 이후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시기에는 통일교육도 반공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미군정기와 교수요목기를 제외하고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시기부터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시기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반공도덕 생활이 도덕과 교육과정의 한 영역을 차지할 만큼 반공 교육이 강화되었고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국가와 반공 생활 영역을 50~60%로 늘리기도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 시기에는 통일 안보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동안은 도덕과의 영역 중 하나가 ‘반공 생활’이었다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안보 생활’로 바뀌었다. 북한을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적개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가능성을 보고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변화한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통일대비 교육의 관점을 가진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개인, 가정·이웃, 시민, 국가, 통일·안보로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6차 교육과정에서는 개인,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아와 김창원(2016)의 연구가 참고할만한 시도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문학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임에도 문학에서 본 음악과 음악에서 본 문학 모두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한편 여러 교과 교육학 전공자들이 협업하여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6)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과정 대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7차 교육과정 후에 고시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7차 교육과정 문서보다 통일교육의 변화를 자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7차 교육과정 문서를 참고하였다.

가정·이웃·학교, 사회, 국가·민족 총 4개 영역으로 조정되었다. 반공 교육의 관점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통일교육에서 통일과 안보를 강조하는 관점을 거쳐 민족을 강조하고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으로 변화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법적 근거를 갖는다. 통일교육 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원칙, 통일교육 주간 등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법령이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 4항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학교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론질 해 볼 수 있다.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집단은 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3.5%였지만, 학생들은 학교 통일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6%에 그쳤다(통일부, 2020). 교사는 가르친 경험이 있지만, 학생들은 배운 경험이 없는 이 현실은 학교 통일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한편 학교 통일교육 형태에 대한 문항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모두 83.3%로 동영상 시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방법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동영상 시청이 28.4%로 가장 높았고 토론식 수업이 20.2%, 현장 견학 등 체험학습이 15.2%, 퀴즈·통일 관련 게임·이벤트 방식이 14.1%로 그 뒤를 따랐다. 동영상 시청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28.4%에 불과하지만 아직 동영상 시청에 의존하고 있는 교사는 83.3%에 이른다. 교사 집단도 통일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통일교육 방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백워드 설계 모형(Backward Design)

널리 알려진 교육과정 개발 모형 혹은 교수 설계 모형에는 타일러(Tyler)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ADDIE 모형⁷⁾, 딕과 캐리(Dick, Carey & Carey)의 체계적 교수 설계 모형, 스미스와 라간(Smith &

Ragan) 모형, ASSURE 모형⁸⁾ 등이 있다. 여러 모형 중에서 Wiggins와 McTighe(2005)의 백워드 설계 모형은 전통적으로 사용된 타일러의 모형 등이 목표를 설정한 후 내용, 평가를 설계하는 포워드(forward) 설계를 사용한 것과 달리 백워드(backward) 설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즉,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하기'의 총 3단계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학습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평가를 수업 설계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각 단계의 순서가 다르지만, 교수 설계과정을 목표 설정, 수업 계획, 평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일러 모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핵심 개념과 빅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점은 브루너(Bruner)의 지식의 구조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핵심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실제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평가를 참평가(authentic assessment)라고 하였으며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에 전이할 수 있으려면 평가도 실제 삶의 맥락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⁹⁾ 백워드 설계 모형의 이러한 특징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교수학습과 평가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의 개념 또한 학습의 전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취지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교수 설계 모형이라 볼 수 있다.

7)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첫머리

8) 학습자 분석(Analyze learners), 수업 목표 진술(State objectives), 교수 방법 및 자료 선택(Select method, media and materials), 교수 자료 활용(Utilize media and materials), 학습자 참여요구(Require learners participation), 평가 및 수정(Evaluation and revise)의 첫머리

9) 참평가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학습자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등이 특징이다. 참평가는 흔히 알려진 수행평가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다. 참평가는 '실제적인 맥락'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생의 수행이 동반된다. 수행평가도 참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습 과정과 성장을 중시하지만, 반드시 실제적인 맥락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참평가를 포괄하는 더 큰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차시 수준이 아닌 단원 수준의 수업을 설계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계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영속적 이해(eduring understanding)를 최종 목표로 수업 후 도달해 있을 학습자의 모습을 설정해야 한다. 이때 교수는 국가 수준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빅 아이디어를 분석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목의 내용 체계에서 ‘일반화된 지식’으로 빅 아이디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박일수, 2016). 그 후 이해의 여섯 측면(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을 설정한다. 이해의 여섯 측면이란 진정한 이해에 도달했다면 할 수 있는 여섯 가지에 대한 것으로 각 항목의 자세한 의미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영속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자극하는 탐구 질문의 형태인 본질적인 질문(essential question)을 구상한다.

<표 1> 이해의 여섯 측면

이해의 종류	정의
설명(explanation)	일반화와 원리를 통해 현상사실자료에 대한 정당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여러 개념 사이에) 통찰력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고 이해를 돕는 예시를 제시할 수 있는 것
해석(interpretation)	의미 있게 말하기, 적절하게 변형하기, 사상과 사건에 대해 역사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이미지·일화·비유·모델을 활용하여 대상을 이해하기
적용(application)	알고 있는 것을 다양하고 실제적인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
관점(perspective)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큰 그림 보기
공감(empathy)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가치 찾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감하게 인식하기
자기지식 (self-knowledge)	메타 인지적 자각을 보이는 것, 이해를 형성하거나 방해하는 개인적 스타일·편견·투사·사고의 습관을 인지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학습과 경험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것

2) 2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두 번째 단계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에서는 평가 계획이 이루어진다. 수업 계획에 앞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백워드 설계 모형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단계로, 이해의 여섯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수행 과제와 수행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루브릭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GRASPS 기법¹⁰⁾을 활용하여 수행 과제를 개발하게 된다. GRASPS 기법은 수행 과제의 목표, 수행 과제에서 학생들의 역할, 청중, 상황,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진술, 평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수행 과제를 계획하는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수행 과제를 제외한 퀴즈, 교사의 관찰,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등 기타 평가 방법도 고안해야 한다.

3) 3단계: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하기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발하며, WHERETO 요소 일곱 가지가 수업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WHERETO 요소의 의미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WHERETO 요소

요소	의미
W(Where, Why)	학습자가 단원이 어디(Where)로 향하고, 왜(Why) 그런지 아는 것
H(Hook, Hold)	수업의 도입부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Hook), 관심을 수업 내내 유지하는(Hold) 것
E1(Equip)	수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 도구, 지식,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준비시키는(Equip) 것
R(Rethink, Reflect, Revise)	학습자가 빅 아이디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Rethink), 학습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보고(Reflect), 자신의 수행을 수정(Revise)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E2(Evaluate)	학습 과정을 스스로 평가(Evaluate)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T(Tailor)	학습자의 재능, 흥미, 스타일, 필요를 반영하여 조정하는(Tailor) 것
O(Organize)	(피상적인 범위와 반대되는) 깊은 이해에 최적화되게끔 조직하는 것

10) 목표(Goal), 역할(Role), 청중(Audience), 상황(Situation), 수행(Performance), 기준(Standard)의 첫머리

Ⅲ. 본론

1.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McTighe와 Wiggins(2004)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돕기 위한 템플릿을 제시하였다. 이 템플릿을 바탕으로 하되, 이지은과 강현석(2010), 김정자와 온정덕(2011), 박일수(2016), 손지현(2016)의 논의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을 거친 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총 7단계의 과정을 밟았으며 자세한 과정은 다음의 <표 3>¹¹⁾과 같다.

<표 3>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① 교육과정 분석	•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 분석 •통일을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탐색
	② 목표 설정	•영속적 이해 설정 •핵심 가치 개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통일교육 단원 성취기준 개발
	③ 이해의 여섯 측면 개발	•이해의 여섯 측면(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설정
	④ 본질적 질문 개발	•단원의 성취기준과 이해의 여섯 측면을 포괄하는 본질적 질문 개발
〈2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⑤ 수행 과제 개발	•GRASPS 기법을 활용한 수행 과제 개발
	⑥ 기타 평가 자료 개발	•수행 과제를 제외한 퀴즈, 자기 평가, 교사의 관찰 평가, 동료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도구 개발
〈3단계〉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하기	⑦ 단원 수업 계획	•WHERETO의 일곱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단원 수업 계획

11) 수정한 부분 중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1단계 > ② > 핵심 가치 개발’이다. McTighe와 Wiggins(2004)가 제시한 템플릿에는 핵심 개념과 핵심 기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핵심 가치로 수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가 ‘통일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실천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념이나 기능보다는 가치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였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다른 교과와 달리 핵심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도 핵심 개념이나 핵심 기능보다 핵심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적절하다.

2. 초등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표 3>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교육 단원을 개발하였다. 단원명은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이고, 초등학교 5-6학년군을 대상으로 하며, 총 16차시로 구성하였다.

1) 교육과정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는 도덕과와 사회과이다. 초등학교 도덕과와 사회과의 내용 체계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¹²⁾. 두 교과 모두 통일을 다루지만 접근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통일해야 하는 이유를 경제, 정치, 민족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다. 반면 도덕과는 핵심 가치인 정의를 바탕으로 인권과 인류애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은 꼭 필요한 일이며, 사회과처럼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통일에 관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정이다.

<표 4> 통일교육과 관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및 사회과 내용 체계 (교육부, 2015b; 2015c)

	영역	핵심 가치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도덕	사회 공동체 와의 관계	정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통일관과 인류애를 지닌다.	3-4 학년군	5-6 학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의식 •관점 채택하기 •공익에 기여하기 •봉사하기 ○도덕적 판단 능력 •도덕적 가치·덕목 이해하기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통일은 왜 필요할까? (통일의지, 애국심)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 (통일의지)	

12)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모두 옮겨왔다. 그중 밑줄 친 부분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임을 밝혀둔다. 또한 도덕과의 핵심 가치와 사회과의 핵심 개념은 서로 대응되는 용어이다.

	영역	핵심 가치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초등 학교	정치	국제 정치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국제 질서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구촌 평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남북통일	○조사하기, 분석하기, 참여하기, 토론하기, 비평하기, 의사 결정 하기
사회	정치· 문화사	대한민 국의 미래	우리나라는 남북통일과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해소를 통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	○역사적 상황 파악하기, 역사적 사실 탐구하기, 시대적 배경 이해하기, 추론하기

교과에 따라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며 다양한 가치를 기반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통일교육은 학교급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통일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교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학교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북한관과 통일관을 정립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다룬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다 실제적인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습 내용을 배열할 때 고려하는 일반적인 원칙에는 시·공간의 확장, 논리적 선후 관계, 활용 절차 및 빈도, 아동의 발달 단계 등이 있다(최용규, 정호범, 김영석, 박남수, 박용조, 2005).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 의지를 갖춘 후 실제적인 통일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비교적 고차 사고력이 발달한 시기에 통일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배열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이 점차 정교해진다는 점 역시 적합한 배열 순서라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초등학교 도덕과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성취 기준은 [4도03-03]¹³⁾과 [6도03-03]¹⁴⁾이고, 초등학교 사회과 정치·문

13) [4도03-03] 남북 분단 과정과 민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의지를 기른다.

14) [6도03-03] 도덕적 상상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른 과정을 탐구하고 이루어는 의지와 태도를 가진다.

화사 영역의 성취기준은 [6사08-02]¹⁵⁾이다(교육부, 2015b; 2015c). 3-4학년군에서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 의지를 기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배운다. 나아가 5-6학년군에서는 통일을 위해 노력한 점, 통일의 과정과 방법,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 3-4학년군에 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통일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통일교육에서 적용한 내용 배열의 원칙이 초등학교 내 학년군 사이에도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도덕과와 사회과를 제외한 교과에서는 통일을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어과와 음악과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제재를 다루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통일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등의 작품은 교육적 가치가 낮고,¹⁶⁾ 통일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의 과정과 방법, 통일 이후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룰 때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토의를 통해 학생들이 탐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이때 5-6학년군 국어과에서 토의와 토론에 대해 학습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덕과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이때 학생들이 작품집을 만드는 과정도 국어과와 미술과의 성취기준을 녹여낼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였을 때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과와 성취기준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15) [6사08-0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16) 좋은 작품의 조건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만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음악 작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작품도 최근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게끔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효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심청전이라는 작품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심청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는 작품보다는 독자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작품이 더욱 좋은 작품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둔 통일교육 프로그램 관련 성취기준
(교육부, 2015a; 2015b; 2015c; 2015d; 2015e)**

교과	영역	성취기준
국어	말하기듣기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쓰기	[6국03-05]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문학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6도03-03] 도덕적 상상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른 과정을 탐구하고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진다.
사회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6사08-0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음악	표현	[6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감상	[6음02-0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미술	표현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다.

2) 목표 설정

단원의 핵심 개념은 백워드 설계 모형의 영속적 이해에 해당하며 영속적 이해는 본 단원을 학습한 후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념보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 개념 대신 핵심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학습 요소로 민족 분단, 통일, 통일 의지, 통일 비용, 통일 편익 등을 꼽고 있다(교육부, 2015b). 이 중에서 ‘통일 의지’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다른 학습 요소에 비해 통일 의지는 통일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과 제재곡을 통해 분단 현실과 통일된 미래를 그려보고,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 본 단원의 영속적 이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어려움, 편익 등의 실제적인 미래 통일 사회를 그려보면

서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과 그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성취기준은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도달하기 원하는 지점, 즉 학습의 결과를 정하여 진술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5>를 재구성하여 아래의 <표 6>과 같은 성취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6> 초등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성취기준

성취기준	
[성취기준1]	통일과 관련된 작품을 감상하고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내면화하여 이를 노랫말 바꾸기로 표현할 수 있다.
[성취기준2]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3]	통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도덕적 상상하기를 통해 이를 이겨낸 미래 통일 사회를 예상할 수 있다.
[성취기준4]	올바른 통일의 과정을 알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3) 이해의 여섯 측면 개발

본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인 ‘통일 의지’, <표 6>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면 할 수 있는 이해의 여섯 측면(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을 개발하였다. 이해의 종류에 따라 학생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들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원의 여섯 가지 이해의 측면

이해의 종류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것
설명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한다. 북한의 다양한 문화를 설명한다.
해석	통일과 관련된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고 작품의 의미를 찾는다.
적용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관점	미래 통일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그릴 수 있다.
공감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
자기지식	통일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실천한다.

‘설명’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북한의 다양한 문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은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일의 의미를 알고 그 필요성을 설명할 때 적절한 근거를 들어 정당화해야 하며, 북한의 다양한 문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해를 돕는 예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과 관련해서는 통일과 관련된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해석의 정의에서 의미 있게 말하기 부분에 해당한다. ‘적용’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문제 해결 과정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관점’은 미래 통일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비판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관점인데 미래 통일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예측하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관점의 정의에 부합한다. ‘공감’은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지식’은 통일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정의에 따르면 자기지식은 이해의 다른 측면들에 비해 학습자 자신의 인지에 대한 인지를 의미하는 메타 인지적 성격을 갖는다. 학습 전반의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점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식적인 측면과 통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 등을 돌아볼 수 있고, 나아가 실천하는 것을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의 실천은 자기지식에 해당하는 동시에 본 단원의 목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핵심 가치인 ‘통일 의지’는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4) 본질적 질문 개발

Wiggins와 McTighe(2005)는 본질적 질문을 포괄적 본질적 질문과 제한적 본질적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포괄적 본질적 질문은 단원 전체 혹은 그를 초월한 이해와 연결되는 질문이고, 제한적 본질적 질문은 특정 주제

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이다.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원의 본질적 질문은 총 세 가지로 ‘통일은 왜 필요한가? (포괄적 본질적 질문)’, ‘통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한적 본질적 질문)’,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 (제한적 본질적 질문)’ 이다.

5) 수행 과제 개발

수행 과제 개발 기법으로 GRASPS 기법을 사용하였다. GRASPS 기법은 수행 과제의 목표(goal), 역할(role), 청중(audience), 상황(situation), 수행(performance), 기준(standard)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 과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세 가지의 수행 과제를 구성하였다.

(1) 첫 번째 수행 과제: 통일 노래 만들기

첫 번째 수행 과제는 ‘통일 노래 만들기’로 수행 과제의 목표는 기존의 노래에서 노랫말 바꾸기를 통하여 통일 노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후로 마땅한 통일 노래가 없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통일 노래 만들기를 수행 과제로 설정하였다. 다만, 곡 전체를 처음부터 작곡하는 것은 초등학생 학습자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비교적 친숙한 노랫말을 바꾸기 활동을 바탕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역할은 작사가가 되어 노랫말을 바꾸는 것이며, 관객 즉 대상은 노래를 발표하지 않는 학급 친구들이 된다. 상황은 학생들이 북한 어린이들과 만났을 때 같이 부를 수 있는 통일 동요를 만드는 것이다. 수행은 각 조별로 동요 ‘함께 걸어 좋은 길’, ‘내가 바라는 세상’, ‘난 네가 좋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중 하나를 골라 노랫말을 바꾸고 이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 수행 과제의 기준은 앞서 제시한 동요 중 한 곡을 고르고, 최소한 1절 이상의 가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주제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된 미래 등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야 하고, 가사 전달력이 우수하면서 리듬과 선율에 어울리는 노랫말로 바꾸어야 한다.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통일 노래 만들기

목표	노랫말 바꾸기를 통하여 통일 노래 만들기		
역할	작사가가 되어 노랫말을 바꾼다.		
관객	노래를 발표하지 않는 학급 친구들		
상황	북한 어린이와 같이 부를 수 있는 통일 동요 만들기		
수행	조별로 '함께 걸어 좋은 길', '내가 바라는 세상', '난 네가 좋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중 하나를 골라 노랫말을 바꾸고 이를 발표한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동요 중 한 곡을 고르고 최소한 1절 이상의 가사를 만들어야 한다. - 주제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된 미래 등 통일과 관련되어야 한다. - 가사가 잘 전달되는 노랫말이어야 한다. - 리듬과 선율에 어울리는 노랫말로 바꾸어야 한다. 		
평가			
	상	중	하
가사 전체를 완성했는가?	1절 이상의 가사를 완성하였다.	1절의 절반 정도 가사를 완성하였다.	1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양의 가사를 완성하였다.
가사의 주제가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가?	통일과 관련된 주제로 북한 어린이와 같이 부르기에 적합하다.	통일과 다소 관련은 없거나 북한 어린이와 같이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	통일과 전혀 관련 없으며, 북한 어린이와 같이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
가사 전달력이 우수한가?	가사가 잘 전달되는 노랫말이다.	부분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가사가 있다.	대부분의 가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바꾼 노랫말이 리듬과 선율에 어울리는가?	노랫말이 리듬과 선율에 잘 어울린다.	노랫말이 리듬이나 선율 중 하나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노랫말이 리듬과 선율 모두와 어울리지 않는다.

단, 주어진 동요의 가락을 일정 부분(ex. 부분 2부 합창으로 편곡, 뛰어가는 가락을 차례로 가는 가락으로 편곡 등) 바꾸는 경우 최종 평가에서 한 단계를 올린 등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모든 요소에서 '상' 등급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최상' 등급을 부여한다.

(2) 두 번째 수행 과제: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두 번째 수행 과제는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로 목표는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이다. 학생들은 어린이 기자가

되어 어린이 신문을 읽을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카드 뉴스를 만든다. 상황은 통일교육 주간을 맞아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신게 되어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이다. 수행은 북한의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를 조사하여 카드 뉴스로 만들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기준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야 하고, 카드 뉴스의 특성인 간결함과 가시성을 잘 살려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장으로 카드 뉴스를 구성할 경우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장 내외의 적당한 양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표 9>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목표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역할	어린이 기자가 되어 카드 뉴스를 만든다.		
관객	어린이 신문을 읽을 학교 구성원		
상황	어린이 신문 기자가 되어 통일교육 주간을 맞아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수행	북한의 문학, 미술, 음악 등을 조사하여 카드 뉴스로 만들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야 한다. -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면서 가시성이 좋아야 한다. - 적당한 양의 장(10장 내외)으로 카드 뉴스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			
	상	중	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가?	북한 문화의 특징, 역사, 우리나라 문화와의 차이 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	북한 문화의 특징, 역사, 우리나라 문화와의 차이 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북한 문화의 특징, 역사, 우리나라 문화와의 차이 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흡하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고 가시성 좋게 표현하였는가?	간결하고 가시성 좋게 표현하였다.	간결함이나 가시성 중 하나의 부분이 미흡하다.	간결함과 가시성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
적당한 양(10장 내외)으로 카드 뉴스를 구성했는가?	10장 내외(8장~12장)의 카드 뉴스로 구성하였다.	7장 이하 혹은 13장 이상의 카드 뉴스로 구성하였다.	5장 이하 혹은 15장 이상의 카드 뉴스로 구성하였다.

(3) 세 번째 수행 과제: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위 포트폴리오 만들기

세 번째 수행 과제는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원의 포트폴리오 만들기로, 본 단원의 학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단원을 학습하면서 참고했던 자료, 수행했던 과제 1과 2, 느낀 점 등 모든 학습 자료를 모아서 구성한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한 후 가족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소개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나눈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발표하는 과정을 강조한 이유는 자기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혔을 때 의지가 실천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평가는 포트폴리오에 학습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다섯 가지 종류의 학습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상’, 3가지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중’,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포함하고 있으면 ‘하’이다.

<표 10>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위 포트폴리오 만들기

목표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위 포트폴리오 만들기		
역할	가족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소개한다.		
관객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		
상황	가족들에게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통일에 대한 의지 등을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알리고 발표한다.		
수행	단원을 학습하면서 수행한 과제 1과 2, 참고한 자료, 통일 관련 토의 자료, 단원을 마치면서 느낀 점 등 모든 학습 자료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과제 1과 2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통일 과정의 어려움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했던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 단원을 마치면서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해야 한다. - 단원을 학습하면서 참고한 자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평가			
	상	중	하
이번 단원을 학습하면서 사용한 자료가 포트폴리오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수행과제 1, 수행과제 2, 통일 관련 토의 자료, 단원을 마치면서 느낀 점, 참고한 자료를 모두 (다섯 종류)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 중 2개 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 중 3개 이상 누락하였다.

6) 기타 평가 자료 개발

수행 과제 이외에도 학생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기타 평가 자료에는 퀴즈, 교사의 관찰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등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통일 의지를 갖추고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가치나 태도, 실천을 평가하기 위해 퀴즈는 적절한 평가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수행 과제 1은 조별 과제, 수행 과제 2와 3은 개인 과제이다. 수행 과제 1은 조별 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료 평가를 함께하고, 수행 과제 3은 가족의 평가를 함께한다. 이 평가는 수치화하거나 등급을 나누어 실시하지 않고, 더 나은 학습을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식을 따른다.

7) 단원 수업 계획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를 ‘통일 의지’로 정하고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원의 본질적 질문을 ‘통일은 왜 필요한가?’, ‘통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까?’,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로 설정하였다. 핵심 가치와 본질적 질문, WHERETO 요소를 고려하여 총 20개의 학습 요소, 16차시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자세한 수업 계획은 아래의 <표 11>에 담았으며 WHERETO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여준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본질적 질문에 해당한다.

<표 11>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원 수업 계획

차시	수업 계획	W	H	E1	R	E2	T	O
1~2	1. 통일은 왜 필요한가?	○						
	2. 아동 문학 「토끼와 원숭이」 읽고 감상 발표하기			○				○
	3. 하이든 현악 사중주 황제 2악장과 독일 국가 ‘독일인의 노래’ 3절 감상하기		○					
	4. 애국가의 가사와 독일 국가의 가사 비교하며 감상하기			○				○
3~4	5. 통일과 관련된 노래 찾아보기		○					○
	6. ‘함께 걸어 좋은 길’, ‘내가 버리는 세상’, ‘난 내가 좋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부르기							○
	7. 주어진 동요의 노랫말을 바꾸어 통일과 관련된 노래 만들어서 발표하기(모둠 활동)			○		○		
5	8. 북한말 골든벨		○					○
	9. 북한의 음악 조사하고 우리나라 음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조사학습, 모둠 활동)			○			○	
6	10. 북한의 미술 조사하고 우리나라 미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조사학습, 모둠 활동)			○			○	
7	11. 북한의 (아동) 문학 조사하고 우리나라 문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조사학습, 모둠 활동)			○			○	
8~9	12. 북한의 문화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		○		
10	13. 통일 직후 독일이 경험한 어려움 관련 자료 분석(경제, 의사소통, 차별, 이념의 차이 등)		○					○
	14. 토의의 방법,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
11	15. 통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집단 토의	○		○				
12	16. 통일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 모색(토의)			○	○			
13	17. 통일을 위해 노력한 점을 알아보고 미래 통일 사회를 상상하여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			○	
14	18.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쓰기			○	○			
15	19.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원을 학습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 정리하기			○	○	○		
16	20. 단원을 마무리하며 포트폴리오 완성하고 가족에게 발표할 준비하기					○		○

두 번째 학습 요소 ‘아동 문학 「토끼와 원숭이」 읽고 감상 발표하기’는 마성은(201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마성은(2018)은 「토끼와 원숭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자는 차시 내의 짧은 활

동에서는 5-6학년군이 다루기에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순한 감상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감상 경험과 비교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5-6학년군 학생들에게 더욱 적절할 것이다. 「토끼와 원숭이」 외에도 「삼인정과 강두수」¹⁷⁾와 같은 옛이야기나 전설을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식 표기와 띄어쓰기를 그대로 사용한 제재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에는 남북의 합의를 거쳐 새로운 표기법이 생기겠지만, 아직은 표준 맞춤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사이시옷이나 두음법칙과 관련하여서는 남북 사이에 좁히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한다. 두음법칙은 비교적 간단한 개념이니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작품을 감상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이시옷의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언제 사이시옷을 넣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 학습자에게 사이시옷을 전혀 넣지 않는 북한식 표기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띄어쓰기도 남한의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글 맞춤법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을 따르되 북한식 단어는 그대로 표기하여 주석을 달아 뜻을 밝혀주는 정도의 절충안이 적합할 것이다.

세 번째 학습 요소 ‘하이든 현악 사중주 황제 2악장과 독일 국가 「독일인의 노래」 3절 감상하기’와 네 번째 학습 요소 ‘애국가의 가사와 독일 국가의 가사 비교하며 감상하기’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학습 요소를 위한 기초 단계에 해당한다. 동시에 세 번째 학습 요소는 독일이 분단국가였지만 통일을 이뤄낸 역사가 있다는 것을 통해 통일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독일인의 노래」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황제 2악장의 가락에 가사를 붙인 것이다. 1절은 나치 독일 시절 널리 사용되어 현재는 불리지 않으며, 3절만 공식적인 독일 국가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인의 노래」 3절의 가사를 살펴보면 반복되는 가사가 있다. 바로 ‘통일¹⁸⁾과 정의와 자유’이다. 4절, 64마디의 애국가에

17) 한민족 통일시대 초등 국어 중학년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연구③ - 「우리말꽃」(읽기) 편(통일국어교육연구회, 2021)에 수록된 제재 중 하나이다.

18) 물론 「독일인의 노래」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통일’은 게르만 계열 국가의 통일

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과 사뭇 차이를 보인다. 국가(國歌)는 한 국가(國家)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담고 있다. 물론 애국가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일제 치하로, 남북 분단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국가의 가사에 통일의 가치를 담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분단 이후에도 가사의 수정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애국가를 비롯한 국기에 대한 맹세 등 국민의례에 ‘통일’의 가치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 오히려 국기에 대한 맹세 초기 맹세문¹⁹⁾은 ‘조국의 통일’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수정을 거치면서 삭제되었다. 세 번째 학습 요소와 네 번째 학습 요소에 걸쳐 애국가를 비롯하여 통일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통일 동요를 만드는 여섯 번째 학습 요소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북한의 음악·미술·문학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는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학습 요소는 학습자의 수준과 경험에 따라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 조사학습은 교수학습 방법 중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편에 속한다. 이미 프로젝트 학습이나 플립러닝 등을 경험한 학습자의 경우에 북한의 음악·미술·문학을 조사하는 것은 도전할 만한 과제이다. 하지만 교사 주도적인 수업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심지어 자료가 풍부한 편도 아닌 북한의 음악·미술·문학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사가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심화 탐구를 진행하는 방식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열두 번째 학습 요소 ‘북한의 문화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는 미술과 표현 영역 성취기준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다.’를 기반으로 하였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성취기준 [6미02-03]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은 시각

의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1절과 2절을 제외한 3절만 공식 국가로 채택한 후에도 ‘통일’의 의미가 게르만 계열 국가의 통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독과 서독이 분단된 이후 서독의 국가가 「독일인의 노래」 3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패전 후에는 ‘통일된 독일’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19)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미지에 대해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시각 기호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거나(김정희 외, 2019; 류재만 외, 2019; 송미영, 노영자, 이인숙, 박호민과 김의임, 2019; 이은적 외, 2019), 포스터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한다(안금희 외, 2019). 카드 뉴스 또한 포스터나 시각 기호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취기준 [6미02-03]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포스터나 시각 기호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학습자가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학습 요소의 조사학습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IV. 논의를 마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에 통일된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현재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다른 문화를 수용한다는 공통점을 갖는 다문화 교육보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교육 전공이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이 적어 통일교육 전문가가 적은 것이 그 배경일 수 있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교육 자료의 부족, 교육과정 시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통일교육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를 물었을 때 교육 자료 부족을 가장 높게 꼽았고, 본 연구는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 동영상을 이용한 통일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학습 맥락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통일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이며 도덕과와 사회과에 한정된 것

이 아님에도,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각 교과를 분절적으로 설계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특정 교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교과가 융합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Wiggins와 McTighe(2005)의 백워드 설계 모형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음악과, 미술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원은 총 16차시, 20개의 학습 요소, 3개의 학습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영속적 이해와 핵심 가치를 개발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8개를 재구성하여 단원 성취기준 4개를 설정하였다. 핵심 가치는 ‘통일 의지’이고, 다음으로 영속적 이해와 관련된 이해의 여섯 측면을 개발하면서 단원 전체의 목표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실천’으로 설정하였다. 단원의 성취기준과 이해의 여섯 측면을 포괄하는 본질적 질문으로는 ‘통일은 왜 필요할까?’, ‘통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까?’,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를 꼽았다. 핵심 가치와 단원 성취기준, 본질적 질문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제는 ‘통일 노래 만들기’,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함께 살아갈 미래 통일 사회 단원 포트폴리오 만들기’이다. 마지막으로 WHERETO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을 세웠다.

교과 간 융합은 통일교육 수업 시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실제적인 맥락에서 통일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 또한, 융합 교육의 출발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닿아 있다. 나아가 역량이 학습의 전이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융합 교육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백워드 설계 모형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향점이 같은 모형과 이론, 제도를 녹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북한의 음악, 문학, 미술 등 예술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아 적절한 작품이

나 제재곡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계의 입장과 달리 통일관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 예술 작품의 상당수가 체제를 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북한 예술 작품을 직접 다루기는 조심스러웠다. 아동 문학인 ‘토끼와 원숭이’도 비교적 민주주의의 색채가 강한 작품이며, 제재곡은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독일 국가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통일의 색채를 띠지 않는 한국 동요이다. 연구 초기에는 남북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이근복(2007)과 이가희(2018)의 연구를 참고했으나, 북한 교과서의 제재곡으로 하여 단원을 구성하기에는 연구자의 용기가 부족했다. 프로그램에는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두고 있음에도 본고에서 북한의 문학과 음악, 미술을 직접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부끄럽다. 더욱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남북 통일의 미래가 조금 더 다가와 화해의 시대가 도래한 그때 다시 연구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그저 우려였을 수도 있겠으나 이상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민요나 국악, 설화 등이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다. 남북한이 모두 뿌리로 인정하는 고려 시대의 문학 작품이나 통일 대비 초등학교 교과서의 북한 민요 제재곡에 관한 박지영(2019)의 연구, 국악을 통한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한 김아현(2020)의 연구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5차시는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본 연구는 16차시의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실험연구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길러주고 나아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Ⅲ) -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부 (2015a).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5].
- 교육부 (2015b).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6].
- 교육부 (2015c).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7]
- 교육부 (2015d).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12].
- 교육부 (2015e).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13].
- 김경자, 온정덕 (2011). **이해중심 교육과정**.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범수, 김병로, 김학재, 김희정, 박원호, 이종민, 최규빈, 임경훈, 최현정 (2021). **202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아현 (2020). 초등 음악수업에서 국악을 통한 통일교육 방향 및 내용. **교육논총**, 40(4), 97~124.
- 김용희 (2016). **창의적 음악교육**. 서울: 음악세계.
- 김정효 (2015). 미술과 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개발 원리 탐색. **조형교육**, 54, 101-135.
- 김정희, 허정임, 이은영, 최선희, 박명옥, 김호정, 권혁미 (2019). **초등학교 미술 5**. 서울: 동아
- 남혜원 (2020). 수학 중심의 융합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례 연구. **문화와 융합**, 42(9), 813~832.
- 류재만, 정희진, 구권한, 홍지수, 이쌍재, 이현아, 홍이진, 조우리, 김지현, 김해정 (2019). **초등학교 미술 5**. 서울: 천재교육
- 마성은 (2018).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가능성.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3, 343~368.
- 박지영 (2019). 통일 대비 초등학교 교과서의 북한 민요 제재곡 개발 연구. **음악교육연구**, 48(1), 75~99.
- 박일수 (2016).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한 초등학교 문학 단원 설계.

초등교육연구, 29(2), 129-153

- 박휴용 (2018). **융합 지식과 융합 교육과정**.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미옥 (2005).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연구: 북한동화와 통일과 관련된 주제의 동화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3, 57~80.
- 석문주, 최미영, 정다운, 정지혜 (2014). 음악 교과 중심의 초등 STEAM 프로그램 개발. **교과교육학연구**, 18(2), 365~385.
- 손지현 (2016). 백워드(Backward) 교육과정 모형의 미술과 적용 가능성 탐색. **미술과 교육**, 17(1), 29-51.
- 송미영, 노영자, 이인숙, 박호민, 김의임 (2019). **초등학교 미술 5**. 서울: 지학사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옥, 김종완 (2019). **초등학교 미술 5**. 서울: 천재교과서.
- 이가희 (2018). 남북한 초등(인민)학교 음악 교육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이근복 (2007). 남북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이상아, 김창원 (2016). 문학과 음악에 대한 범교과적 접근. **문학교육학**, 50, 57~83.
- 이수경 (2001). 통일대비 초등학교 미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조형교육**, 18, 65~89.
- 이소율, 이영준 (2017). SW교육 선도학교 사례 분석을 통한 SW교육 중심 초등 융합인재교육 방안. **융합 교육연구**, 3, 23-34.
- 이은적, 권현선, 위수지, 장윤경, 윤건령, 권보람 (2019). **초등학교 미술 5**. 서울: 비상
- 이지은, 강현석 (2010). 백워드 설계의 초등 수업 적용 가능성 탐색. **초등 교육연구**, 23(2), 383-409.
- 전재영 (2011).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가능성. **초등도덕교육**, 37, 37~59.

- 최용규, 정호범, 김영석, 박남수, 박용조 (2016).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수업
까지**. 과주: 교육과학사.
- 통일국어교육연구회 (2021). **한민족 통일시대 초등 국어 중학년 교육과
정·교과서 개발 연구③** - 「우리말꽃」(읽기)편. 서울: 미래엔
- 통일부 (2020).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 한윤이 (2015). 국악 중심 융합 교육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연구. **국악
교육연구**, 9(1), 237~264.
- Drake, S. M. (1993). Planning integrated curriculum: The call to
adventure.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250 North Pitt Street, Alexandria, VA 22314-1453.
- McTighe, J., & Wiggins, G. (2004). *Understanding by Design
Professional Development Workbook*.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SCD), 1703 North
Beauregard Street, Alexandria, VA 22311.
- Wiggins, G. P. &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 Vol.
Expanded 2nd ed.* Ascd.

장 려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 DMZ 지뢰 제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민정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비무장지대 지뢰지대 현황
- III. DMZ 지뢰 제거의 필요성
- IV.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 DMZ 지뢰 제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반도 대인지뢰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인지뢰금지조약의 남북한 동시가입’을 제안하였다.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병력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가장 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곳이다.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당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대인지뢰의 군사적 유용성’과 ‘민간인 피해 없음’을 이유로 가입을 유보했고, 현재까지 그 뜻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지뢰 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Norwegian People’s Aid)’에 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매년 민간인 지뢰 사고가 발생해 희생자가 약 1,000여 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현대의 고도로 발전된 기술에서 도태된 대인지뢰와 같은 재래식 무기의 처리문제는 군축의 필요성과 함께 민간인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먼저 ‘인도주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 그리고 ‘DMZ 평화적 이용’ 측면에서 비무장지대 내 대인지뢰 제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대인지뢰는 제거되어야 마땅하며, 꾸준히 제안되고 연구되어 온 DMZ 평화적 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뢰 제거 등 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논의를 토대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먼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여건

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둘째, 지뢰 문제를 군사가 아닌 정치로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지뢰제거 작업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인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선언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 실질적인 남북 군축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오히려 남북 군축협상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1992년에 체결된 군축 합의를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도 있고, 단계적 군축을 다룬 9.19 군사합의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 동시가입은 정체되어있는 남북한 군축합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넷째, 인도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한국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남북한이 함께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향후 우리 정부가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NGO와 중견국 연합 외교를 활용할 것’과 ‘재래식무기 군축과 비핵화 병행적 접근을 통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남북한이 협약에 서명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마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중 하나로 현행 지뢰 관련 국내법의 취약점을 언급하고, 보완할 점을 제시하였다.

대인지뢰 금지조약과 같은 비인도적 무기 금지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가이기주의를 초월한 ‘국제인도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루빨리 남북한이 함께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가입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자국의 지뢰 문제와 지뢰피해자들에 눈 감아온 우리 정부의 지뢰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서론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반도 대인지뢰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인지뢰금지조약의 남북한 동시가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유례없는 평화기를 맞았던 2018년에 남북 간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DMZ 내 초소를 철거하여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라며,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라는 말이다.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DMZ(Demilitarized zone)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병력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가장 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곳이다. 그야말로 ‘무장’한 비무장지대인 것이다. DMZ의 근거는 정전협정이다. 남북이 지뢰를 매설하고 경계초소를 설치한 행위는 명백히 협정을 위반한 행위다. 함께 합의한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아 ‘지뢰’라는 또 다른 전쟁이 초래되었다.

대인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또는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은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조약으로, 2021년 8월 기준으로 164개국이 서명하였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2개국도 가입과 별개로 대인지뢰를 사용하거나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국제레짐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현재 대인지뢰 금지협약은 ‘대인지뢰 사용 전면적 금지’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여 가입국들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오타와 협약 당시 “오타와 협약의 취지와 목적은 지지하지만, 한반도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조약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2019년 12월 열린 유엔총회에서 대인지뢰 금지조약의 보편화와 대인지뢰 전면적 금지 관련 투표에서 기권

했고, 2018년에도 기권표를 던졌다. 이처럼 남한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남침 위협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근거로 하여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에 앞서 항상 제기되는 우려는 ‘지뢰’다.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에 전 세계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작 세계 80% 이상이 참여하는 대인지뢰 금지조약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한반도는 세계에서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DMZ 지뢰 매설량은 100만 개, 한국전쟁 때 매설되었거나 전후 미군에 의해 매설된 것을 포함하면 200만 발가량의 지뢰가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대전차 부대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뢰의 사용이 필요하며,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 주한미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홀링워스 장군과 같은 군사전문가들은 “대인지뢰가 실제로 북한군 공격에서 오히려 미군과 한국군의 기동을 방해할 것”이라며, 지뢰에 의존한다면 오히려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전 세계 지뢰 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Norwegian People’s Aid)’에 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매년 민간인 지뢰 사고가 발생해 희생자가 약 1,000여 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현대의 고도로 발전된 기술에서도 태워진 대인지뢰와 같은 재래식 무기의 처리문제는 군축의 필요성과 함께 민간인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인지뢰 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확인 지뢰지대’의 문제의 심각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DMZ 내 지뢰가 제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앞선 논의를 토대로 4장에서는 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전협정에 따라 합의된 비무장지대가 진정한 평화지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II. 비무장지대 지뢰지대 현황

1. 지뢰 매설현황

국방부가 보고한 비무장지대 내부의 공식적인 지뢰 매설량은 분명하지 않다. 현재 한반도 전체 지뢰 매설 추정지역은 약 6억6118만 제곱미터로 2016년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DMZ 전역에만 52만 발, 민간인출입통제선(CCZ) 북쪽은 74만 발, 남쪽은 1만 발로 남한 측에만 약 127만 발, 북한 측은 약 80만 발로 총 200만 발 정도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2018년 합동참모본부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MZ 786개소에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었다. 민통선 이북의 433개소까지 포함하면 모두 77만 발에 달한다.²⁾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지뢰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에 의해 10만여 발이 매설됐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매설되었다. 특히 1960년대에 미군이 민통선에 집중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는데, 1970년대에 민통선에서 철수하면서 관련 정보를 한국에 이양해주지 않아 대부분은 미확인 지뢰로 남았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유엔군사령부는 민통선 주변에 지뢰를 매설했고, 1968년 북한군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했던 1·21사태와 1969년 북한 간첩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YS-11) 납치 사건 때도 DMZ와 민통선 일원에 지뢰를 매설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이 있던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지뢰가 매설되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9월 박성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뢰 매설량은 82만 8천 발이다.³⁾

1) 김희윤, [DMZ 지뢰제거] 한반도 매설 지뢰, 종류와 양은 얼마?, 아시아경제 (2018.10.02.)

2) 김준일 외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뉴스톱, (2019.09.25.).

3) [보도자료], 철원군 이길리, 어디서 언제 지뢰 터질지 몰라, 녹색연합 (2020.10.16.).

<표 1> 우리나라 지뢰 매설 현황(추정), 합동참모본부 2020.09. (박성준 의원)

구분	계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통선이남)	후방지역	
		비무장지대 (DMZ)	민통선 이북		방공진지	서북도서
개소	1,308	786	433	22	37	30
면적(만 m ²)	12,816	1003	11,478	247	27	61
지뢰 수(천발)	828	380	389	50	3	

하지만 이 역시 추정일뿐 지뢰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묻혔는지 정확한 현황은 아무도 모른다. 대인지뢰 제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역시 추정치마다 다르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최근 10년간 국방부는 총 56억 2200만 원을 투입해 6만 2000발의 지뢰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속도와 비용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0년간 국방부 예산이 370조인 것에 비하면 지뢰제거에 쓰인 비용은 0.01%도 되지 않는다. 19대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거 속도로 진행할 경우 한반도 내 모든 지뢰 제거에만 약 469년이 소요되며, 예산만 1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서울신문은 국방부가 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의 지뢰 제거에 걸린 시간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DMZ 내 모든 지뢰를 제거에 20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존 장비 노후화와 예산 문제 등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⁵⁾ 이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 당시 언급한 15년은 매우 낙관적인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녹색연합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DMZ, 민북지역, 접경지역에서 제거한 지뢰 현황을 보면 제거한 지뢰 수는 3천여 발밖에 되지 않는다.

4) 김희윤, “[DMZ 지뢰제거] 한반도 매설 지뢰, 종류와 양은 얼마?”, 아시아경제 (2018.10.02.).

5) 김준일 외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뉴스톱, (2019.09.25.).

**<표 2> DMZ, 민북지역, 접경지역 지뢰 제거 현황 녹색연합 정보공개청구
(국방부, 2020.10.07)**

지역	DMZ	민북지역	접경지역
지뢰 제거 수량	600여 발	800여 발	1,400여 발

*접경지역 중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용진군 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전 시행

지뢰는 목표에 따라 공격 대상이 사람인 대인지뢰와 탱크를 공격하는 대전차지뢰로 나뉜다. 현재 DMZ에 매설된 한국군 지뢰는 대인지뢰 M2·M3·M14·M16, 대전차 지뢰 M6·M7·M15·M19가 있다. 흔히 ‘발목 지뢰’라고 불리는 대인지뢰 M14는 밟으면 발목이 날아간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무게는 90g 정도로 매우 가벼우며, 크기도 참치캔 정도로 매우 작다. 북한군의 지뢰는 한국전쟁 때부터 주로 구소련에서 개발된 지뢰를 들여 매설해왔으며 최근에는 위력 및 성능을 향상시킨 개량형 지뢰를 자체 개발하여 재래식 지뢰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매설한 대인지뢰는 목함지뢰(PMD-57)·수지재지뢰(PMN)·강구지뢰(BBM-82)가 있으며, 대전차지뢰로 ATM-75 반땅크지뢰·TMD-B 반땅크지뢰(북한명: 목함 반땅크지뢰)·TMD-44/-64 반땅크지뢰 등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도입된 재래식 지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능보완 지뢰 및 서구권의 신형 자기감응지뢰와 유사한 지뢰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명지·박민규, 2015)

2. 지뢰지대

대인지뢰가 매설된 곳은 크게 ‘계획지뢰지대’와 ‘미확인지뢰지대’로 분류된다. 계획지뢰지대는 군부대가 적의 침투를 봉쇄하고 방어할 목적으로 선정된 지역에 계획적으로 매설한 지뢰지대다. 비무장지대 전 지역 주요 방어 지점에 만들어져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지형적 특성에 따라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등을 집중적으로 매설했다. 지뢰 수, 매설방법, 매설 위치 등의 정보를 해당 작전 군부대가 관리카드로 가지고

있으며, 관리카드를 바탕으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계획지뢰지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뢰 제거를 위한 탐지가 손쉽다. 그러나 일부 계획지뢰지대는 매설지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인민군은 지뢰지대 대신 ‘지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북한은 북방 한계선 철책선인 고압전선 바로 남쪽으로 수십에서 수백 미터의 폭으로 전시 대비 방어 목적으로 지뢰원을 설치해 놓았다. 주로 구소련과 중국이 사용하던 목함지뢰, 플라스틱지뢰, 대전차지뢰 등이 심어져 있다.

문제는 ‘미확인지뢰지대’다. 미확인지뢰지대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나 누가, 언제, 어떤 종류의 지뢰를 어떤 방법으로 매설했는지 등의 정보 및 매설지도가 없는 지뢰지대를 말한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미군, 중국군, 인민군 할 것 없이 비무장지대 전 지역에 걸쳐 대량의 지뢰가 살포되었고, 미군이 자신의 기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뢰를 매설했으나 정작 기지 철수 당시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 지뢰의 종류부터 수량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해당 지역 군부대 및 관련 군 당국의 실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지뢰지대와 달리 ‘실태를 모르는’ 미확인지뢰지대의 경우 대인지뢰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내 미확인지뢰지대는 총 202개소이며, 면적은 한국의 전체 지뢰지대의 84%에 달한다.

비무장지대는 유엔군사령부의 관할 아래 국군이 경계작전을 하는 곳이므로 암묵적으로 군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를 한 적은 없다. 민통선 경계선부터 GOP 철책선 사이의 민북지역도 대부분 미확인지뢰지대로 분류된다.⁶⁾ 비무장지대와 민북지역 대인지뢰 문제는 바로 미확인지뢰지대의 위험성에서 초래된다.

6) 서부전선의 과주와 연천, 중부 전선의 철원에는 민북지역에 농경지가 상당하다.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매우 자주 출입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논이나 밭 바로 옆의 숲속이나 산림지역 대부분이 미확인지뢰지대이며, 중동부전선과 동부전선의 광활한 산림지대도 대부분 미확인지뢰지대다. 민북지역에 비해 비무장지대 내부는 상대적으로 적절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3. 비무장지대와 민북지역 대인지뢰 문제



[그림 1] DMZ와 민간인통제선(CCZ)_출처: 경기관광포털

휴전선 위, 아래에 각각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있고, 남방한계선의 남쪽으로 5~10km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다. 민통선은 DMZ와 접하는 지역뿐 아니라 남방한계선이 맞닿아 있는 시·군의 일부 범위에도 걸쳐있다. 통제선 위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고, 토지나 농경지 등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명목으로 지뢰 제거 작업이 꽤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민통선 이남 지뢰지대는 아직 완벽히 제거된 곳이 하나도 없다. 1993년 이래 정부가 세 차례 민통선을 북상 조정했으나 지뢰를 신속히 제거하지 않아 민간인 지뢰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2007년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편으로 민통선과 경계초소의 위치가 북상하면서 지뢰지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과 해제구역으로 변경됐지만, 이 과정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북상한 적은 없다. 계획지뢰지대 및 미확인지뢰지대 대부분이 바로 이 불명확한 민통선 경계에 있다.⁷⁾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 지뢰지대의 주요 문제점으로서 첫째, 부실한 지

7)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peace-and-ecology/dmz/66898/>

되 제거 및 관리가 있다. 민통선의 경우 세 차례 복상 조정하였으나 단 한 번도 지뢰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없으며,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체된 지뢰지대는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과거 지뢰지대’라는 불명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민간인에게 들어가도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하거나, 지뢰지대 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경고문 및 경계펜스가 없는 등 현재 지뢰지대는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유실된 지뢰로 인한 사고다. 매년 폭우와 홍수로 인한 지뢰 유실사고나 자연재해나 지형변화로 인해 지뢰의 위치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유실 지뢰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회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특히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까지 떠내려오거나, 한국군이 매설한 M14대인지뢰의 경우 크기가 작고 가벼워 지뢰의 특징을 모르는 민간인들에 의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지뢰 관련 법인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전과 규제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지뢰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지뢰지대 관리를 위한 경고문이나 지뢰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안전지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펜스 등 법적으로 지뢰지대를 구분하는 구조물에 대한 규격 및 관리 기준도 없다. 이러한 부실한 관리로 2020년 한 해에 유실된 지뢰만 305발에 이른다.⁸⁾ 이처럼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뢰지대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 관한 법률인 「민간인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역시 최근에야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되었지만 겨우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상될 뿐이다.

마지막 문제점은 지뢰가 방치된 채 지뢰지대가 민간에게 개방되고 있는 점이다. 민통선 지역 주민들은 지뢰의 위험과 더불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도로사업이나 관광사업 등 지뢰를 제거하지 않은 채 개

8)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peace-and-ecology/dmz/88942/>

발하고 개방하여 민간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평화누리자전거길, DMZ 철새평화타운 등 관광자원에도 지뢰지대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남북교류사업의 성과만을 강조하며 정작 선행되어야 할 지뢰제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DMZ 지뢰 제거의 필요성

1. 대인지뢰 사용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우리나라 정부는 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우리나라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뢰는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무기이다.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사력 배치상황이나 한국 지형을 고려할 때 남북간의 지상전 양상은 기계화부대를 주축으로 하는 고속기동전 및 화력전이 될 것이다.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속전속결 전략으로 단기간 내에 수도권을 점령하고 미군 전력이 증원되기 전 3일 이내에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들은 단기간 내에 수도 서울을 휩쓸고 이어 최남단까지 접수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도 서울은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25마일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적 미사일 및 대포의 사정권 내에 있으며, 기동거리가 짧아 북한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서울의 안전은 북한의 고도로 기계화되고 중무장된 북한군을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지대는 한국 방어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가장 신뢰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

둘째, 지뢰는 전쟁 발발을 막음으로써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으며,

9) 이장희(1999)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161-165p.

실제 인명피해의 감소를 가져온다. 1996년 한반도 방어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위게임 결과 지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일 수천 명의 군 사상자와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군사작전 실패로 인한 엄청난 민간피해까지 고려한다면 한국 방어를 위한 지뢰사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셋째, 다른 분쟁지역 국가와는 달리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지뢰는 제한된 지역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어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다. 현재 한반도에서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비무장지대이며, 지뢰는 철책으로 차단되어 있고 철저히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다. 또한, 모든 지뢰지대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매설된 지뢰의 수량이나 위치에 대한 제원도 한국군에 의해 기록 및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캄보디아나 앙골라 같은 지뢰 피해는 전혀 없으며 한국군은 CCW 지뢰의정서 규정에 따라 지뢰를 사용함으로써 지뢰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남침 위협이 현존하는 한국의 독특한 안보 상황 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방어를 위한 지뢰사용이 불가피하며, 대인지뢰가 DMZ에만 매설되어 있고, 철저히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2. 지뢰 제거의 필요성: 인도주의적 측면

대인지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이슈다. 대인지뢰 금지와 제거 운동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대인지뢰 금지협약뿐 아니라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과 핵무기금지협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n Nuclear Weapons: TRNW)의 체결은 무엇보다 NGO들의 역할이 컸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가와 국제기구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정보화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NGO들은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로 급부상하였다. NGO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NGO들

은 환경, 인권 등 국제적 이슈나 국가와 시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Keck과 Sikkink에 의하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NGO들의 영향력은 근대국가 권력의 절대적 근간인 군사주권에 도전하는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hard power)가 아닌 지식이나 규범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서 나온다. 또한, NGO들은 새로운 인식 틀의 구성(construction of cognitive frame)을 통해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원하는 변화를 낳을 수 있다.

대인지뢰 금지운동(ICBL) 등 당시 NGO들은 비인도적 무기의 문제를 인도주의의 문제로 프레이밍하였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사진이나 증언을 활용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대인지뢰를 인도주의적 비극이라고 각인시켰고, 비인도적인 무기의 문제는 국가나 정부 당국자들만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을 전환했다. 즉, 대인지뢰는 곧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의 프레임이 형성하고, 대인지뢰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하고 확산시켜 나갔다. Keck과 Sikkink은 대인지뢰의 취약한 개인들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다는 점이 국경을 넘어 보다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이슈 속성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인택, 2019; 재인용)

다음은 대인지뢰 사용·비축·생산 및 이전의 금지와 폐기를 위한 협약의 전문의 일부이다.

협약 가입국들은 대인지뢰로 인한 사상 및 고통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지뢰는 매주 수백 명의 인명을 살상하거나 불구자로 만들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무고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민간인들이며 특히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대인지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쟁이 끝난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있지 말아야 할 비무장지대에 가장 많이 매설되어 또 다른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지뢰 제거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지뢰 사고 중 민간 발생은 40건, 군 발생은 26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뢰 사고로 인한 사망자 12명 중 10명이 민간인이며, 부상자 77명 중 민간인은 47명으로 지뢰 피해가 군보다 민간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에도 1명이 지뢰 폭발사고로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후방지역에서 일어난 지뢰 사고의 대부분은 빨간 채취, 고물수집, 농사 등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10대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428명((사)평화나눔회, 2021.06.)이며 이중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가 43.7%, 청소년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62.9%를 차지한다. 이처럼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당시 국방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한국전쟁이 끝난지 70여 년이 흘렀지만 지뢰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비인도적 무기다. 무엇보다 적을 즉사시키는 것이 아닌 손이나 발을 날려버려서 장애를 입히는 병기로 만들어진 목적 그 자체로 매우 비인도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전쟁의 잔재인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지뢰를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것이다.

대인지뢰 금지협약 외에도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군축을 위한 협약으로는 확산탄, 핵무기 금지협약이 있다. 한반도의 특수한 군사·안보적 상황을 이유로 우리나라는 확산탄금지협약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인지뢰, 확산탄 사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보를 벌인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것은 자명하며,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10) 김희윤, “[DMZ 지뢰제거] 한반도 매설 지뢰, 종류와 양은 얼마?”, 아시아경제 (2018.10.0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유엔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와 한반도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동참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인권과 평화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80%가 넘는 국가들이 참여한 대인지뢰 금지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가 동참해주길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한반도를 제외한 지뢰제거가 필요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외국의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¹¹⁾ 그러나 NGO들과 국내 지뢰피해자들의 불만을 토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작 자국의 지뢰 문제에는 눈을 감으면서 외국의 지뢰문제에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정부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참여 중인 모든 개체 사이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뢰제거는 국내 모든 관계 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도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장기적이고도 난해한 통합적 노력인 것이다.¹²⁾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소멸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국제사회의 비중 있는 일원으로 우리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독단적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다. 대인지뢰, 확산탄 등 비인도적 무기를 금지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들이 국제질서를 따르도록 만드는 규범적 조약인 대인지뢰금지조약을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과거 어떤 대북제재보다 강화된 방식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면서 북한은 극단의 방역체계를 고수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8월 당중앙위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자인한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제재의 전면적인 완화

11) 조재국, “지뢰와 함께 사는 한반도… 이젠 끝내야 한다”, 오마이뉴스 (2019.04.27.).

1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해외사업팀, 「평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 『국방과 기술』, 제266호, 10~15p, 2001.

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의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¹³⁾ 2021년 1월 초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대폭 개정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연방제를 고집하던 북한이 당 규약에 민족 공동번영의 단계를 설정하면서 사실상 국가연합단계를 수용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경제)과 방역(생명)의 충돌에서 전자를 선택한 일반적인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 북한은 후자를 채택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안보개념이 신안보를 포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이정철, 2021) 최근 재해방지, 위기관리라는 신생 안보(emerging security)적 용어를 꽤 자주 사용하는 것도 이 같은 안보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7월 북한이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동참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자발적국별리뷰(VNR)를 제출하였다. VNR은 4년마다 UN 회원국이 자국의 SDGs 이행계획과 이행기제를 담은 보고서로서, 북한이 VNR을 제출한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SDGs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에 국제규범이나 글로벌 이슈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던 북한이 최근 들어 인권, 보건 등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모습이 새롭게 포착되고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이념이 아닌 인류 공동의 보편적 목표인 SDGs와 같은 국제규범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북한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일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다자외교를 지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자구책인 동시에 대북제재를 우회하여 국제규범 참여를 통한 대북지원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제규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대북제재의 현상타파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와의 접촉확장을 통한 북한 스스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사회화(Socialization)’ 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3) <http://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2715> (2021.09.25. 검색).

2002년부터 북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존재 역시 북한이 인도주의 사업과 국제인도주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ICRC 질스 카르보니아 부총재는 방한 인터뷰에서 “2019년 1월 북한이 캄보디아에 적십자사 직원과 경찰 등을 보내 지뢰·불발탄 제거 교육을 받았다”라고 밝혔다.¹⁴⁾ 실제로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ICRC는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해 팔다리를 잃은 180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의수족을 제공하고 재활치료를 해왔으며, 민간인 대상의 잔류 폭발물 안전 교육과 북한 적십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네바 협약과 인도주의 원칙을 교육하는 국제인도주의 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현재 SDGs 이행이라는 보편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보편성이라는 가치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한편, SDGs 이행을 국가발전전략과 맥을 같이하며 최대한 북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다자외교 선회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국제무대에서 보편적 규범을 토대로 하는 협력이 가능한가를 타진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와 비핵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노력과 함께 다자외교를 통한 글로벌 규범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보편적 규범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해안이 필요하다.

이처럼 북한은 현재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보편성이라는 가치를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 최대한 북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⁵⁾ 문제는 북한의 다자협력 선회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을 토대로 협력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외교의 다변화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면서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다자협력을 도모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재래식 군비 통제를 연

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22293#home> (2021.08.21. 검색)

15) <http://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2715> (2021.08.25. 검색).

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재철, 2020; 한용섭, 2019; 김태현, 2018)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북 최초 군비통제 협상을 위한 시도 중 하나로 대인지뢰 금지협약의 남북 동시가입이 언급되고 있다.

3. 지뢰 제거의 필요성: 군사적 측면

우리 정부는 군사적 측면에서 지뢰가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이며, 전쟁 억지용으로 오히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즉, 비무장지대의 지뢰지대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수도 서울을 보호하며, 한미 양국군의 대응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인지뢰 무기는 남한 방어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군사적 유용성에 기초한 미국과 한국의 오타와협약 가입 거부는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군사력을 분석하여 한미 양국군의 군사력 우위가 전쟁억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과 한반도에서 대인지뢰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충분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북한 군사력에 대한 분석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전 세계 25위’로 정규군 약 128명과 탱크 약 6000대, 전투기 458대, 잠수함 83척 등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군사력 순위 1위 미군의 정규군 140만명과 수적으로만 비교한다면 재래식 군사 규모는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규모로만 따진다면 꽤 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북한 공군력의 약 70%는 1950년대 초에서 1970년까지 생산된 구식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다(Mig 17s, Mig 19s, and Mig 21s).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불법으로 중고 Mig 29 전투기도 들여왔지만, Mig 20여 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들은 노후화가 심하다. 이러한 북한의 배경에 기초하여 미 국무부는 “북한 공군은 남한의 2배 정도의 전투기를 갖고 있지만,

일부 전투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쓸모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항공기 자체의 비싼 가격과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북한 경제가 오랜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 공군은 훈련 시 필요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간히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공군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도 F-15K, F-35A,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자유롭게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J-2의 육군 장교 제프 하우스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 보는 북한 공군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북한으로서는 공군력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듯하다.

또한, 육군의 핵심전력인 전차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오래된 소련식 전차를 압도할 만큼 매우 강력하다. 특히 높은 산지와 협곡이 많은 한반도 특유의 거친 지형 탓에 전략적 기동성에 제약이 많은데, 미국의 발전된 표적획득 및 추적 기술과 비교우위를 점하는 전차, 군사용 드론과 인공위성, 전투기 등을 활용한 정보 수집력 등은 북한의 군사력이 이를 능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의 원격 전장감시시스템(REMBASS)이나 개선된 원격 전장감시시스템(IREMBASS)과 같은 개선된 정보경고체계와 다연장 로켓시스템, 살포식대전차 지뢰시스템, Sense and Destroy Armor Munition(SADARM) 등 고도로 발전된 현대전 무기와 기술을 활용하면 대인지뢰 없이도 충분히 북한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회피기동이 가능한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로켓, 중장거리순항미사일 등의 새로운 첨단핵전술무기를 비롯해 신형 전차, 방독면을 착용한 생화학부대, 조준경과 소음기가 부착된 개량된 소총, 이동형 레이더 체계 등 신형 무기 개발 성과를 크게 부각하였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강화로 인해 남한 전반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다며 크게 우려하였다. 덧붙여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재래식 공격 역량에 집중해왔다.”라며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군수산업 현대화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했다.¹⁶⁾ 하지만 열병식은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방

16)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brooks-norkor-moderizes-conventional-

식인 선전을 통해 인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특성상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현재 북한의 빈약한 경제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신 장비의 대량생산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열병식에서 선보인 최신 장비들은 소수 정예부대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 군 부대 간에 전투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또한, 북한이 발표한 군사 분야 계획은 대부분 초기 단계로 완성까지 상당한 시간과 기술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는 장밋빛 희망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¹⁷⁾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군비통제의 목적은 크게 ‘잠재적국간의 전쟁의 가능성 감소’, ‘전쟁 발발 시 피해 감소’, ‘전쟁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감소’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대인지뢰로 인한 전쟁억지보다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욱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한반도 대인지뢰에 대한 군사적 유용성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의 주목표는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25일 떨어진 수도 서울의 보호’하는 것이며, 대인지뢰는 ‘북한의 병력을 지연시켜 반격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1998년 5월 발표한 Army FM 20-32에서 지뢰사용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¹⁸⁾

- 적의 공격에 취약점을 만든다.
- 적군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다.
- 적의 지휘와 통제를 방해할 수 있다.
- 적의 인력과 장비에 피해를 준다.
- 교전 지역에서 적군을 지연시켜 다른 무기 시스템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 적의 기동과 침투로부터 아군을 보호한다.

weapon/6044042.html (2021.09.21. 검색).

17) 김동엽,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현대화」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68권, 2021.

18) Army FM 20-32 of May 1998 - the concepts of use for landmines, 2-1p.

한마디로 지뢰는 지상군 공격을 지연시키는 근접방어용이다. 오늘날 군대는 지상군을 가장 먼저 전쟁에 투입하지 않는다. 장거리 미사일과 공습, 그리고 공중정찰을 통한 정보 수집을 통해 공중 우위를 확보하여 주요 목표물을 파괴한 후에야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러나 현대의 비대칭 전력 및 변화된 전쟁 양상을 고려할 때 지상군을 투입할 정도면 이미 상대방은 끝장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도 장사정포나 중장거리 미사일로 충분히 서울이나 남한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위협을 무릅쓰고 지상군을 먼저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근접방어용 지뢰를 전쟁억지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잖다. 세계 주요국 지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중국이 11,000만 개, 러시아가 2,650만 개, 인도가 400~500만 개, 미국이 840만 개를 갖고 있다. 과연 지뢰가 이들 국가 사이의 전쟁을 억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전쟁억지용’ 대인지뢰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인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을 주장한 미국 수뇌부와 달리 미 국방연구소와 회계감사원 등의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전장을 직접 경험한 많은 퇴역 미군 장성들은 대인지뢰 사용금지를 주장해왔다. 미 국방연구소(IDA)는 1994년에 발표한 한국방어전 관련 보고서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발행한 걸프전에서의 지뢰사용을 다룬 보고서¹⁹⁾에서 지뢰로 인한 아군 살해와 연합군 기동 방해를 경험한 미군 장교들이 지뢰사용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걸프전의 교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임스 홀링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전 미 합참의장 데이비드 존스 장군, 제1차 걸프전을 이끌었던 노먼 슈워츠코프 사령관 등 많은 군사전문가는 걸프전 당시 지뢰가 오히려 미군의 기동을 방해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사용의 군사적 효용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하기 위한 한미 연합군

19) Military Operations, Information on U.S. Use of Landmines in the Persian Gulf War.

의 기동을 방해하고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희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베트남전쟁 당시 지뢰로 사상한 미군의 90%가 미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례가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미 공병 대대원 샘 스타로빈 중위는 “수많은 미군 탱크와 트럭들이 미군의 지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미8군이 보급한 지뢰 12만 발 중에서 단 2만 발 정도만 위치를 기록하여 많은 아군 차량들이 파괴되었고 인명손실도 발생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²⁰⁾ 이처럼 지뢰는 적군이 아닌 아군에게 무차별적 살상을 가하는 등 치명적 위협이 됨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있던 지난 60년간 여러 정보를 수집해왔다. 한반도 지형 분석을 통해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나 취약점을 기록해왔으며, 전쟁 준비를 위해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한반도 지형을 따라 육·해·공의 모든 전력이 침투하기 좋은 위치들을 연구하였다. 여기에 드론과 인공위성, Joint-STARS(통합 감시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 등의 시스템 결합을 통한 정보의 이점 또한, 대인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을 삭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는 적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줬으며, 지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 만 명의 추가적인 군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위게임 결과가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부시 정부 때 소위 스마트지뢰라고 불리는 대체무기를 개발하여 이라크전쟁에서 사용하였고, 한국도 이미 다량의 대체무기를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만큼은 대인지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히 모순적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을 삭감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살상을 가하는 비인도적 무기를 인권과 평화가 가장 중시되는 21세기에 굳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20) Captain John G. Westover(1987), *Combat Support in Korea*, Washington, D.C: Combat Forces Press.

4. 지뢰 제거의 필요성: DMZ 평화적 이용

<표 3> DMZ 평화적 이용 관련 제의 현황(1971~2021)

시기	제안 주체	주요제안 내용	비고
1971. 06.	유엔군측 수석 대표 로저스 (F. M. Rogers)	- 쌍방이 합의된 지역으로 군사인원 철수, 군 정전위 군사시설 파괴조치, 전(全) DMZ의 비무장화 확대 실시, 무장인원의 비무장지대 출입금지 등 4개항 제안	
1972. 06.	북한당국자	- DMZ 내 병력감축과 시설의 철수를 위해 협상할 용의 표명	
1982. 02.	손재식 국토통일위원장	-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 비무장지대내 공동경기장 건설 -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 군사시설 완전 철거 - 설악산·금강산 자유 관광지역 공동지역으로 개방 - 군비통제, 군사책임자 간 직통전화 설치 - 판문점을 통한 외국인 자유 왕래 - 자유로운 남북 공동어획 구역 설정	민족화합시범 실천사업으로 제시
1987. 07.	북한당국	-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중립국감시군 배치	대규모적인 남북무력감축을남한에 제의
1988. 10.	노태우 대통령	- DMZ 평화시 건설(이산가족상봉면회소, 민족문화관, 남북연합기구)	유엔총회 연설
1989. 09.			국회연설
1991. 12.	남북한	- DMZ 평화적 이용(신뢰조성방안)	남북기본합의서
1992. 01.	노태우 대통령	- DMZ내 남북공동출자 합작공장 설치	연두기자회견
1994. 08.	김영삼 대통령	- DMZ 자연공원화	민족발전 공동계획에서 제시
2001. 03.	김대중 대통령	- 벨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DMZ 평화공원' 구상 설명	
2007. 10.	노무현 대통령	- DMZ의 '평화지대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제안(DMZ 내 초소(GP) 및 중화기 철수)	남북정상회담
2008. 02.	이명박 정부	-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국정과제로 채택
2013. 05.	박근혜 대통령	-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2013. 07.			정전 60주년 기념사
2014. 09.			UN총회 연설
2017.	문재인 정부	-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 및 경제공동체 실현' 과제의 하나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8.		-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을 위한 합의서」	평양공동선언

*출처: 윤황·김남영(2014, p. 101-103); 김정훈·김지동(2014, p. 268); 박형준(2018, p. 211) 참고하여 재구성.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년 6월 12일 유엔군 수석대표인 로저스(F. M. Rogers) 소장의 제안에서 출발하여 각 시기와 정권마다 성격과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제안들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남북 각 정권의 체제 및 이데올로기 변화에 따른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으로 관련 제안들은 구상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느슨해졌던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에 활력을 제공한 역사적인 합의가 있었으니, 바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그것이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더욱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큰 기대를 걸었던 것과는 반대로 2021년 현재,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대화 단절로 인해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까지 시사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DMZ의 실질적인 관리 대상국이 남북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어려움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DMZ 평화적 이용이 구상적 수준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공통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의 한계를 이유로 꼽는다. 김정훈·김지동(2014)은 남북 교류협력이 지속되지 못하는 3가지 한계요인을 제시하며²¹⁾, 이 모든 한계요인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결정적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박형준(2018)은 요한 갈통(Johan Galtung, 1996)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개념을 설명하며 우리가 DMZ 평화적 이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야 할 평화는 적극적 평화이지만,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평화는

21) 김정훈 외,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 세계평화공원화 · 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2014, 270-272p.

남북 간 직접적·물리적 군사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라는 것을 강조했다.²²⁾ 동시에 현재와 같은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이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 없이 DMZ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온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하며²³⁾, 정치·군사적 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모색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다.²⁴⁾ 즉,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남북 군사적 대치상태를 대표하는 DMZ 평화적 이용의 시작은 남북이 중무장한 채 대립하고 있는 DMZ 내 군사시설 및 병력 철수로부터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DMZ 평화적 이용은 과거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비정치적 분야로의 협력이 정치적 분야 협력으로의 자동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기능주의 접근이 아닌, 정치 분야와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병행되는 신기능주의적 통합을 통해 가능하다.

22)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 물리적 군사폭력이 없는 상태로 본다. 그리고 적극적 평화는 국가 간 전쟁과 폭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또는 내부에서 기존체제가 정치적으로 억압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수탈하지 않고 문화, 종교 등이 폭력을 권장하지 않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박형준, 2018; 207p)

23) 김정훈 외,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 세계평화공원화·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2014; 손기웅, “DMZ세계평화공원’ 의 의의와 추진방향, 2013; 최주영·유상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실현 방안 연구”, 2015; 이세영·김선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전략”, 2015; 윤황 ·김난영, “박근혜 정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방안”, 2014). 실제로 본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자료들임.

24)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는 국가 간의 통합과 평화의 유지는 비정치적 영역만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초국가적 기관의 설립을 통해 정치적 영역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정치적 영역의 역할에도 높은 비중을 둔다. 즉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강조하지만, 기능적 요구에 의해 저절로 정치적 분야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분야와 비정치적 분야가 뽀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기능적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정치적 접근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비정치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박형준, 2018; 213-214p).

<표 4>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서(1992~2018)

시기	합의문서	주요 내용
1992. 02.	남북기본합의서	-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추진 합의 등 신뢰구축,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의 실현문제와 검증문제 합의
2004. 06.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²⁵⁾	- 경비함간 공용주파수 설정 · 운영, 전선지역 선전중지 및 수단 제거, 중국어선 불법어로 단속 관련 정보교환
2007. 10.	10 · 4남북공동선언	-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
2007. 11.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모든 적대적 행위 금지,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의 준수,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재확인, 서해상의 충돌방지 대책 논의, 정전 체제의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 노력,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대책 강구 및 군사공동위원회 등 후속 회담의 개최 약속 등 합의
2018. 04.	판문점 선언	- DMZ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 등 실제적 조치
2018. 06.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	-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의지 확인 및 군 통신선 복구, 서해해상 6 · 4합의 복원 등 합의
2018. 07.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	- JSA비무장화, 시범적 GP 철수, 공동유해발굴, 적대행위 중지 등 세부 추진방향 협의
2018. 09.	제40차 군사실무회담	- 사안별 이행시기 · 방법 등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상호 최종입장 확인 및 문안 조율
2018. 09.	9 · 19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지상 완충구역의 설정,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 합의

*출처: 국방부(2018),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한용섭(2019, p. 11-12)을 바탕으로 표 작성.

25) http://www.spark946.org/data/nuri?tpf=board/view&board_code=2&code=17104 (2020.08.25. 검색).

9.19 남북 군사합의는 선언에 그쳤던 기존 합의들과 다르게 DMZ내 지뢰 제거, GP 철수 등 실질적인 군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일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과거 기능주의의 실패를 보완하는 새로운 신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안은 남북 사이에 여러 차례 오고 갔지만 문서로 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군축에 대한 남북의 극명한 견해 차이 및 북한이 남한을 직접 대화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표 4>를 보면 9.19 군사합의가 있기 전까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과 합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합의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실효적인 군사 조치들의 이행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DMZ 평화적 이용의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정치·군사적 분야와 비정치적 분야 간의 동시적 해결이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 분단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따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 비교적 활발했던 사회·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은 북한 핵 개발 및 대남도발 사건 등에 의해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전보다 악화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비록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군사 분야의 문제들이 군사적 대립체제 하에서는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과거 기능주의 통합 실패의 경험 위에 이뤄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정치·군사적 분야에서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선순환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2021년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계획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이행과 연계하여 ‘DMZ 평화의 길’(고성·철원·파주), ‘JSA 우리측지역 견학’을 통해 국민에게 평화체험 기회를 제

공하는 것 등 접경지역 평화조성에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군사합의에 합의된 내용인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지뢰제거 등의 DMZ 지역의 병력 및 무기를 철수하는 초기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기능주의적 방식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군사현안 관련 실행방안이 실효적으로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DMZ 전 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꾸준히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왔다. 1991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우리 정부와 함께 DMZ에 국제 자연환경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미국 웨스팅사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관문점 동쪽 일대’와 ‘강원도 동부 산림지역’의 두 지역을 ‘자연환경공원’으로 설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²⁶⁾ 또한, 2010년 환경부·UN·IUCN이 ‘DMZ 생태·평화적 관리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²⁷⁾ 비슷한 시기 유네스코도 비무장지대 일대를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실태조사가 있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자연보전지역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평화와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DMZ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상은 남한의 제안에 북측이 계속 거부의 의사를 밝혀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체제유지 및 정권안보에 우려를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쉽게 동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중이며, 설상가상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30867&mid=SM00000535&limit=>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 심한 경제위

26) <http://ecotopia.hani.co.kr/352809> (2021.09.11. 검색).

27)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30867&mid=SM00000535&limit=>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 심한 경제위

기를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위기를 탈피하고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 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나, 북한에 대한 현저히 낮은 국제적 신뢰도를 고려하면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차례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부족한 자원 공급, 안정적인 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유엔 및 다양한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국인 유엔과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통제권은 유엔사령부가 갖고 있고, DMZ내의 모든 인적·물적 관리는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즉,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들과의 국제협약 체결을 통해 비무장지대 이용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궁극적 목표는 유엔 사로부터의 관할권 반환이 되어야 한다.

DMZ는 한국전쟁 시기 유엔군이 참전하여 휴전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군사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에 따라 설정된 지역으로 국제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즉, DMZ는 남북 국내적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제적이고 다자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중재 역할 및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한반도 안보가 동북아 평화 정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DMZ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안보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고착화된 갈등구조 해소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기여를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로 DMZ 평화적 이용이 구상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의 동시적 해결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 두 가지 선결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안이 있다. DMZ

평화지대화 사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자 위협인 대인지뢰를 제거하고, 세계 80%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남북한이 동시가입하는 것이다.

IV.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

3장에서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의 필요성에 대해 인도주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 그리고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대인지뢰금지조약의 남북한 동시가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뢰사용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과 우리 정부의 오타와협약 가입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지뢰정책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남북한이 동시가입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며, 향후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 것인지 제언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지뢰사용 관련 국제동향

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97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대인지뢰 등 민간인에게도 무차별적 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983년 처음으로 지뢰사용에 직접 적용되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²⁸⁾이

28) 동 협약의 정식명칭은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이며 1980년에 체결돼 1983년 12월 발효됐다.

발효되었다.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제2의정서를 포함하여 재래식무기 중에서도 특히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특정 무기에 한해 총 5개의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과거 냉전 때 세계 도처에 매설돼 있던 대인지뢰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었고, 1992년 창립된 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은 지뢰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대인지뢰의 ‘전면적 금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지뢰 규제를 기대했던 캐나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의 중견국가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이전 및 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ICBL의 지원 아래 각국 정부들이 총 5차례의 CCW 평가회의를 열어 대인지뢰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시도하였다.(한인택, 2019) ICBL은 지뢰를 즉각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위해 CCW 협약당사국들을 열심히 설득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뢰의 사용을 제한하는 의정서 개정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개정된 지뢰의정서(제2의정서, 1996년 5월)²⁹⁾는 기존 제2의정서보다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인지뢰개념의 불명확성 및 지뢰사용에 대한 가능한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증 규정의 결여 등 많은 취약점을 남겼다. 무엇보다 ‘대인지뢰사용의 전면적 금지’라는 규범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였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방안의 모색이 ‘오타와 프로세스’라는 대안적 과정으로 이어졌다.

29) 개정된 내용은 탐지 불가능한 지뢰 사용 금지 및 신형지뢰도 자폭기능을 갖추게 하는 등 대인지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인지뢰의 사용은 향후 9년간으로 한정하며, 지뢰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비회원국에게는 지뢰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사용 후 지뢰제거가 용이하도록 모든 지뢰의 매설제원을 기록 및 유지하고 차단물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오히려 탐지물질과 자동무력화 장치 및 자동과괴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매설된 대인지뢰가 민간인의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보장하는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군 감시 하에 있으면 그 사용이 인정된다. 안송찬, 「미국의 지뢰정책 변화 추이」, 『한반도 군비통제』, 35, 2004.

나) 대인지뢰금지조약

1996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인지뢰 전면금지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오타와 국제회의에서는 정식 참가국 50개 국가의 대표와 옵서버로 참가하는 25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어 비엔나회의 및 오슬로 회의를 거쳐 마침내 1997년 12월 오타와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이 122개 국가에 의해 서명되었다. 오슬로 회의 최종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로 채택되었으며, 이로써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남북한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현재 33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인지뢰금지협약은 국제인도법적 차원에서 최초로 특정 재래식무기의 전면적 금지를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인도주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중견국가와 NGO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로 새로운 규범이 제도화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라는 '외교의 새로운 모델(a new model of diplomacy)'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은 오타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CCW에 가입하면서 2001년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탐지되지 않는 지뢰는 새로 매설할 수 없다. 그러나 CCW는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지뢰지대가 군의 감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탐지물질과 자동무력화장치가 없는 이미 매설된 지뢰의 사용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CCW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지뢰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다) 미국의 지뢰 정책

미국의 지뢰정책에서 한반도는 항상 대인지뢰금지 적용 국가에서 제외

되어왔다. 이는 주한미군의 보호와 한국 방어를 위해 지뢰사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다.

1996년 5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뢰정책 발표에서 한반도 예외문제가 최초로 거론되었으며, 1997년 오타와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서만 지뢰사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 방어를 이유로 대체무기 개발 여부에 따라 2006년까지 가입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후 퇴임을 앞두고 “가장 양심적인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이후 들어선 부시 행정부에서 추진된 미국의 신지뢰정책은 대전차지뢰를 포함한 모든 지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CCW나 오타와협약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폭장치 및 자동무능화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지뢰 사용은 민간인 피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구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지뢰라 불리는 대체무기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돌연 ‘대인지뢰 대체무기 개발 중단’, ‘자폭식 지뢰 포기 불가’ 등으로 지뢰정책을 수정하면서 2006년까지 가입하겠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고 지뢰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에 이른다. 이후 오바마 정부가 정책을 승계하면서 한반도 예외는 어김없이 적용되어 한국에서만큼은 자폭식이든 비자폭식이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지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4년 9월 23일,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대인지뢰를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언제까지 가입하겠다는 일정도 밝히지 않았다. 참고로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뢰를 비축한 미군기지가 주둔해 온 독일, 영국,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일본 모두 오타와협약을 비준했다.³⁰⁾

30) 정문태, “지뢰포기, 한반도만 예외인가”, 한겨레, (2014.07.25.).

<표 5> 지뢰관련 국제협약 및 미 지뢰정책 비교

구분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CCW (제2의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적 사용 -탐지불가능한 지뢰 사용 금지 -자동파괴 및 자동무력화 장치가 없는 원격투발지뢰 (500m 이상 투발)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한 규제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투발 지뢰 제한적 사용 -자폭불가 지뢰 사용금지
오타와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규정 없음
미 부시 정부 신지뢰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적 사용 -탐지 및 자폭불가 지뢰 사용 금지 	좌 동

*출처: 안송찬(2004), p. 246.

2.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남북한 동시가입 해야하는 이유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남북한이 동시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인지뢰금지조약 체결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국제정치에서 주요 행위자인 국가나 국제기구가 아닌 NGO와 중견국들이었다. 그만큼 인류사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중 하나로 인식되어온 지뢰의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는 이야기다. 이 오타와협약 완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돌파구가 바로 우리 한반도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현재 한반도는 70년이 넘도록 휴전체제하에 놓여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는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이를 유지 및 공고화하는 실질적 체제 및 제도, 절차, 기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 등 제도적 장치는 체제 공고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먼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남북한은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해 수없이 논의하고 수많은 합의 문서를 작

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한 적이 없으므로 문서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최종 과제인 민족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지뢰 문제를 군사가 아닌 정치로 풀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이유로 오타와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오타와협약 체결 당시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체무기를 개발했는지, 오타와협약 가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미국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지뢰정책을 공식 발표한 것에 비해 한국은 독자적인 지뢰정책이 무엇인지도 밝힌 적이 없다. 참고로 대인지뢰금지조약을 비롯하여 확산탄 금지협약과 핵무기금지협약과 같은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 금지협약에도 미국과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유독 아시아에서 다자주의보단 양자주의 틀 속에 국가 간의 관계를 묶고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역대 우리 정부는 오타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지뢰제거를 해오고 있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인선·동해선 철도도로 구간의 지뢰제거 작업을 처음 공동으로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개성공단건설 사업의 일부로 진행된 개성공단 송전선로 구간 지뢰제거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 작업을 위한 공동지뢰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꼭 남북 공동지뢰제거작업이 아니더라도 국방부 차원에서 전방의 민통선 일부 지역 및 후방지역 지뢰를 제거해왔다. 즉, 오타와협약 문제의 본질은 군사적 효용이 아니라 외교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에게 오타와협약 서명을 요구했던 퇴역장군 15명 중 한 명인 로버트 가드는 “펜타곤은 제도적으로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포기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며 지뢰 문제를 군사가 아닌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뜻을 역설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지뢰제

거 작업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인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선언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 실질적인 남북 군축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은커녕 9.19 군사합의 이행도 큰 진전이 없었다. 그동안 합의와 이행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해왔던 북한의 태도와 9.19 군사합의 자체가 일종의 남북 간 신사협정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합의의 이행 및 한반도 실질적 군비통제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오타와협약 남북한 동시가입 자체가 남북 간 신뢰구축의 구체적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오히려 남북 군축협상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대인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지도 않고 여기서 지뢰는 대인지뢰이지 비무장지대의 대전차지뢰까지 제거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4조의 비축된 대인지뢰의 폐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늦어도 본 협약의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제5조 지뢰지대의 지뢰제거에 대해서는 “협약 발효 후 최소한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폐기하지 못한 가입국은 10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남한이 먼저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북한을 가입시킬 수도 있는 것이며, 대체무기를 개발하기에도 충분한 기간이다. 무엇보다 남북한 최초의 실질적인 군비통제 협상을 벌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1992년에 체결된 군축 합의를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도 있고, 단계적 군축을 다룬 9.19 군사합의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 동시가입은 정체되어있는 남북한 군축합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넷째, 인도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한국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남북한이 함께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하

고 있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이 주는 함의는 그 어떤 나라보다 클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라는 SDG 16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함께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라는 SDG 17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지뢰피해가 심각한 나라에 경제적 지원과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작 자국의 지뢰문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남북교류사업을 위해 남북한이 함께 지뢰를 제거하고, 남북 간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교류를 확대한다면 한반도에서도 얼마든지 SDGs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동참할 것을 표명하고 다자외교를 향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상보다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다.

3. 대인지뢰금지조약 동시가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적 목표인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라는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NGO와 중견국 연합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 앞에서 대인지뢰무기 금지협약 체결과정을 살펴본 바 있다. 대인지뢰 외에도 확산탄, 핵무기 같은 비인도적 무기 금지협약의 체결을 주도한 것은 국가가 아닌 NGO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주요한 외교적 목표로 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게 비인도적 무기 금지협약의 체결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NGO와 그들이 구성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지식과 규범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대인지뢰금지협약 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오타와 프로세스’에서 중견국인 캐나다는 대인지뢰금지운동을 자국 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확산탄 금지협약의 협상 과정에서는 노르웨이의 국제적 리더십이 활약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견국들의 지도력이 돋보인 데는 NGO들의 도움이 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먼저 선언하고, 북한의 동참을 끌어내 진정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NGO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인지뢰금지협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비롯하여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유엔사 관할권 반환’이나 ‘북한의 국제무역 및 금융기구 가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NGO의 외교적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NGO 활용에 유리하도록 외교부 조직 및 인력 개편, 국내외 NGO 간 정기적 교류를 갖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상당수가 지뢰를 제거할 이유가 없는 데도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함께 서명하는 것만으로 이들 국가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목표에 걸맞은 중견국 외교를 펼쳐갈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를 바탕으로 재래식무기 군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대인지뢰금지협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하노이 남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큰 진전이 없는 ‘9.19 군사합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에는 비교적 이행이 쉬운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이행만 담보된다면 ‘9.19 군사합의’ 자체로 재래식무기 군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적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북핵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급급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 기반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에 진전이 없는 한, 북한은 오히려 신속하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유도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무기체제의 다변화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³¹⁾ 또한, 성급히 군비통제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31) 북한군사연구실, 「2021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2020, 9p.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견지하면서 재래식 군비통제와 북한 비핵화 속도를 연계하여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 강구할 현실적인 방안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대화·제재·억제의 3가지 수단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구사하는 ‘맞춤형 평화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³²⁾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일단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9.19 군사합의’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 위주로 추진해야 하므로 주한미군 군축은 군비통제 의제가 될 수 없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대북제재’ 문제이다. 유엔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에 성실히 동참하면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보조를 맞추면서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DMZ의 평화적 이용’ 사업의 경우, 군비통제와 연계하여 국제관광사업을 추진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난 해소를 위해 동참할 가능성이 크며, 남북한 간 접촉과 왕래가 잦을수록 북한 비핵화는 물론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9.19 군사합의’ 이행 재개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소원해진 남북관계는 물론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되던 ‘9.19 군사합의’ 이행도 더이상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9.19 군사합의’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단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지뢰제거와 관련된 이행조치에 대한 구속력 및 국제적 보장이 담보될 수 있다. 그렇게 합의 이행이 재개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북군

32)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2020.

사공동위원회' 구성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동년 5월 7일에 기 합의된 바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기구의 임무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현재 안보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³³⁾ 김재철(202)의 '9.19 군사합의' 이행평가 결과, 미이행 과제인 '남북공동 유해발굴작업'을 비롯하여 'DMZ 내 역사유적 공동조사', '서해 평화수역 내 남북공동순찰 방안 마련', '철도·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접촉·왕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등 협의 후 추진 과제의 대부분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이 협약에 서명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한다.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먼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과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당시 한국이 1980년대부터 주요국을 상대로 유엔 가입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이어 외교 관계를 맺으며 북한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당시 소련과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설득했고, 유엔 동시가입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이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단계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논제로 제시해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게 한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후방지역의 지뢰를 가능한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우리 정부는 DMZ 및 접경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였으며, 유엔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지뢰행동조직과 국제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물론 DMZ 국제적·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뢰제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뢰제거는 국민의 안전과 토지사용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아래 <표 6>'과 같이 현존하는 지뢰 관련 주요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법·제도적인 측면을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33) 김재철(2020), 26~27p.

<표 6> 현재 지뢰 관련 주요 법률

법률 및 훈령	문제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뢰제거에 관한 조항 없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민간인은 경찰의 지시없이 지뢰를 제거할 수 없음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잔류폭발물 제거 및 폐기 권한은 국방부 단독 권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고 당시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결정(육체적 보상에 한함)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 지방정부 역할 제한적

*출처: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토론회(시민평화포럼) 발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지뢰전담기구 설립

<표 6>에 제시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근거로 지뢰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뢰제거는 국제사회 기준(IMAS)을 도입하여 국방부 차원을 넘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지뢰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정부의 여러 부처가 연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국제 협력), 행정안전부(지뢰 사고 예방활동), 국토부(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뢰제거 근로자 보건안전 및 지뢰제거 전문인력 직업교육(고용노동부, 여가부) 등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의 지뢰제거를 위한 3단계 행동 지침에 따른 통합적 해법을 위해서도 국무총리 직속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지뢰제거 모범국인 캄보디아는 IMAS 도입 및 국무총리 산하에 지뢰전담기구를 두어 28년 동안 약 100만 발의 지뢰를 제거하고 1,920km²의 지뢰·불발탄 지대를 해제했다. 2019년에는 한해에만 우리나라 지뢰지대 전체 면적인 128km²보다 넓은 130km²의 지뢰·불발탄 지대를 완벽히 해제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지뢰대응위원회 설치(안 제11조),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국가지뢰행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나) 지뢰지대 안전한 관리 및 피해자 예방 및 피해자 보상 관련 법률

지뢰제거도 중요하지만 지뢰지대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84%가 땀감, 채취, 개간, 고철 수집 등의 생계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였고, 민통선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전체의 7.5%에 불과했다.³⁴⁾ 지뢰표지판이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경우는 실제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해 경고문이나 철조망 등 지뢰지대에 대한 명확한 표시없이 중구난방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뢰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 특별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 9월 기준 1960년대 지뢰피해자 165명에 대한 평균 위로금은 1990년대 피해자 19명에 대한 위로금의 1/3 수준에 불과한 액수임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사고 당시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개정안에는 '위로금 지급 범위를 지급 결정 당시의 월평균임 임금'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실제로 1960년대 지뢰 피해를 입은 사람이 214명(39.9%)로 가장 많고, 이어 1970년대 피해자와 1950년대 피해자 순으로 많았다. 이는 한국전쟁 후 매설된 지뢰로 인한 초기 피해자들이 가장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과 라오스 등 외국의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국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예산 문제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4)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토론회, 녹색연합 공동주최 (2021.05.27.).

다)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추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³⁵⁾ 오랫동안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경제적·문화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개발을 도모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위해 이 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누구보다 분단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DMZ 평화적 이용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으므로 적합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DMZ 평화적 이용 사업추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관련 국내법인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가로막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2020년 12월에 와서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지자체가 명시되었고, 2020년 9월부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별도의 정부 신청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이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는 지자체의 재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접경지역 지방정부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지자체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 현재는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만 명기되어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부서가 모든 교류협력 정책수립 및 집행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주민 대표성,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과 확신을 가지고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재량을 강화하는 법제개정이 필요하다.

3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69> (2021.09.01. 검색)

V. 결론

본 논문은 한반도 및 DMZ내 지뢰지대의 문제점을 토대로 DMZ내 지뢰제거의 필요성을 크게 인도주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대인지뢰금지조약의 남북한 동시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뢰지대의 주요 현황 및 문제점을 나열하고,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북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먼저 대인지뢰 사용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지뢰의 군사적 유용성’과 ‘민간인 피해 없음’의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반박이자 지뢰제거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DMZ 지뢰제거의 필요성을 ‘인도주의적’ 측면, ‘군사적’ 측면, 그리고 ‘DMZ 평화적 이용’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대인지뢰는 역사상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중 하나이며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과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지뢰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DMZ 평화적 이용’이 수많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행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지뢰 제거 등 군사적 조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위 논의를 토대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 ‘군사가 아닌 정치외교적인 관점에서 지뢰 문제 접근’, 그리고 ‘남북 군축협상을 위한 카드’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남북간 실질적인 군축협상을 위해 대인지뢰금지조약의 조항을 분석하여 오히려 주어진 최대 20년이란 기간을 군축협상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먼저 가입을 선언한 후 북한을 설득할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향후 우리 정부가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NGO와 중견국 연합 외교를 활용할 것’과 ‘재래식무기 군축과 비핵화 병행적 접근을 통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남북한이 동시가입하기 전까지 취해줘야 할 조치들을 정리했다. 그중 마지막 조치로서 현행 지뢰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표로 정리하여, 보완 및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뢰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 남북한 동시가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온 ‘DMZ 평화적 이용’을 신기능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토대로 남북간 실질적인 군축협상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신종전염병을 비롯해 군비경쟁, 핵 위협, 기후변화, 테러 등 전례 없는 국경을 초월한 안보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는 이러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조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몇몇 국가들은 오히려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한 예로,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다면 핵무기 금지조약에 동맹국들도 가입할 수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득권적인 핵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지뢰 금지조약, 확산탄 금지조약, 핵무기 금지조약 등 비인도적 무기 금지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가이기주의를 초월한 ‘국제인도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도 하루빨리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가입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자국의 지뢰 문제와 지뢰피해자들에 눈 감아온 우리 정부의 지뢰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내 학술지

- 김동엽,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현대화」,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68권, 2021.
- 김영호 외, 「한미동맹의 현황과 도전 - 지난 4년의 교훈과 바이든 시대의 협력 방향」, 『아산리포트』, 2021.
- 김재철,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평가와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국군사(7)』, 2020.
- 김정훈김지동,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 세계평화공원화·국제관광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0, 2014
- 김태현,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군사(4)』, 2018.
- 박형준, 「DMZ 평화 창출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 『동북아연구』 제33권 2호, 2018.
- 북한군사연구소, 「2021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한국국방연구원, 2020.
- 서보혁 외,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연구총서』, KINU 통일연구원, 19-21, 2019.
- 소성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연구』 제2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2.
- 손기웅,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방향」, 『정책과학연구』, 23권 2호, 2013, 129-143p.
- 안송찬, 「미국의 지뢰정책 변화 추이」, 『한반도 군비통제』, 35, 2004.
- 윤황·김난영, 박근혜 정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방안」, 『OUGHTOPIA』, 29(2), 2014, 97-126p.
- 정명자·박만규, 「지뢰특성 및 북한지뢰 현황」, 『국방과 기술(440)』, 2015, 106-113p.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아산리포트』, 2020, 19-30p.

- 조재국, 「한국의 지뢰피해 상황과 한계에 부딪힌 미국의 지뢰정책」, 『코리아 연구원 현안진단』, 제255호, 2014.
-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 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
- 하광통박지영,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주간 국방논단』 제1434호, 2012.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해외사업팀, 「평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 『국방과 기술』, 제266호, 10-15p, 2001.
- 한용섭, 「군비통제 관점에서 본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의와 전망」, 『국가전략』 제25권 2호, 2019.
- 한인택, 「비인도적 무기 금지운동: 성공요인의 분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 사업보고서』, 2019-02, 제주평화연구원, 2019.

▣ 외국 문헌

- Captain John. G. (1987), *Combat Support in Korea*, Washington, D.C: Combat Forces Press.
- Matthew, R. A., McDonald, B., & Rutherford, K. R. (2004). *Landmines and human security: International politics and War's hidden legac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신문기사

- 김준일 외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뉴스톱 (2019.09.25.).
- 김희윤, “[DMZ 지뢰제거] 한반도 매설 지뢰, 종류와 양은 얼마?”, 아시아경제 (2018.10.02.).
- 서재철, ““들어가면 죽는다”...대인지뢰라는 괴물”, 한겨레 (2018.08.17.).
- 이시우, “미국의 지뢰정책, 한국만 봉이다”, 통일뉴스 (2014.09.25.).

- 이상희, “핵무기금지조약 발효와 남북, 그리고 미국”, 통일뉴스 (2021.01.27.).
- 전상찬·김영래, “[숨겨진 살인자:지뢰·10] 에필로그-끝나지 않은 전쟁”, 경인일보 (2016.09.05.).
- 정문태, “지뢰포기, 한반도만 예외인가”, 한겨레 (2014.07.25.).
- 정충신,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작업 9월쯤 본격화...오늘부터 지뢰제거작전 및 도로 개설 작업”, 문화일보 (2021.04.05).
- 조재국, “지뢰와 함께 사는 한반도... 이제 끝내야 한다”, 오마이뉴스 (2019.04.27.).
- 채인택, “북 인사들, 캄보디아 가서 지뢰·불발탄 제거 교육 받았다”, 중앙선데이 (2019.11.02.).

▣ 기타

- [보도자료] 민통선 이남 지뢰 지대 방치, 녹색연합 (2018.10.24.).
- [보도자료] 행안부, 지뢰 피해자 6,428명에 등돌려, 녹색연합 (2021.07.30.).
- [보도자료], 철원군 이길리, 어디서 언제 지뢰 터질지 몰라, 녹색연합 (2020.10.16.).
- 「 관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해설자료,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2018.9.19.).
- 2020 국방백서, 국방부 (2020.12.).
- 2021년 국방부 업무계획, 국방부 (2021.21.).
-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 - 6가지 주제별 국정과제·주요 정책 적절성 평가 및 이행 평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21.07.21.).
- 미얀마 지뢰 위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UNICEF) (2022-2024/460만불) 집행계획(안) v.1, 코이카, (2021.01.).
-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시민평화포럼 (2021.08.23.).
-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토론회, 녹색연합 공동주최 (2021.05.2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사)평화나눔회
(2018.11.20.).

캄보디아(UNDP) 북서부 3개주 지뢰제거를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
(2021~2025/천만불) 집행계획(안) v.1, 코이카, (2019/11.).

Army FM 20-32, Department of the Army (1998.05.29).

<http://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2715> (2021.08.25. 검색).

http://www.spark946.org/data/nuri?tpf=board/view&board_code=2&code=17104
(2020.08.25. 검색).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69>
(2021.09.01. 검색)

<http://ecotopia.hani.co.kr/352809> (2021.09.11. 검색).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30867&mid=SM00000535&limit=10&eqViewYn=true&odr=news&eqDiv=%EB%8B%A4> (2021.09.11. 검색)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brooks-norkor-moderizes-conventional-weapon/6044042.html (2021.09.21. 검색).

<https://www.greenkorea.org/%EB%AF%B8%EB%B6%84%EB%A5%98/13682/>
(2021.10.01. 검색)

장 려

새로운 남북경협의 모델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

- MZ세대와 ESG 경영을 바탕으로 -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김 혜 진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임 희 수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기존 남북경협의 한계점과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 III.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 보고서
- IV.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의 한계와 해결방안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약문】

새로운 남북경협의 모델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
 - MZ세대와 ESG 경영을 바탕으로 -

본 논문을 통해, 앞으로 재개될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같이의 가치의 까치”사업을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간 남북의 문제는 대외 내 변수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언젠간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남북경협에 대한 기초 구상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특화산업 지역이라는 경제적 동맹을 바탕으로 나라간에 남아 있었던 긴장의 완화를 이끌어내었다. 이처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강화는 역외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역내에 정치적 안정 또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남북의 정치적 긴장감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환경에 있어 필수적이라 생각했다. 또한 남북관계 사안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유도해야 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기에 통일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MZ세대들의 통일 인식 제고를 중심 과제로 설정했다.

MZ세대의 특징과 사회 경제적 트렌드를 반영해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을 구상했다. 국가의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MZ세대가 구매를 결정할 때 가장 가치 있게 두는 ESG 경영철학을 담으려 했다. 더불어 현재 MZ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업사이클링을 기업의 주된 사업으로 잡았다. 자원을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을 창조하는 “같이의 가치의 까치”사업은 한반도 고유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제품을 한반도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활용하여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제품 생산 철학으로 설정하였다. “같이의 가치의 까치”의 주력 제품들을 살펴보면,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플라스틱과 폐그물을 통해 만든 솜이불과 무선이어폰 케이스, 깃 반팔 셔츠가 대표적이다. 주기적으로 한반도 내 전통문화 전문가들이나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협업한 제품을 만드는 것도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이 지향하는 제품 생산 철학이다.

“같이의 가치의 까치”사업은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기에 주로 청년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려 한다. 남북한의 청년들은 이 사업을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남북경협 사업이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같이’ 남북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며 이를 기반을 둔 상품 제작과 소비를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일체성을 깨닫고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지원 또한 가능하다.

아래로부터의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신뢰는 후에 이뤄질 또 다른 교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일련의 교류 협력 과정은 다시 남한과 북한이 더욱 긴밀하고 다채로운 교류에 가까워지게 만든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감 완화하고 습관화된 협력이 자연스레 남북경협과 평화에 대한 긍정적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을 교류의 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주역 MZ세대, 모든 역사의 중심엔 청년이 있었고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엔 청년이 있었다. 청년 주도하의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은 공동번영의 토대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의 초석이 될 것이라 우리는 자부한다.

I. 서론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정전체제의 해체에 대한 남북 간 공감대가 구축되고 본격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발동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점차 악화하며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듯 보였으나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요구 성사를 빌미로 북한의 잇따른 비난 성명이 나오고 통신 연락망이 다시 불통이 되면서, 다시금 한반도엔 긴장이 맴돌고 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는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특화산업 지역이라는 경제적 동맹을 바탕으로 긴장 완화를 이끌어내었다. 이처럼 경제적 실리가 국제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국가 간 합의는 역외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역내에 정치적 안정을 정착시킬 수 있다.¹⁾ 그러므로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남북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면 남북 또한 정치적 긴장감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에 긴장이 맴돌수록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그렇기에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여러 정치적·군사적 갈등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남북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을 견고히 다지는 것 외에 전 국민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 남북 간 분단 상황 속,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었다. 문제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가 기성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며 통일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29세와 30대의 연령대에서 통

1) 손유나, “남북한 경제협력지대 활용 방안 연구 : 개성공단과 해외 OPZ·QIZ 사례 비교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21

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한 응답자 비율은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한 비중은 2018년 대비 2020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세대들은 핵 도발과 남북연락사무소 폭발 등 여러 경색 국면을 겪으며, 북한을 화합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적대감은 통일에 대한 인식에 역기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을 얻으려면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된 청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청년들의 통일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일을 민족적 당위성으로만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청년 세대들과의 현실적인 공감대를 찾아 통일에 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

청년들의 통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둔 남북경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즘 청년 세대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최근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MZ세대는 1980년~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²⁾ MZ세대는 소비를 할 때 가격만을 보는 것이 아닌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제품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 활동이 되었는데, 친환경적, 사회적 책임 경영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인 ESG 경영이 모든 소비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MZ세대의 특징과 사회 경제적 트렌드를 분석해 경제적인 이득을 통한 공동번영의 토대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II에서는 기존 남북경제협력의 한계를 살펴보고, MZ세대의 특징과 사회 경제적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III에서는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을 대표할 “같이의 가치의 가치” 사업

2) “MZ세대가 ESG 가치에 뜨겁게 호응하는 이유,” ESG경제J (온라인), 2021.02.02.;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 (검색일:2021.09.12.)

의 운영계획,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서술하고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의 주력 제품을 소개할 것이다. IV에선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의 기대효과 서술하며, 사업의 한계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선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기존 남북경협의 한계점과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1. 남북경협의 전개와 한계

올해로 34년의 역사를 지닌 남북경협은 1988년부터 시작해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겪어왔다. 1998년 노태우 대통령이 7·7선언을 통해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고 발표, 이후 잇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 ‘남북교류 협력 세부시행 지침’이 제정되면서 남북경협은 본격 개시되었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북 핵 위기가 발발해 투자 협력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 교역으로 남북경협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고 1차 북 핵 위기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서 경협 규모는 확대되었다. 1996년부터는 (주)대우에 의한 투자 협력사업도 최초로 개시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쌀 무상원조와 민간단체들의 인도지원사업도 개시되었다. 1998년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른 기업인의 방북 확대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개시되면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대규모 대북 지원이 이뤄졌으며, 2000년 12월 ‘남북경협 4대 합의서’(투자보장, 이종과세 장비, 청산 결제, 상사분쟁) 서명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으로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003년 개성공단 착공되고 다음 해 12월 가동 및 첫 제품이 생산되며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

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며 금강산 및 개성관광이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 간 사이가 점점 악화하며 남북경협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2016년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 실행하고 군사적 갈등을 높임으로써 남한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뚜렷한 남북경제협력은 없었으며, 사실상 남북경협 중단되었다.

그간 남북경협을 돌이켜 보면 남북한 당사국만이 경협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배타적 양자거래’만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남한과 북한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지만, 다양한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 일반적인 경제협력과는 다른 상황으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 도입한 차관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인 투자와 협력사업보다는 단순한 상품교역이나 임가공 수준의 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남북경협의 관행을 보면, 경협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관리, 한반도 평화 증진 및 남북한 간 이질감 해소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들이 남북경협의 주요한 동력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유인보다는 비경제적 유인이 더 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의 주요한 유인인 경제적 이익을³⁾ 지속해서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경협은 이런 측면을 어느 정도 간과했던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새로운 교류 협력 생태계 조성관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되어야⁴⁾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좋은 거버넌스의 민관협력이 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에 있어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북한이 대남한 경제 개방도를 높이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초들을 다져

3) “남북경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프레시안」(온라인), 201.01.21; <<https://news.v.daum.net/v/20190121135206659>> (검색일:2021.09.13.)

4) 권영경, “남북경협의 역사적 고찰과 재개를 위한 과제,” 『통일문제연구』, 30권 1호 (2018), p.1

가며,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종의 유치산업 입장에서 남북경협을 인식해야 한다.

2. MZ세대와 세계 경제 트렌드

남북관계 사안의 특성상 남북경협의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대다수의 국민은 젊은 층으로,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그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남북경협은 청년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다주어야 한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재개될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은 청년 세대의 직접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관심을 끌고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남북경협을 세우기 위해서는 MZ세대와 세계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기업 크리테오의 조사 결과, MZ세대의 52%는 ‘친환경·비건 등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글로벌 리서치기관 칸타월드패널 조사에서는 밀레니얼(46%)과 Z세대(42%)가 ‘사회적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감한 브랜드를 찾는다’라고 응답했다. MZ세대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한다.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펼쳐진 비대면과 원격, 초연결 사회상의 중심에는 디지털과 온라인 위주로 생활해온 MZ세대가 있다. 스마트폰 보유율 98%, 하루 평균 6시간 스마트폰 사용, 개성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는 ‘사회적 가치’를 ‘힙⁵⁾’하게 여긴다. 그들은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만, 옳은 일에 대해선 SNS 등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를 빠르게 형성한다. MZ세대 중심으로 발

5) 영어 단어인 ‘힙(hip)’에 한국어인 ‘-하다’를 붙인 말로, 원래 ‘힙은’ 허리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형용사로 쓰이며 새로운것을 지향하고 개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는 ‘핫하다’, ‘트렌디하다’ 등이 있다.

달한 ‘가치 소비’는 환경·인권 보호 등 공익적 의미가 담긴 상품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⁶⁾ 성향을 뜻한다. MZ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관심사다. 기업이 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보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소비의 기준이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도덕성에 문제 있는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거나 기존 브랜드의 대안을 모색하고 추천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94%는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그 회사에서 일할지를 결정한다고 답했고, 89%는 사회 환경적 이슈에 관심을⁷⁾ 두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은 소비를 주도하는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⁸⁾ 최근 코로나 19와 탄소 중립 등으로 인해 가치가 급등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ESG 활동을 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ESG 투자’가 전체 운용 자산의 20~40%를 차지했다 글로벌 지속 가능 투자 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40조 5,000억 달러(4경 4,400조 원)로 2018년 30조 6,800억 달러(3경 3,600조 원)와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무려 31% 증가.⁹⁾ 하며 엄청난 속도로 소비 양상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러한 최근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ESG 경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환경(Environment)에서 가장 떠오르는 재활용 사업을 남북 경제 협력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인 재활용(upcycling)이란 용어는 1994년 독일 디자이너 리너 필

6) “MZ세대가 ESG 가치에 뜨겁게 호응하는 이유,” 「ESG경제」(온라인), 2021.02.02;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 (검색일:2021.09.12.)

7) 위의 글.

8) “ ESG, 왜 유독 한국에서 중요해졌을까?,” 「종합시사매거진」(온라인), 2021.09.15.; <<http://www.sisanews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4>> (검색일:2021.09.14.)

9) “뜨거운 화두 ‘ESG 경영’, 전력공기업들도 강화나서,” 「전기저널」(온라인), 2021.05.07.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 (검색일:2021.09.14.)

츠(Reiner Pilz)가 낡은 제품에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Gi, 2018). 재활용은 단지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업사이클’의 순화어인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이라는 뜻의 관형사 ‘새’와 ‘재활용’의 ‘활용’을 합친 말이다.¹⁰⁾ 본 논문에서는 ‘업사이클’의 순수 한국말인 ‘재활용’이라는 단어 사용을 지향한다.

세계적인 재활용 사업의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2015년에 세계 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도 연간 4,0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약 절반에 가까운 한화로 약 200조 원, 독일은 60조 원의 매출 규모를 달성했다(Nam, 2015). 한국 환경공단의 2017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 현황 통계정보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전체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제품 매출 규모는 약 5조 원을 기록했다. 국내 업사이클 브랜드 수는 2010년 10여 개에서 6년 만에 150여 개로 늘어났고(Kang, 2017), 2016 트렌드 키워드로 꼽히는 등 우리 사회에서도 업사이클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는 더욱더 빠르게 전 세계 재활용 기업들이 대중화돼가고 있다.¹¹⁾

3.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한 재활용 사업

남북한 경제협력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은 대부분 저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공단의 업종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입주기업의 19%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금속 부문의 총수출액이 1억 7천만 달러로 개성공단 전체 총수출액의 66.5%를 차지했다. 반면에 절반 이상의 업체 수를 차지했던 섬유 부문의 총수출액은 약 7백만 달러로 전체 총수출액의 2.7%에 그쳤다.¹²⁾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닌다. 개성공단은 최초의

10) 한지혜 외 1인, “한국적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개발” 『패션비즈니스』, 23권 4호 (2019), p.129

11) 위의 논문, 같은 쪽.

12) 손유나, 앞의 논문, P.77

남북 간의 대규모 경제협력으로 12년 동안 운영되면서 서로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더 나은 남북경협을 위한 견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경협의 큰 첫발을 내디딘 우리에게 남북경협 자체가 아닌 경제적인 남북 경제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이 남한과 북한 모두의 이해관계로 깊게 엮어져 있었다면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성공단 진출을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이러한 한계기업 중심의 진출은 남북경제협력의 장기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진출 기업들의 수익성 향상에는 유의미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남북 공동 번영이라는 남북경협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¹³⁾ 제조업은 물론 남북 공동 첨단산업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R&D부터 제조, 가공, 최종재 생산에 해당하는 공정별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는 중간재 생산 기업들의 존재를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시장에서의 표준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며 북한의 구매력 상승을 위해서도 첨단산업보다는 고용과급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고려되어야 한다.¹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노동집약적이지만, MZ세대와 ESG 경영을 바탕으로 되어 일반 제조업 제품보다 고부가 가치를 가진 재활용 사업을 첨단산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제안한다.

재활용 사업은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융합한다면 알맞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로 인해 항상 공급의 부족을 겪는데 그 때문에 항상 재활용을 강조한다. 최근 대북제재로 인해 그 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자원화법을 제정한 이후 경공업성의 재자원화국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재활용 관련된 기술연구에도 상당한 정도로 자원을 투자해서 연구를 진전

13) 조성택,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0년 7월호 (2020), p.84

14) 위의 논문, pp.91-92.

시키는 상황들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평양에서는 도시오물의 재자원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재자원화 사업을 위해 국가과학원 환경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열공학부, 경공업성 등에서 폐기물의 새로운 가공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엔 단위별로 과학기술보급소를 만들어서 재활용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¹⁵⁾ 하지만 북한이 활용하지 못하는 폐기물은 매우 많은 양인 것으로 추산된다. 왜냐하면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산타 바바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이 한 해 바다에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90%가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¹⁶⁾였다. 재활용 사업은 북한이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북한의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 적합하며 북한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남북경협의 산업 선정에서는 북한의 장기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고 유치산업을 고려해야 하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분업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¹⁷⁾ 재활용 사업은 이러한 고려 사항에도 적합한 사업이다.

Ⅲ.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 보고서

1. “같이의 가치의 까치”의 사업 운영계획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은 한반도 고유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15) “북한의 쓰레기 처리 방법,” 「KBS」(온라인), 2021.05.20.;
 <http://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news/closeup_view.htm?lang=k¤t_page=&No=403642> (검색일:2021.09.13.)

16) “ ‘심각한 바닷속 침적 해양쓰레기 문제, 남북한 해양협력의 시작점으로 접근하길’ ,” 「자유아시아방송」(온라인), 2021.05.20.;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environment/fe-mj-01162020101457.html>
 (검색일:2021.09.16.)

17) 조성택, 앞의 논문, p.11.

디자인한 제품을 한반도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플라스틱과 폐그물을 통해 만든 솜이불과 무선이어폰 케이스, 깃 반팔 셔츠를 기본 상품으로 하며, 주기적으로 한반도 내 전통 문화 전문가들이나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협업한 제품도 만든다.

사업명	로고
<p style="text-align: center;">같이의 가치의 까치</p> <p>(남과 북)+(가치 창출)+(새활용, 반가운 손님)</p>	 

새로운 남북 경험 모델의 사업명인 “같이의 가치의 까치”에서 “같이”는 남북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치”는 ESG 경영을 통한 가치 창출을 뜻한다. 마지막 “까치”라는 단어는 새활용의 ‘새로운’을 뜻하는 관형사 ‘새’를 조류(새)로 형상화한 것이다. 작곡가 윤근영이 1924년에 작곡한 “까치 까치설날은 어저께고요.”라고 시작하는 곡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남한은 물론 북한에서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다. 설날에 외지에 사는 가족들과 친구들 등 반가운 손님이 오기 때문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속담이 생겼는데 ‘까치’를 통해 서로 떨어져 있던 그리운 남북 동포들이 만나는 소망을 담고 싶었다. 더하여 까치가 물고 있는 꽃인 작약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통해 남녘 동포끼리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같이의 가치의 까치”사업의 주된 목적은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 MZ세대의 통일에 관한 관심 촉구 및 인식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 우리의 정서를 함께 향유한다면 MZ세대가 느껴보지 못한 민족의 동질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북의 경제협력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나 경제적 발전 등을 몸소 느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그들 스스로 평화와 통일의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위해 남한과 북한의 경제, 정치 상황을 고려했으며, MZ세대의 특징과 세계적인 소비문화 트렌드도 반영했다. 타깃시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블랙핑크와 같은 K-POP 스타들에게 제품 협찬을 하여 제품 인지도를 높일 것이다. 사업은 기존의 개성공단 운영의 문제점이었던 특구 내 임금협상과 같은 갈등을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남북새활용사업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개성공단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해온 관리 체제 및 사고 갈등관리¹⁸⁾ 문제를 선례로 하여 사업을 실행하기 전,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생산 공장과 본사는 남북 접경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다. 남한 지역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개성공단이 북한 지역에 위치하였던 이유로 불편을 겪어야 했던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다. 통행·통신·통관의 문제, 개성공단 내 남한 주민의 신변 보호 문제, 남한이 외국과 체결한 개별 자유무역협정 상의 원산지 문제 등에 있어 개성공단보다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북한 근로자의 인건비가 남한 근로자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집약적 산업 기준으로는¹⁹⁾ 최대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와 마케팅은 본부에서 담당하며, 북한은 제조를 담당한다. 사원들은 청년 위주로 고용하여 청년실업률 줄이고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유인책을 마련하며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 과정 속 비교우위에 있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잘 활용한다면 한반도 경제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같이의 가치의 까치”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같이의 가치의 까치”사업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오스터왈더의

18) 김현정,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경제,”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2019), p.131

19) 양문수 외 3명,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경제협력 재개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정책연구』, 2016-88 (2016), p.70

9가지 BMC²⁰⁾를 활용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고객 세그먼트(CS), 본 사업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고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도 고객 세그먼트에 포함한다. 최근 전 국민이 열망하는 트렌드인 레트로와 전통문화를 새활용 사업에 접목해 많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많이 늘어나 글로벌 시장 또한 공략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치제안(VP), 본 사업은 폐기물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뿐만 아니라, 남북 공통의 전통문화를 통해 남북 사회의 동질감을 이끌어내려 한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함께 발전, 계승시킬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이러한 남북경협을 통해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고취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의 2%를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DMZ의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여 평화와 공존”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 세 번째 BMC요소인 채널(CH), “같이의 가치의 까치” 홈페이지를 만들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또한 중앙국립박물관과 협업해 뮤지엄 샵에 입점한 뒤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띤다. 오프라인 매장은 서울 새활용 플라자를 활용한다. 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 새활용 제품을 사거나 체험활동을 하면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연계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의식을 재고시킨다.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모든 것을 새활용으로 만든 오프라인 매장 설립한다. 도별로 “같이의 가치의 까치” 오프라인 매장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같이의 가치의 까

20) 오스트 왈더의 9가지 bmc란? 고객 세그먼트(CS): 기업이 제각기 얼마나 상이한 유형의 사람들 혹은 조직을 겨냥하는지 규정한다. 가치제안(VP): 특정한 고객 세그먼트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합이다. 채널(CH): 특정한 고객 세그먼트와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의미한다. 고객관계(CR): 특정한 고객 세그먼트와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뜻한다. 핵심자원(KR): 비즈니스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중요 자산이다. 핵심활동(KA): 기업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중요한 일이다. 핵심활동(KA): 기업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중요한 일이다. 핵심파트너십(KP):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히 작동시켜줄 수 있는 ‘공급자-파트너’ 간의 네트워크다. 수익원(RS): 기업이 각 고객 세그먼트로부터 창출하는 현금이다. 비용구조(CS):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치” 평양점 개점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 고객관계(CR), 새터민을 오프라인 매장의 직원으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 및 적응을 도와주며, 새터민이 생소한 시민들과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판매 직원에게 브랜드 스토리와 재활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해 소비자에게 가치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년 직원들을 활용하여 유튜브, SNS 채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활발하고 능동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워크숍, 이벤트, 전시회, 협업 등을 통해 홍보와 인식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 번째 수익원(RS)은 재활용 제품을 판매한 수입이 주된 수익원이 된다. 여섯 번째 핵심자원(KR), 폐플라스틱과 바다에 버려지는 폐그물망이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 기술력의 융합으로 인건비가 비용의 주가 되는 재활용 산업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또한, 남북 전통문화의 전문가들과 청년 디자이너들의 협업으로 전통적이지만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있으며, 기업들과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연결망도 자원이 된다. 일곱 번째 핵심 활동(KA), 각종 SNS와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반영한다. DMZ 생태계에 관한 영상이나 해양쓰레기 영상 보고 퀴즈를 풀거나, 통일과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 아이디어를 제품 디자인에 활용해 당첨자에게 제품을 보내주는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연다. 독특한 이벤트를 많이 열어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환경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여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며 가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이나 전용 굿즈를 주는 구조를 만든다. 또한 소비자가 기부한 원부자재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소비자가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마케팅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의 인플루언서와 K-POP스타들에게 무료 협찬을 해주며 자발적 홍보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여덟 번째 핵심 파트너십(KP)은 북한과 통일부, 문화재청이 협업하여 사업을 주도해나간다. 청년들을 고용하여 청년 고용률을 높이며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며 다양한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과 평화의 가치를 퍼뜨리는 활동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비용구조(CS), 원자재 수거, 세척, 디자인, 마케팅비, 인건비, 관리비, 설비, 생산비 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수익의 2%를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한다.

3. “같이의 가치의 가치”사업의 주력 제품

1) 솜이불

솜이불



북한은 남한보다 고위도에 있고, 대륙과 연결되어 있어 남한보다 평균 기온이 낮다. 겨울 평양의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외곽지역이나 농촌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북한 주민의 겨울은 더욱 고통스럽다. 특히 작년과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폐쇄와 북핵 문제로 인한 경제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²¹⁾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남북한의 남녀노소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인 담요와 이불을 첫 번째 재활용 제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침실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 이브자리는 2021년 8월 18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솜을 사용한 친환경 침구 '프레시블루'를 출시했다. 충전재로 쓰인 재활용 솜은 독일 섬유기업 어드반사가 개발한 소재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들었다.²²⁾ 위와

21) “북한주민들의 혹독한 겨울나기,” 「통일신문」(온라인), 2021.02.18.;

< <https://www.unityinfo.co.kr/32672> > (검색일:2021.09.11.)

같은 기술로 페플라스틱을 통해 숨을 만들고, 재활용 로고와 한반도를 상징하는 호랑이 문양을 합쳐 제품을 완성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명 ‘호랑이 담요’가 아마존 등 국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Korean Mink Velvet Blanket’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어²³⁾ 해외 소비자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선 이어폰 케이스



2020년, 고려청자 모양을 한 휴대폰 케이스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미미달의 고려청자 시리즈는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로 알려져 출시 1주일 만에 약 1만 개가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한국의 전통 디자인이 새겨진 생활용품에다가 청년 세대에게 활용성이 높은 상품이 제작돼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²⁴⁾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청년들이 고려청자 케이스를 소비하고 상시 들고 다니면서 전통문화가 자연스레 그들의 생활에 스며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청년

22) “페 플라스틱이 이불로 “...이브자리 ‘프레시블루’ 출시, “ 「NEWS1」(온라인), 2021.08.18.; <<https://www.news1.kr/articles/?4406938>> (검색일:2021.09.12.)

23) ‘호랑이 담요’ 외국 쇼핑사이트서 난리..“지금까지 이런 이불은 없었다.” 「동아닷컴」(온라인), 2019.02.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18/94172484/2>> (검색일: 2021.09.13.)

24) “‘고려청자’ 품은 휴대폰 케이스...젊은층 사로잡은 ‘전통 굿즈’,” 「뉴스핌」(온라인), 2020.09.1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11000794>> (검색일:2021.09.15.)

세대들의 관심 축구는 물론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어팟과 버즈케이스는 두 번째 남북경협 재활용 제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디자인은 조선의 민화를 바탕으로 하며, 꽃이나 동물, 새 등 상징물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도 재현하여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전통문제를 청년 세대의 감각과 실효성에 접목한 것처럼 통일문제 또한 청년세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전통문제와 환경문제를 접목해 청년 세대의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에어팟과 버즈케이스를 페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고, 먼저, 한반도 상징인 호랑이 무늬와 재활용무늬를 넣으며 통일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담으려 했다.

3) 깃반팔셔츠 두루마기

깃반팔셔츠 두루마기



최근 MZ세대 사이에 힙 트래디션(Hip Tradition)이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힙 트래디션이란 우리 고유의 전통에 MZ세대 특유의 힙한 감성을 입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접근은 지금까지 전통은 곧 고루한 것이라는 통념을 깨 것으로 전통이 얼마든지 힙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MZ세대가 전통을 즐기는 법은 이 날치와 BTS를 통해서 증명된 바 있다. 국악과 현대무용을 협업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와 BTS 슈가의 전통음악을 랩으로 구현한 '대취타'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블랙핑크의 '배꼽티

한복'은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순간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MZ세대는 험하게 소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²⁵⁾ 그래서 예쁜 전통 아이템에 열광하는 추세다. K-POP, K-드라마 등 한류열풍으로 한복이나 선비의 갓 등 한국 전통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생활한복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깃 반팔셔츠나 두루마기 코트 등 생활한복에 대해 남북의 공통 연구와 개발을 한다면, 함께 문화를 향유하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은 '조선옷차림 풍습'으로 202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심사를 목표로 신청서를 제출.²⁶⁾ 하며, 한복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북한은 가정 내 교육, 공식 교육과정,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공간 등을 통해 조선옷차림풍습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전승이 이루어진다. 또한, 조선옷차림풍습에 대한 기술 및 관습 관련 지식을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등에서는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²⁷⁾해 전문가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한반도의 공통된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데 있어 북한과의 협업은 필수적일 것이다. 2018년 남북한이 최초로 '씨름'종목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²⁸⁾한 것처럼, 한복과 그와 관련된 자수문화를 같이 연구하며 계승한다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잘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25) “고려청자, MZ세대를 만나다.” 「디자인정글」(온라인), 2021.03.11.; <<https://www.jungle.co.kr/magazine/202628>>, (검색일:2021.09.13.)

26)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남북경협 한복·자수문화 교류방안 연구용역: 무형 문화유산으로서의 한복·자수문화와 남북협력의 가능성』(안동:경상북도, 2019), p.64

27) 위의 논문, p.65

28) 위의 논문, p.76

IV.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의 한계와 해결방안

1. “같이의 가치의 까치”사업의 한계

1) 대북제재

2006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및 개발에 관련된 UN 안보리의 결의는 지금까지 총 10차례 채택되었다. 특히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UN대북제재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통제에서 대북 수출입금지 품목 지정과 대북사업 금지 업종 등 북한 경제일반에 대한 제재로 중심이 이동되었다.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석탄과 수산물, 섬유 및 농업생산물 등의 거래금지, 북한 내 외국은행의 폐쇄와 합작사업 금지 등 광범위하고 세밀한 제재가 시행되어 국제사회의 대북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이외에도 미국은 2016년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722호와 제13810호 그리고 대북제재강화법¹⁹⁾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채택하여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9월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10호의 경우 미국법을 위반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국내법이 아닌 국제적 강제력을 지닌 법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북제재강화법은 긴급 의료구조 등 극히 일부의 인도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미국인과 북한과의 모든 거래와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²⁹⁾ 또한 2010년 5월 24일,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5.24조치는 남북교역 중단과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를 포함하는 대북 신규투자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 협력 및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였다.³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모

29) 평화법제포럼,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서울 :추미애의원실, 2019), p.33

두 중단되었으며,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도 전면 불허되었다.

결의 제2270호 이후에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남북경협은 물론 단순한 물자교류나 위탁가공도 불가능하게 되었다,³¹⁾ 일부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사안별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의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의 진전이 없다면 유엔 대북제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국제사회의 반감만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1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가능하고,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³²⁾ 남북경협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은 미국이 언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 시켜,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를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교류 협력을 비롯한 경제협력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 결정에 가장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나 해제 결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낮고, 다른 상임이사국들은 미국의 입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내지 해제 결정에 비례성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여 제재를 풀거나 완화하는 것이다.³³⁾ 2021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관련 실무 조율단계에서 미국에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 사업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했지만 거부³⁴⁾당한 것을 보아 한국 정부의 힘만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

30) 위의 책, pp.34~35

31) 임수호, “대북제재 해제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2월호, KDI, 2018. 12., 40면.

32) 김녹영,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47권 (2019), p.84

33) 김녹영, 위의 논문, p.85

34) “한국, 남북 경제교류 북한 제재 예외 요구에 미국 거부” <요미우리>, “[SBS Biz] (온라인), 2021.06.22.;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0206?division=NAVER>> (검색일: 2021.09.14.)

로 앞으로의 북한의 행보가 남북교류 사업 및 경제교류 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호응 여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비핵화를 향한 역사적 행보가 멈췄다. 그 후, 다시 북미협상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 깜짝 정상회담을 하는 등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평화의 물꼬가 다시금 단혀버렸다. 2020년 6월 16일 남북 대화와 평화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발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최근 1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지만, 북한은 일방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어떠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³⁵⁾ 위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의 교류 협력 사업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대화조차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북한과 남한의 새활용 경제협력 사업은 모두에게 이롭지만, 제조사와 본사 모두 남한에 위치하게 되어 북한의 참여가 더욱 미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남한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데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남한과 기능적 관계망을 맺게 되면 체제 전환의 리스크를 높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남북경협은 정부가 철도 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조성 영역 등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민관협력 하에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일반교역, 위탁가공, 투자 협력 등으로 남북경협의 영역을 넓혀왔지만, 남북한 비무장 지대를 우회한 해운 항로로 물자 유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속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아무리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정치, 안보를 중요시하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선례를 살펴보면, 수출을 위해서는 공단을 남한 행정구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의 FTA에서 역외가공

35) “남북연락사무소 3주년…폭파에 연락두절까지 안갯속 ‘남북관계,’” 「NEWS1」(온라인), 2021.09.14.; <<https://www.news1.kr/articles/?4433346>> (검색일:2021.09.15.)

지역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성고안이 가동되었을 당시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세청(2013)은 개성공단 생산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에는 한국산으로 명기되나, 현품의 원산지표시는 협정상대국 법률에 따라 표기해야 하므로 북한으로 표시되는데 개성생산품(북한)의 인지도가 낮아 가격이 한국산의 1/3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산보다 품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활용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의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가 대부분 Made in D. P. R. Korea로 결정된다. 또한 개성공단 역외가공이 인정되는 FTA의 경우에도 가공비, 원산지 증명서 세관발급 등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남측 본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와 맺은 FTA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아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남한지역에서 생산할 경우 위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 운영상의 불안정성

개성공단은 남북한 상생(win-win)의 경제협력 모델이라는 점과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이 생산된 이래 2016년 2월 전면 중단이 된 12년간 적지 않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겪어 왔다. 사업 착수 시기에는 개발 여건과 투자조건에 관한 조율에서 남북 간 갈등이 빚어졌으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입주 희망 기업들이 입주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등 여러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을 전면에 내건 이명박 정권의 등장시기부터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정치적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한국 직원들을 억류한다거나, 폐쇄조치를 언급하는 등 안보갈등을 공단의 운영과 연결 지었다. 북한은 2008년에는 ‘12.1조치’를 통해 남북 간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고, 개성관광과 남북철도 운행을 중단했으며, 2009년 3월엔 키 리졸브(KeyResolve)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또다시 공단 통

행을 제한하고 차단하였으며, 3월 말부터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을 136일간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³⁶⁾ 재정적 부담이 전적으로 남측이 지고 있었는데 북측은 재정적 부담을 전하지 않고 있었다. 개성공단 관리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남북 당국 간 협력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 북측의 자의성이 지배하게 되면서 기존 제도를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었다.³⁷⁾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상했지만, 그 수준은 미비했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관계자들은 2016년 5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주기업과 영업기업들, 협력업체들 사이에 각종 미수금으로 인한 민사분쟁 등이 이어지고 있다.³⁸⁾ 남북경협의 운영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과 기업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남북경협은 ‘빛 좋은 개살구’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2. “같이의 가치의 가치” 사업 한계의 대안

1)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일반적인 사업 자체를 제재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역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교역을 위해 공적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 위반의

36) 양문수 외 3인, 앞의 논문, p.10

37) 위의 논문, pp.20-21

38) “ ‘원부자재 대금 지급하라’ 개성공단 입주·협력기업 줄소송,” 「통일뉴스」(온라인), 2016.10.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60>> (검색일:2021.09.14.)

소지가 있다. 한편 복합적 사업의 경우 사업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개시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교역행위가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철도 및 도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및 한국과 미국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남북철도 및 도로 사업을 개시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교역행위가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남북철도 및 도로 사업을 개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역행위로는 북한과의 물자 거래, 북한과의 인적 교류,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개성공단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통해 오히려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걸쳐 사업 진행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지속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표출할 필요도 있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며 변화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에 우리가 남북경협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는 5.24조치의 전면해제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⁹⁾

2) 북한의 호응 여부에 대한 방안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2018년 북한은 기존의 ‘경제-핵 무력 병진 노선’에서 ‘경제 노선’으로 전환하며 경제적 번영과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개혁 개방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심한 간섭과 국제적 수준의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해외 자본 유치가 쉽지 않았다. 또한 최근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재자원화가 쓰레기를 보물로 만들고 살림살이를 더욱 윤택하게 한다면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전민(全民)이 동참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법까지 제정

39) 평화법제포럼, 앞의 책, p.35

했고, 이 사업을 등한시하는 공장이나 기업을 당 조직지도부가 검열할 정도로 사황을 겪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과잉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 9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하면서 북한은 원자재 수급에 더욱 차질을 빚게 됐고, 연쇄적으로 북한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⁴⁰⁾ 남한의 비교우위인 자본, 기술과 북한의 비교우위인 노동력이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현재 북한은 재자원화와 폐쇄로 인한 자체적 에너지 생산에 대한 욕구가 크다. 최근 통영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쓰레기를 고온 분해해 기름을 뽑는 해양자원 리사이클링 시설을 추진했다. 매년 폐그물, 폐로프, 폐스티로폼 부표, 굴 양식장 폐코팅사 등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 쓰레기는 각종 이물질과 염분이 뒤섞여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소각 처리된다. 하지만 해양자원 리사이클링 시설은 해양쓰레기와 폐플라스틱을 잘게 부순 후 고온 분해해 ‘열분해유’를 생산한다. 이 열분해유는 선박 연료, 화력발전소, 가정용 보일러 등에 대체 연료로 쓸 수 있다.⁴¹⁾ 해양쓰레기를 통해 소비제품을 만들고 해양쓰레기를 통해 원유를 만들 수 있다면 북한 당국에서는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해양쓰레기를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일정 기간과 목표 달성량을 채울 시 단계적으로 값 싼 가격으로 공급하며 최후 단계에서 장비를 공유해 남북경협유인책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성공단 운영에 참여해왔다.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송출 인력의 탈북과 이들이 자본주의 문화 유입의 음성적 통로가 되는 등의 정치, 안보적 위험이 따른다. 남북접경 지역을 통해 다른 나라 보다 안정적으로 외화 획득이 가능하다면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선택지일 것이다.

40) “[북한읽기] ‘쓰레기를 보물로’ … ‘재자원화’ 에 대한 소고(小考), “ [DAILYNK] (온라인), 2021.04.27.;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9d%bd%ea%b8%b0-%ec%93%b0%eb%a0%88%ea%b0%eb%a5%bc-%eb%b3%b4%eb%ac%bc%eb%a1%9c-%ec%9e%ac%ec%9e%90%ec%9b%90%ed%99%94%ec%97%90-%eb%8c%80/>> (검색일:2021.09.14.)

41) “해양쓰레기가 기름으로…굴껍데기는 산업자재로,” [경남일보] (온라인), 2021.07.27.;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726>> (검색일:2021.09.17.)

3) 개성공단 운영의 문제와 불안정성

새로운 남북경협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구축된다면 남북 모두 남북경협 사업의 일방적인 중단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투자 자본 유치는 더욱더 다채로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준다. 남북경협의 재개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완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국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남북 새활용 사업을 해외 각국과 연계한다면 더 유리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단 관리체계와 중재위원회, 법제 제정도 국제화하여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남북이 독단적으로 사업 운영을 중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화폐로 직접 지불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임금직불을 관철하게 되면 우선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임금이 핵무기 및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주장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향상되어 상품 수요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재 시장이 발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⁴²⁾ 하지만 개별 근로자들이 달러화로 직접 받더라도 상품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화폐(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공단 내 북한 근로자를 위한 소비재 시장을 개설하여 물품 대금으로 지급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남북경협 중단 절차와 보상 장치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확실한 보상을 만들어야 한다.

42) 양문수 외 3인, p.64.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논문을 통해, 앞으로 재개될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같이의 가치의 가치” 사업을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간 남북의 문제는 대외 내 변수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언젠간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남북경협에 대한 기초 구상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남북관계 사안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를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기에 통일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MZ세대들의 통일 인식 제고를 중심 과제로 삼았다. 청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한다면 청년 세대의 이목을 끌 수 있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남북 경제협력 제품을 접해보고, 남북한이 공통으로 향유했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결과물을 보며, ‘하나로 다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같이의 가치의 가치” 사업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쓰레기를 원자재로 삼기에 한반도 주변의 미관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또한 공유할 수 있다. 청년들은 남북경협 사업이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같이’ 남북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며 이에 기반을 둔 상품 제작과 소비를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일체성을 깨닫고,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지원 또한 가능하다. 아래로부터의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신뢰는 후에 이뤄질 또 다른 교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일련의 교류 협력 과정은 다시 남한과 북한이 더욱 긴밀하고 다채로운 교류에 가까워지게 만든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간의 정치적 긴장감 완화하고 습관화된 협력이 자연스레 남북경협과 평화에 대한 긍정적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같이의 가치의 까치” 사업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을 교류의 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기구, 한반도의 미래를 이끄는 기구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남북 경협은 유엔 대북제재, 현행의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중재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정책과 입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주역 MZ세대, 모든 역사의 중심엔 청년이 있었고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엔 청년이 있었다. 상보상성(相輔相成)의 자세로 남과 북이 서로를 도와 모두가 함께한다면 우린 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같이의 가치의 까치”는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유치산업의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의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평화법제포럼,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서울 :추미애 의원실,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남북경협 한복·자수문화 교류방안 연구용역: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한복·자수문화와 남북협력의 가능성』 (안동:경상북도, 2019),

▣ 논문

권영경, “남북경협의 역사적 고찰과 재개를 위한 과제,” 『통일문제연구』, 30권 1호 (2018),

김녹영,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47권 (2019),

김현정,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경제,”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2019),

양문수 외 3명,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경제협력 재개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정책연구』, 2016-88 (2016),

임수호, “대북제재 해제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2월호, KDI, 2018. 12.

조성택,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0년 7월호 (2020),

한지혜 외 1인, “한국적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개발” 『해선비즈니스』, 23권 4호 (2019),

▣ 학위논문

손유나, “남북한 경제협력지대 활용 방안 연구 : 개성공단과 해외 OPZ·QIZ 사례 비교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인터넷 자료

- “ ESG, 왜 유독 한국에서 중요해졌을까?,” 『종합시사매거진』 (온라인), 2021.09.15.;
<<http://www.sisanews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4>>
(검색일:2021.09.14.)
- “MZ세대가 ESG 가치에 뜨겁게 호응하는 이유,” 『ESG경제』 (온라인),
2021.02.02;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
(검색일:2021.09.12.)
- “'고려청자' 품은 휴대폰 케이스..젊은층 사로잡은 '전통 굿즈,’” 『뉴스핌』 (온라인),
2020.09.1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11000794>> (검색일:
2021.09.15.)
- “남북경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프레시안』 (온라인), 201.01.21;
<<https://news.v.daum.net/v/20190121135206659>> (검색일:2021.09.13.)
- “남북연락사무소 3주년...폭파에 연락두절까지 안갯속 '남북관계,’” 『NEWS1』
(온라인), 2021.09.14.; <<https://www.news1.kr/articles/?4433346>>
(검색일:2021.09.15.)
- “뜨거운 화두 ‘ESG 경영’, 전력공기업들도 강화나서,” 『전기저널』 (온라인),
2021.05.07.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
(검색일:2021.09.14.)
- “북한의 쓰레기 처리 방법,” 『KBS』 (온라인), 2021.05.20.;
<[http://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news/closeup_](http://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news/closeup_view.htm?lang=k¤t_page=&No=403642)
[view.htm?lang=k¤t_page=&No=403642](http://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news/closeup_view.htm?lang=k¤t_page=&No=403642)> (검색일:2021.09.13.)
- “[북한읽기] “쓰레기를 보물로”... ‘재자원화’에 대한 소고(小考),” 『DAILYNK』
(온라인), 2021.04.27.;
<<https://url.kr/y8efz3>> (검색일:2021.09.14.)
- “북한주민들의 혹독한 겨울나기,” 『통일신문』 (온라인), 2021.02.18.;
< <https://www.unityinfo.co.kr/32672>> (검색일:2021.09.11.)

- “심각한 바닷속 침적 해양쓰레기 문제, 남북한 해양협력의 시작점으로 접근하길,”
『자유아시아방송』 (온라인), 2021.05.20.;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environment/fe-mj-01162020101457.html> (검색일:2021.09.16.)
- ‘원부자재 대금 지급하라’ 개성공단 입주·협력기업 출소송,” 『통일뉴스』 (온라인),
2016.10.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60>> (검색일:2021.09.14.)
- “한국, 남북 경제교류 북한 제재 예외 요구에 미국 거부” <요미우리>, 『SBS Biz』
(온라인), 2021.06.22.;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0206?division=NAVER>> (검색일:2021.09.14.)
- ‘호랑이 담요’ 외국 쇼핑사이트서 난리..“지금까지 이런 이불은 없었다,” 『동아닷컴』
(온라인), 2019.02.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18/94172484/2>> (검색일:2021.09.13.)
- “해양쓰레기가 기름으로...굴껍데기는 산업자재로,” 『경남일보』 (온라인), 2021.07.27.;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726>>
(검색일:2021.09.17.)

장 려

문화적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로 인한 위협과 다양성 이념의 완충 효과의 탐색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이 성 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허 성 진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방법
- III. 결과
- IV. 논의

【참고문헌】

【요약문】

문화적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로 인한 위협과 다양성 이념의 완충 효과의 탐색

본 연구에서는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유입되어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가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알아보았다. 특히 다양성 이념이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는지 시험하고, 이 결과를 통일 교육에 적용하여 논의하였다. 통일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회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관련한 한국인의 심리와 관련한 연구는 통일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심리학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8년 1, 2차 남북정상회담은 오랜 단절을 지나 국민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긍정적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일 교육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일과 관련된 관용과 포용의 정신 및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오랜 분단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교류에 제약이 있는 현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에만 기대어 통일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단 이래 남한의 통일 교육은 오랜 기간 남북의 민족적/문화적 공통성에 집중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이인정, 2020).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격차가 극화된 배경 아래에서 ‘민족 통일’의 패러다임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에 대비하는 부분에서 교육적 한계를 가지

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지점에서 다문화 통일 교육은 남한과 북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교육적 지향점을 가진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다양한 사회 구성 집단들이 다양성에 접근하고 이를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과 생각의 총체를 뜻하는 ‘다양성 이념(diversity ideology)’의 한 관점이다. 다양성 이념에는 다문화주의 외에도 집단 간 구분의 인식을 최소화하고 대할 것을 주장하는 색맹주의(colorblindness), 다문화주의와 마찬가지로 집단 간 차이를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보지만, 교류를 통한 문화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polyculturalism) 등이 존재한다.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성 이념으로 평가되어왔다(Levin et al., 2012; Wolsko et al., 2006).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집단 간 차이를 강조하고 이러한 차이를 영속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다문화주의의 특징이 사회 범주에 대한 구분을 현저하게 만들어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Gündemir & Galinsky, 2018; Hahn et al., 2010, 2015; Verkuyten, 2005). 이에 따르면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통일 교육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간의 이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성 이념이 집단 간 관계에 가지는 심리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 이념이 통일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할지 심리학적 실험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통일에 더 반대하였다. 다양성 이념별로 살펴봤을 때, 특히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야기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 조건에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는 남한 사람들의 실질적 위협(realistic threat)을 증가시켰고, 이것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일 교육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데 있어 여전히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다수 유입되어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를 접하였을 때 남한 사람들이 보인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실제로 통일이 이룩된 이후, 우리 사회가 마주할 집단 간 갈등의 일면을 보여준다.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 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봉합하고 통일 한국의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데 있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교육적 접근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일 교육에 있어 평면적으로 단일한 다양성 이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통일 교육 각 단계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에 유용한 다양성 이념을 유연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집단 간 통합에 대한 사회심리학 이론을 사용하여 통일 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성 이념의 기능과 그 심리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통일 교육이 통일을 위한 교육, 통일에 대한 교육,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박광기(2012)의 제안처럼 각 통일 교육의 단계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적합한 다양성 이념의 관점을 채택하여 입체적인 통일 교육을 시행할 것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통일에 대한 태도, 다양성 이념, 색맹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집단 간 통합에 관한 사회심리학 이론과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모색하려고 한다. 2018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교류의 오랜 단절을 지나 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북한과의 평화로운 공존,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교육의 주요 대상인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민족 통일의 당위에 공감하지 못함에도(통일연구원, 2017), 현행 통일 교육에는 변화한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통일 교육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짚어낼 것이다. 이후 사회심리학에서의 집단 간 통합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여 통일 이후 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들을 실험적으로 밝히고, 사람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인 다양성 이념에 따라 남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협의 부정적 결과(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통일 교육에서 심리학적 접근과 다양성 이념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통일 교육 현황 및 문제점

남한과 북한의 긴 공통 역사와 문화적 유사성은 한반도 분단 이후에

도 서로를 ‘한민족’으로 여기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 통일 교육은 민족의 합치 관점에 집중하였다(신봉철, 2010). 단일 민족성의 회복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직관적이면서도 호소력 있는 통일의 당위성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회가 여전히 동질적인 사회인지, 나아가 남북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 사회의 간극은 심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남북의 경제 수준은 이미 거의 모든 영역의 지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신장철, 2016), 뿐만 아니라 비록 같은 언어 체계와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오랜 남북 상호 교류의 단절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들을 상당히 이질화시켰고, 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교류와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민채, 2020; 김석향, 2005; 이경희, 1997). 분단으로 인한 사회 교류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6.15 남북공동선언>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북한의 폐쇄적 대(對)국제 정책 기조 및 도발과 남한의 강경한 대응이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이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같은 남북교류사업의 대부분은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 통합’으로서의 통일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권성아, 2019).

한반도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민족 통합의 당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020년 국민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은 2018년 66%에서 2020년 59.6%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KBS 남북교육협력단, 2020). 이러한 조사 결과를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전통적인 관점의 통일 교육으로는 교육의 주요한 대상인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유도하는 데 실패하고 있

다는 사실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실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 동의를 한 비율이 동의하지 않은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20~40대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연구원, 2017).

이러한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통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점도 변화해야 한다는 압력 또한 거세지고 있다.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통일과 관련 있는 평화, 관용, 존중 등의 가치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정서적 당위를 기초로 한 통일 교육은 합리적 사고를 배제하고 두 집단의 동질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통일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분단 상황으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를 갖게 된 현 남북한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지금 통일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동질성’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일 수 있다. 차이에 대한 존중 없이는 남북이 정치적 통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심화된 문화적 간극에서 야기될 다양한 집단 간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양문수, 이우영, 2019; 심양섭, 2016)은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의 양상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장기화된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통일은 단일 민족·문화 공동체와의 융합으로 여겨지기보다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문화를 가진 낯선 집단과의 조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 사회와 교류해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가 현 통일 교육의 주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통일을 ‘익숙하지만 낯선’ 집단인 북한과의 통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기존의 ‘민족 통일’의 패러다임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다문화 통일 교육이 제안되고 있다(이인정, 2020; 정진리, 유가현, 2020). 2018년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하여, 흡수 통일

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였다(신중섭, 2021). 다문화 통일 교육은 오랜 분단 기간 동안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로 분기한 남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닌 다른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사회에서 생활한 개인들의 경험을 존중함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 통일 교육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에 대비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통일 교육 방향성과 차별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수용한 다문화 통일 교육은 단순히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고 관용적 태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추병완, 2011). 하지만 다문화 통일 교육에도 여전히 한계 지점이 존재한다.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관계에서 서로 다른 집단의 관습과 문화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격려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역설적으로 집단 간 구별을 두드러지게 하여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Plaut et al., 2011; Vorauer & Sasaki, 2011).

앞서 언급한 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통일 교육의 한계 지점을 짚고, 통일 이후 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을 실험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 통일 교육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를 비롯한 상호문화주의와 같은 여러 다양성 이념들의 심리적 효과들을 비교하여 한반도 통일 교육에서 가장 적합한 다양성 이념이 무엇일지를 탐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와 지각된 위협의 결과

현대적 의미의 통일은 다양성 증가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70

년 이상 분단되어 드물게 교류해온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남한 사람들에게 이질적인 사회와의 통합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즉, 한반도 통일은 남한 사람들에게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질적인 집단과의 접촉이 기존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공포나 위협 같은 부정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Chiu et al.,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존하게 될 다양한 민족·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할지와 관련한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Chiu와 Cheng(2007)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에서 비롯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정보(예. 퓨전음식)에 노출되면 사회 갈등과 문화 오염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켜 외집단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정보를 제시하면 해당 사회의 기존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위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Craig & Richeson, 2014, 2017). 집단 간 관계에서 지각되는 위협은 크게 집단의 가치, 삶의 방식 등이 외집단 구성원에 의해 오염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 위협(realistic threat)’과 본인들의 지위, 권력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상징적 위협(symbolic threat)’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Maddux et al., 2008; Outten et al., 2012).

인구 다양성 증가로 인한 주류 집단 구성원들의 위협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Osborn과 동료들(2020)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정보를 접한 미국의 백인들은 인구 다양성과 상관없는 정보를 읽은 조건의 백인들보다 더 큰 위협을 보고하였고, 이는 백인들이 정치적으로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증가한 위협의 결과로 소수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또한 덜 지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면,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이 다수 이주하여 남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될 것이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남한 사람들이 지각하는 위협이 증가하여 통일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양성 이념의 조절 효과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과 교류로 인한 인구 다양성의 증가는 쉽게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야기될 사회 변화가 불려 올 남한 사회 구성원들의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으로서 여러 다양성 이념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양성 이념(diversity ideology)은 다양한 사회 구성 집단들이 다양성에 접근하고 이를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과 생각의 총체를 말한다(Gündemir et al., 2019). 2021년 기준, 남한의 인구수는 북한의 인구보다 약 두 배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도 남한은 북한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통일 한국 사회에서 남한 출신 사람들은 북한 출신 사람들에 비해 사회 주류 집단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종합하면, 남한 사람들의 다양성 이념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 사회 내 주류 집단의 다양성 이념이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소속감 등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Plaut et al., 2009).

다양성 이념은 아주 큰 틀에서 집단 간 차이, 즉 다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집단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고 대상을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대우하는 다양성 이념으로는 색맹주의(colorblindness; Wolsko et al., 2000)가 있다. 색맹주의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보는 다양성 이념이다. 오늘날 색맹주의는 단순히 인종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을 구분짓는 특징들을 최대한 무시하고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강조하는 다양성 이념으로도 해석된다(Cho et al., 2017). 색맹주의는 최초로 인종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관련된 연구에서는 소수 집단 구성원

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laut et al., 2009). 현실적으로 사회의 모든 집단 구분을 무시하자는 주장이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이를 추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색맹주의의 특징은 사회 주류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모든 사회 집단을 상위집단의 문화와 규범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화주의(assimilation)’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Fryberg & Stephens, 2010). 각 사회 집단의 독특성을 무시하고 똑같이 대우하자는 논지를 가진 색맹주의는 ‘다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다양성 이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앞서 언급된 색맹주의와 달리 ‘다름에 가치를 부여하는(value the difference)’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인종, 민족에서 유래된 다름은 격려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색맹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소수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색맹주의는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편향을 증가시키는 반면(Apfelbaum, Sommers, & Norton, 2008; Plaut et al. 2009),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수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olsko et al., 2006).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인구로 구성된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갈등을 완화하고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성 이념으로 여겨지고 있다(Levin et al., 2012).

그러나 다문화주의와 관련한 최근 연구들의 결과는 이제껏 집단 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아온 다문화주의가 주류집단 구성원들의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소수 집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Osborn et al., 2020; Rosenthal & Levy, 2012). 대표적으로 다문화주의 관점은 집단 간 차이를 강조하고 사회적 범주를 고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Gündemir & Galinsky, 2018; Hahn et al., 2010, 2015; Verkuyten, 2005).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기반

한 통일 교육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간의 구분을 더 현저하게 만들고, 북한 사회와 북한 사람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강화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상호문화주의(polyculturalism)가 제안되었다.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적 집단 간 경계를 부각시키기보다 집단 간 상호작용과 상호연결을 강조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의 유동성을 부각하는 다양성 이념이다(Verkuyten et al., 2020).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처럼 집단 간 차이를 인정하나, 각 집단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상호연결을 강조한다는 데에서 그 차이가 있다(Osborn et al., 2020).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집단 간 관계에서 상호문화주의의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문화주의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더 많이 보였으며, 외집단과의 접촉 의향을 더 보이는 등의 긍정적인 집단 간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thal & Levy, 2012; Rosenthal & Levy, 2016; Rosenthal et al., 2015).

다음으로 살펴볼 연구들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Cho 등(2017)의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두 관점을 조작하여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공존하는 경험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상호문화주의를 설명하는 글을 읽은 참가자들은 외부의 문화적 요소가 혼합된 경험(예. 퓨전음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글을 읽은 참가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주의를 강하게 지지할수록 다양한 문화의 요소가 혼합된 경험을 덜 선택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단일한 문화적 경험(예. 정통 프랑스음식)에 대해 더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상호문화주의를 더 지지하는 개인은 문화적으로 혼합된 경험과 혼합되지 않은 경험 모두를 비슷한 정도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born 등(2020)의 연구에서는 소수 인종의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보를 읽은 참가자들에게서 위협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협의 결과로서 야기된 정치적 보수화 수준이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글을 제시한 조건에서, 소수 인종의 부상은 주류 집단의 위협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 보수주의로 이어졌다. 반면,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나거나 다문화주의와는 반대로 주류 집단의 현실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기화된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 은 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질적인 북한 사회 구성원의 유입을 암시하여 현실적/상징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고조된 위협은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다양성 이념이 통일 이후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야기하는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라는 특수한 집단 간 관계에 있어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현실적/상징적 위협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이러한 결과가 여러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개관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구 다양성 증가의 부정적인 영향이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인구 다양성 증가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다른 이유를 현실적/상징적 위협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1-1.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호문화주의 조건과 다문화주의 조건에서 통제 조건에 비해 더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1-2.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다문화주의 조건에 비해 더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2.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현실적/상징적 위협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2-1.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현실적/상징적 위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호문화주의 조건과 다문화주의 조건에서 통제 조건에 비해 더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2-2.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현실적/상징적 위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다문화주의 조건에 비해 더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3.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다른 이유를 현실적/상징적 위협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3-1.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호문화주의 조건과 다문화주의 조건에서 통제 조건에 비해 완화되는 이유는 두 조건에서 통제 조건에 비해 현실적/상징적 위협을 더 약하게 지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 가설 3-2.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다문화주의 조건에 비해 더 약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다문화주의 조건에 비해 현실적/상징적 위협을 더 약하게 지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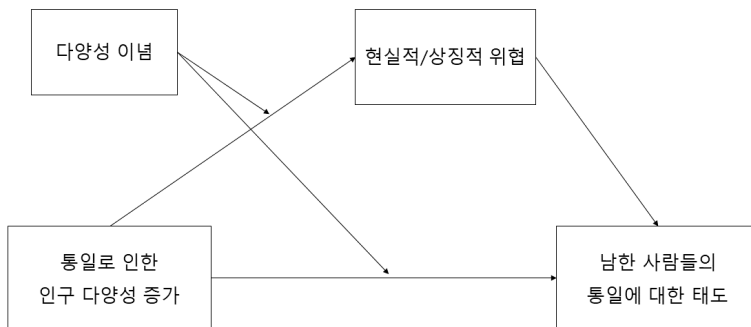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주목한 두 다양성 이념(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은 모두 '다름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색맹주의 조건을 탐색적 목적으로 추가하여 특정한 예측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Ⅱ. 방법

1.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 수는 G-power(Faul et al., 2007)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Richard와 동료들(2003)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는 Cohen`s d = 0.36이다. 이를 기반으로 80% 이상의 검정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참가자 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적절한 검정력을 위해서는 341명의 참가자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power를 통한 참가자 수 산출 방법이 매개분석을 위한 참가자 수를 과소추정한다는 Schoemann과 동료들(2017)의 권고와 주의점점에 탈락할 가능성을 고려해 총 400명(남 2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참가자 모집은 국내 리서치 회사인 인바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참가자들은 리서치 회사에서 책정한 보상을 대가로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결과 분석에는 전체

참가자의 자료 중 주의점점에 탈락한 13명과 자료 분석에 동의하지 않은 7명의 자료를 제외한 380명(남 193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최종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그림 1]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연구 모형.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점화는 두 조건(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 vs. 통제 조건), 다양성 이념은 네 조건(통제 조건 vs. 색맹주의의 조건 vs. 다문화주의의 조건 vs. 상호문화주의의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2. 절차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참가자 빈도

	구분	남성(%)	여성(%)	계
성별		193	187	380
연령	20대	37(19.2)	38(20.3)	75(19.7)
	30대	39(20.2)	38(20.3)	77(20.3)
	40대	40(20.7)	35(18.7)	75(19.7)
	50대	40(20.7)	39(20.9)	79(20.8)
	60대 이상	37(19.2)	37(19.8)	74(19.5)
학력	무학	0(0.0)	1(0.5)	1(0.3)
	고등학교 졸업	23(11.9)	39(20.9)	62(16.3)
	대학교 재학/졸업	138(71.5)	126(67.4)	264(69.5)
	대학원 재학/졸업	32(16.6)	21(11.2)	53(13.9)

실험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통일 한국과 한국인의 태도’를 알아보는 연구라고 사전에 안내받은 뒤 연구 참가 동의 여부를 밝히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조건별 연령, 성별 균등할당을 위한 사전 스크리닝을 이유로 먼저 자신의 연령과 성별을 보고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통일 이후 나타날 변화(인구 다양성 변화 조건 vs. 국토 변화 조건)에 대해 서술한 가상의 연구 보고서를 읽고,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는 각 실험 조건(통제 조건 vs. 색맹주의 조건 vs. 다문화주의 조건 vs. 상호문화주의 조건)에 해당하는 다양성 이념 조작을 위한 가상의 언론 기고문이 제시되었으며, 앞선 절차와 마찬가지로 기고문의 내용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 조작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매개변인인 현실적 및 상징적 위협과 종속변인인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지지 정도, 그리고 탐색적 목적으로 추가된 사회지배성향에 순서대로 응답하였으며¹⁾, 이어서 학력, 정치적 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사후 설명을

끝으로 실험은 종료되었다. 연구의 소요시간은 30분 내외였으며, 연구 절차와 측정 도구는 연구가 수행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3. 실험 조작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다양성 증가를 실험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두 개의 조건(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 vs. 통제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으며, 각 조건에 해당하는 가상의 연구 보고서를 제공받았다.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에서 제시된 연구 보고서는 통일 이후 북한 출신 사람들이 다수 남한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통일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를 중점으로 서술되었다. 한편 통제 조건에서 제시된 연구 보고서는 논발 비율의 변화 등의 통일 이후 나타날 통일 한국 사회의 국토 변화를 중점으로 서술되었다. 연구 보고서를 다 읽은 후에는 연구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지 않은 참가자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한 주의점검 문항이 제시되었다. 주의점검 문항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 보고서의 핵심 문장으로 구성된 객관식 두 문항이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응답을 한 참가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다양성 이념 조작을 위한 네 개의 조건(통제 조건 vs. 색맹주의 조건 vs. 다문화주의 조건 vs. 상호문화주의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어, 각 다양성 이념에 대해 서술한 가상의 기고문을 제공받았다. 본 연구에서 다양성 이념 조작을 위해 사용한 기고문은 Cho와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사문을 번역 및 수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기고문은 1) 색맹주의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2) 다문화주의 조건에서는 모든 문화가 각자만의 고유하고 불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의 보존이 필요한

1)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지지 정도는 탐색적 목적으로 측정되었으며,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이후 보고에서 제외하였다.

일임을, 3)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다양한 문화들이 상호 교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왔음을 중점으로 서술되었다. 통제 조건에는 다양성 이념과는 무관한 동굴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었다. 기고문을 다 읽은 후에는 기고문을 주의 깊게 읽지 않거나 기고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한 주의점점 문항이 제시되었다. 주의점점 문항은 제시된 기고문의 주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무엇인지 고르는 객관식 문항이 하나 제시되었으며, 이 문항에 올바른 응답을 하지 못한 참가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4. 측정도구

(1) 현실적 및 상징적 위협

현실적 및 상징적 위협의 측정은 Stephan과 동료들(1999)이 이주민에 대한 미국의 주류 집단인 백인들의 위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중 일부를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실적 위협 측정을 위해 5문항(‘통일 한국에서는 북한 출신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통일된 한국 사회에서 북한 출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할 것이다’, ‘통일 후에 북한 출신 사람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 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다’, ‘통일 한국 사회에서 북한 출신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출신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이 사용되었다. 상징적 위협의 경우 현실적 위협과 마찬가지로 Stephan 등(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4문항(‘통일 한국 사회에서 북한 출신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신념이나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통일 한국에서 북한 출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신념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공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배워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에서 북한 출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와 신념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공

존할 수 없을 것이다')을 채택하고,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현실적 위협 문항('통일 한국에서 북한 출신 사람들은 우리 시민사회를 오염시킬 것이다') 하나를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7 = "매우 그럴 것이다")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실적 및 상징적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 위협 다섯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상징적 위협 다섯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2)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0)의 통일의식조사 와 KBS 남북교육협력단(2020)의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통일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연속형 다섯 문항(예: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 이와 별개의 이분형 한 문항('남북 통일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으로 구성되었다. 연속형 다섯 문항은 7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었으며, 이분형 한 문항은 찬성과 반대의 두 선택지(0 = "반대한다", 1 = "찬성한다")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 연속형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통일에 대한 태도 다섯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3) 사회지배성향

사회지배성향은 Ho 등(2015)이 타당화한 사회지배성향의 단축형 척도를 황미애(2020)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은 총 8개(예: '일상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은 상위에 있고 다른 집단은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열등하다')였으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배성향이 높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관련된 문항을 적절히 역코딩하였다. 사회지배성향 여덟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4)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참가자들의 나이와 성별, 학력, 정치적 태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였다. 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대학교 재학/졸업, ⑥대학원 재학/졸업, ⑦ 기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기타는 참가자의 학력에 대한 단답형 응답을 근거로 적절히 해당하는 범주로 재코딩되었다. 정치적 성향은 7점 척도(1 = “매우 보수적이다”, 7 = “매우 진보적이다”) 상에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Adler 등(2000)의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열 개의 층이 있는 사다리 그림을 보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국 사회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보고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참가자가 지각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Ⅲ. 결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에는 SPSS 25.0이 사용되었다. 주요 가설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참가자의 나이, 성별, 학력, 정치적 성향,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지배성향은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 1)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의 영향이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가?(가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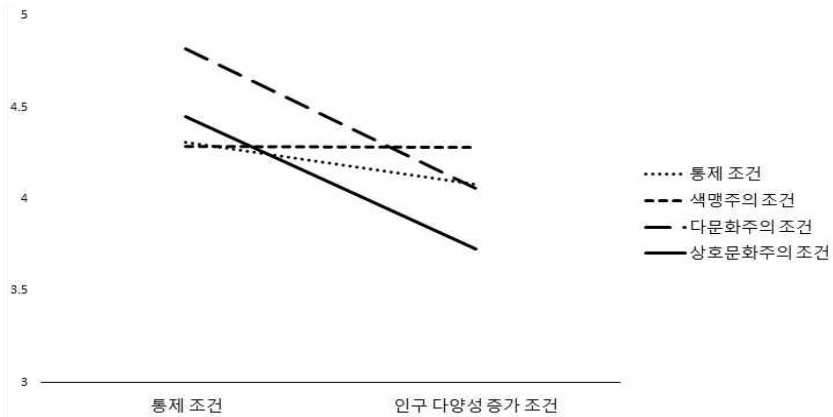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된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다른지 검증하기 위해, 연속형으로 측정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구 다양성 점화(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 vs. 통제 조건)와 다양성 이념(통제 조건 vs. 색맹주의 조건 vs. 다문화주의 조건 vs. 상호문화주의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다양성 점화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F(1, 366) = 9.95, p < .01, \text{partial } \eta^2 = .026$, 다양성 이념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3, 366) = 1.19, p = .313, \text{partial } \eta^2 = .010$. 인구 다양성 점화와 다양성 이념의 상호작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3, 366) = 1.82, p = .144, \text{partial } \eta^2 = .015$. 구체적으로 각 다양성 이념별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제 조건과 색맹주의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각각 $F(1, 366) = 0.54, p = .463; F(1, 366)$

<표 2> 변인 간 상관 및 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현실적위협	-									
2. 상징적위협	.78***	-								
3. 통일태도	-.56***	-.60***	-							
4. 통일찬반	-.47***	-.47***	.76***	-						
5. 사회지배성향	.32***	.38***	-.26***	-.24***	-					
6. 나이	.03	-.07	.13*	.07	-.13*	-				
7. 성별	-.01	-.02	-.12*	-.04	-.13*	-.04	-			
8. 학력	.01	-.03	.08	.06	-.02	.03	-.14**	-		
9. 정치적 성향	-.36**	-.30***	.34***	.30***	-.25***	-.21***	.06	.05	-	
10. 사회경제적지위	-.09	-.10*	.17***	.10	.06	.08	-.09	.30***	-.06	-
평균 (표준편차)	4.94 (1.16)	4.50 (1.13)	4.26 (1.53)	0.66 (0.47)	3.30 (0.86)	44.71 (13.86)	1.49 (0.50)	4.97 (0.59)	4.11 (1.08)	5.19 (1.68)

성별은 1 = 남자, 2 = 여자로 코딩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 0.09, $p = .759$,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각각 $F(1, 366) = 5.49, p < .05$; $F(1, 366) = 6.07, p < .05$. 이는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야기했음을 의미한다. 다양성 이념 조건별 인구 다양성 증가가 야기한 통일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다양성 이념 조건별 인구 다양성 증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변화.

Y 축의 값은 통일에 대한 태도의 추정 평균값이다.

<표 3> 조건별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빈도

		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	통제 조건(%)
통제조건	찬성	28(57.1)	33(67.3)
	반대	21(42.9)	16(32.7)
	전체	49(100)	49(100)
색맹주의 조건	찬성	29(64.4)	30(65.2)
	반대	16(35.6)	16(34.8)
	전체	45(100)	46(100)
다문화주의 조건	찬성	33(68.8)	39(81.3)
	반대	15(31.3)	9(18.8)
	전체	48(100)	48(100)
상호문화주의 조건	찬성	23(51.1)	36(72.0)
	반대	22(48.9)	14(28.0)
	전체	45(100)	50(100)

이어서 이분형으로 측정된 통일에 대한 찬반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구 다양성 점화(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 = 1 vs. 통제 조건 = 0)와 다양성 이념(통제 조건 vs. 색맹주의 조건 vs. 다문화주의 조건 vs. 상호문화주의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 변인들이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 다양성 점화와 다양성 이념을 투입하여 각 항목이 통일에 대한 찬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 다양성 점화 X 다양성 이념을 투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였다. 조건별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빈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인구 다양성 점화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 = -.74$, $p < .01$, 다양성 이념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s > .091$. 인구 다양성 점화와 다양성 이념의 상호작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s > .163$. 구체적으로 각 다양성 이념별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찬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제 조건과 색맹주의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각각 $B = -.30$, $p = .507$; $B = -.28$, $p = .567$,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각각 $B = -1.30$, $p < .05$; $B = -1.18$, $p < .05$. 이는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를 제시하면 통일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종합해보면,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를 상기시키면 통일에 대한 태도와 찬반 모두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현실적/상징적 위협을 증가시키는가? 그리고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의 영향이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가?(가설 2)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현실적/상징적 위협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된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다른지 검증하기 위해, 현실적 위협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구 다양성 점화(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 vs. 통제 조건)

와 다양성 이념(통제 조건 vs. 색맹주의 조건 vs. 다문화주의 조건 vs. 상호문화주의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별 추정 평균 및 표준오차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인구 다양성 점화와 다양성 이념의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1, 366) = 0.46, p = .498, \text{partial } \eta^2 = .001. F(3, 366) = 0.14, p = .938, \text{partial } \eta^2 = .001$. 인구 다양성 점화와 다양성 이념의 상호작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3, 366) = 2.01, p = .112, \text{partial } \eta^2 = .016$. 구체적으로 각 다양성 이념별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현실적 위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제 조건과 색맹주의 조건, 그리고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각각 $F(1, 366) = 0.44, p = .508; F(1, 366) = 0.36, p = .546, F(1, 366) = 0.96, p = .329$, 다문화주의 조건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F(1, 366) = 4.24, p < .05$. 이는 다문화주의 조건에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현실적 위협을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상징적 위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별 추정 평균 및 표준오차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인구 다양성 점화와 다양성 이념의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1, 366) = 0.38, p = .540, \text{partial } \eta^2 = .001. F(3, 366) = 0.43, p = .729, \text{partial } \eta^2 = .004$. 인구 다양성 점화와 다양성 이념의 상호작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3, 366) = 1.27, p = .285, \text{partial } \eta^2 = .010$. 구체적으로 각 다양성 이념별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상징적 위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조건에 걸쳐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상징적 위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98$.

- 3)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성 이념별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현실적/상징적 위협으로 설명되는가?(가설 3)

<표 4> 조건별 현실적 위협의 추정 평균(표준 오차)

	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	통제 조건
통제 조건	5.01(0.15)	4.83(0.15)
색맹주의 조건	4.96(0.15)	5.04(0.15)
다문화주의 조건	5.14(0.15)	4.69(0.15)
상호문화주의 조건	4.80(0.15)	5.05(0.16)

<표 5> 조건별 상징적 위협의 추정 평균(표준오차)

	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	통제 조건
통제 조건	4.62(0.15)	4.45(0.15)
색맹주의 조건	4.52(0.15)	4.63(0.15)
다문화주의 조건	4.60(0.15)	4.25(0.15)
상호문화주의 조건	4.38(0.15)	4.53(0.14)

가설 1과 가설 2의 분석에서 다양성 이념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단순 주효과 분석에서 다양성 이념별로 인구 다양성 증가가 통일에 대한 태도 및 위협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 다양성 증가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성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현실적/상징적 위협에 의해 설명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된 조절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성 이념의 네 조건은 더미코딩되었으며 준거 집단을 서로 다르게 해 가능한 모든 조건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매개변인인 현실적/상징적 위협은 모형에 동시 투입되었으나, 상징적 위협을 통한 매개 경로는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래에는 현실적 위협을 통한 매개 경로의 분석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현실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을 매개 모형에 각각 투입하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연속형으로 측정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구 다양성 점화(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 vs. 통제 조건)와 다양성 이념(통제 조건 vs. 색맹주의 조건 vs. 다문화주의 조건 vs. 상호문화주의 조건)을 각각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으로 하는 매개된 조절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오직 다문화주의 조건의 매개효과와 상호문화주의 조건의 매개효과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18, $SE = 0.11$, 95% CI [0.0166, 0.4240]. 구체적으로 각 다양성 이념별로 현실적 위협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제 조건과 색맹주의 조건, 그리고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현실적 위협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각 $B = -0.05$, $SE = 0.06$, 95% CI [-0.1803, 0.0687]; $B = 0.02$, $SE = 0.06$, 95% CI [-0.0938, 0.1424]; $B = 0.07$, $SE = 0.07$, 95% CI [-0.0528, 0.2163], 다문화주의 조건에서는 현실적 위협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12$, $SE = 0.07$, 95% CI [-0.2697, -0.0139].

다음은 이분형으로 측정된 통일에 대한 찬반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조절된 매개 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오직 다문화주의 조건의 매개효과와 상호문화주의 조건의 매개효과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51$, $SE = 0.30$, 95% CI [0.0571, 1.2329]. 구체적으로 각 다양성 이념별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제 조건과 색맹주의 조건, 그리고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현실적 위협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각각 $B = -0.13$, $SE = 0.19$, 95% CI [-0.5768, 0.1882]; $B = 0.06$, $SE = 0.18$, 95% CI [-0.2867, 0.4266]; $B = 0.19$, $SE = 0.20$, 95% CI [-0.1637, 0.6276], 다문화주의 조건에서는 현실적 위협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33$, $SE = 0.20$, 95% CI [-0.8021, -0.0444].

가설 3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오직 다문화주의 조건에서만 현실적 위협이 인구 다양성 증가가 야기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 조건, 색맹주의 조건과 달리 다문화주의 조건에서 인구 다양성 증가로 인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관찰된 이유가 다문화주의 조건에서만 증가한 현실적 위협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 간 현실적 위협의 매개효과 차이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 모두에서 인구 다양성 증가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야기하였지만, 오직 다문화주의 조건에서만 인구 다양성 증가로 인해 야기된 현실적 위협이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IV.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통일 이후 북한 출신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유입된다는 정보가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현실적/상징적 위협으로 설명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여러 다양성 이념이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야기하는 위협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통일 이후 인구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정보를 제시하면 남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이민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보를 주었을 때 미국의 주류 집단인 백인들이 더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raig & Richeson, 2014; Danbold & Huo, 2015; Osborn et al., 2020). 이는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집단이 공존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했을 때 남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양성 이념에 따라 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다양성 이념과 관련 없거나 색맹주의와 관련한 글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인구 다양성 증가로 인한 통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다문화주의 혹은 상호문화주의와 관련한 글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인구 다양성 증가 조건에서 통제 조건에 비해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제까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적 변인 및 집단 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던(Cho et al., 2017; Gündemir et al., 2017)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남한과 북한의 집단 간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통일 이후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했을 때 표면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보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갖고 있는 ‘다름에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은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 사람과의 차이점에 주목하게 만들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들은 인구 다양성 증가가 야기하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북한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희소화 및 경쟁,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손상에 대한 위협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조건을 제외한 다른 세 조건(통제 조건, 색맹주의 조건,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도 한반도 통일 맥락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구 다양성 증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들은 주로 민족, 문화적 유사성이 매우 적은 외집단 구성원들의 유입(예. 이주민) 맥락에서 수행되었는데(Craig & Richeson, 2014; Craig & Richeson, 2017; Major et al., 2016; Osborn et al., 2020),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 발견된 위협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교류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민족성과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유사성을 지닌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신봉철, 2010). 이는 남한 사람들에게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정보가 이주민처럼 아주 낮은 외집단과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정보와 질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통일로 인한 인구 다양성 증가가 위협이 아닌 다른 심리적 기제를 거쳐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다문화주의 조건에서는 현실적 위협이 인구 다양성 증가로 인한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인구 다양성 증가로 인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위협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와 관련한 정보가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제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모두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양성 이념이지만 다문화주의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영속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집단 간 대화와 상호 교류를 통한 유동성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Rosenthal & Levy, 2010).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간의 다른 점에 좀 더 주목하면, 먼저 다문화주의 조건에서 관찰된 결과는 다문화주의가 부각하는 집단 간 차이의 보존과 관련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주의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통일 이후 북한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남한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지각했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상호문화주의의 특징, 즉 집단 간 차이를 인정하지만 그러한 다름이 교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상호문화주의는 문화란 원래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임을 말해주지만 집단 간 교류를 통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연구의 함의

통일과 한국인의 태도

북한 인구의 유입을 상기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통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심적 표상의 내용이 잠재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통일 이후의 인구 다양성 증가의 효과를 시험하기 사용한 글은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 모두에서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통일 이후의 인구 다양성 변화 vs. 통일 이후의 국토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조건에서만 부정적 태도가 증가한 것은 ‘통일’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북한 주민과의 구체적인 접촉 및 교류에 대한 생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남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추상적인 심리적 표상에 실제 통일이 이뤄졌을 때 마주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남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생각할 때 분단된 민족의 결합 혹은 동질성의 회복과 같은 추상적인 형태를 떠올리는 반면, 실제 통일 이후 발생할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 등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0)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20.0%, 4.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분단으로 인한 오랜 교류의 단절일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긴 한반도의 역사에 비해 70년 남짓 된 분단 기간은 짧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광복 이후 남한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를 이뤄냄으로써 큰 폭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열린 국제 교류 및 여러 사회 지표들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KBS, 2021. 7. 3). 이에 비해 북한은 경제 규모에서 남한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지표에서도 남한보다 열악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벌어진 남한과 북한 사회는 통일 이후의 사회가 직면할 많은 사회적 과제를 암시한다. 그럼에도 통일에 대한 논의는 민족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감정적이고 반복적인 강조가 주가 되어왔을 뿐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했고(신봉철, 정훈, 2010),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통일 이후 벌어질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보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다양성 이념 조건별로 인구 다양성 증가의 영향을 살펴봤을 때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관찰되었으나, 색맹주의 조건과 다양성 이념 통제 조건에서는 부정적 태도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서로 다른 문화적 집단의 차이를 강조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색맹주의는 집단 간 구별을 무시하고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양성 이념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주장에 비춰 보면 남한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만드는 데에는 북한과 남한의 이질성보다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 합치로서의 통일이 이렇게 남한 사람들에게 설득적인 까닭에는 남북이 오랜 역사와 민족성을 공유한다는 점도 있지만 남한의 오랜 통일 교육이 민족주의적 관점을 취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남한 사람들이 북한과의 동질성을 강조했을 때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랜 교육에 의한 관성적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일의 당위를 국민들에게 설득함에 있어 유용한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남북한의 통일은 일반적인 집단 간 관계 맥락에서의 민족 또는 문화 집단들의 통합에 대한 이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특수한 집단 간 관계임을 보여준다. 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한반도 통일이 다른 집단 간 관계와는 달리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이러한 통일의 맥락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앞으로의 통일 교육의 방향성을 제언할 것이다.

미래 통일 교육의 방향

현 시점에서 남한 사람들에게 통일은 오랜 역사적 공통점과 교육의 영향으로 여전히 공통성의 회복으로 여겨지고 있고, 본 연구의 결과도 여전히 북한과의 통일이 한국인의 심리에 이런 표상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 마주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통일 교육에 있어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추상적 기대감과 통일 이후의 실제적인 집단 간 역동과정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통일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과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를 고려한 통일 교육의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서로 다른 집단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요소를 강조하는 다양성 이념(색맹주의)을 제시하였을 때 남한 사람들이 보인 통일에 대한 태도는 여태껏 전통적으로 시행되어온 민족 공통성을 강조하는 통일 교육이 비록 오늘날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를 납득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집단 간 공통점을 강조하는 색맹주의 관점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가지고 있는 효용이 그 내용의 탁월함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남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받아온 교육의 내용이 색맹주의적인 관점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통일을 생각할 때 이질성보다 공통성과 연관짓는 것이 더 친숙하고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 대상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하여 색맹주의적 관점만을 채택하여 통일 교육을 구성하는 것은 실제 통일을 맞이했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통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혼란을 낳을 수 있다. 통일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교육 대상들이 통일의 의의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한반도 통일이 이룩된 사회에서 평화와 관용의 정신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우리 사회는 박광기(2012)가 제안한 것처럼 ‘통일을 위한 교육’과 ‘통일 이후를 위한 교육’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교육적 목적에 입각하였을 때 북한을 단순히 남한과 유사한 집단으로 가르치는 것은 통일 이후 남한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 출신 사람들과 교류하며 마주할 수 있는 그들의 이질적인 면에 차별적이고 배타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대비책이 될 수 없다. 이때,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집단 간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은 이에 대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여, 연구자들은 통일 교육이 ‘한민족의 분단’과 ‘오랜 교류의 단

절'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입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의 의의와 중요성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의 공통된 역사, 언어, 전통 문화 등을 교육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고취하는 한편, 통일 이후의 집단 간 역동에 대비하여 분단 이후 달라진 남과 북의 생활상,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사실감 있는 정보를 교육함으로써 오늘날의 통일이 다문화적 결합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 간 갈등 상황을 떠올려 보게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활동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킨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통일 한국에서 살아갈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계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 이념 조작을 위해 사용된 글에는 한국과 관련지어 서술된 내용이 거의 없어 참가자들이 다양성 이념의 내용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작의 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았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와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성 이념에 대한 가상의 신문 기사를 번역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다양성 이념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참가자들에게는 글의 내용이 낯설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맥락에 맞춰진 실험 자극을 만들어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 연구에서 다양성 이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실험 자극의 개발이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다양성 이념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지만, 각 다양성 이념을 지지하는 정도에 따라 통일 이후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지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즉, 다양성 이념에 대해 읽게 한 것

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읽은 다양성 이념을 지지하게 만든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다양성 이념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수준에 따라서 통일 이후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성 이념을 실험적으로 조작할 때, 특정 다양성 이념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지지하는 규범으로 제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면 다양성 이념, 특히 상호문화주의가 교육에 있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결과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야기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위협에 의해 설명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또 다른 심적 기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앞서 ‘사회적 불확실성’을 가능한 대안 설명으로 논의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해 해외에서 수행된 다른 연구들과 달리 통일 맥락에서는 왜 인구 다양성 증가 정보가 위협을 뚜렷하게 증가시키지 못했는지 그 심리적 기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를 모집한 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을 연구에 포함하는 문제를 낳아 연구 결과의 관찰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교육이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를 모집한 것이 역설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통일 교육에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제한했을 수 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0)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20대는 ‘남북 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50대 이상은 ‘같은 민족이니까’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령의 효과를 통계적 방법으로 통제하기는 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 특정 연령층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령에 따른 효과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통일에 대한 세대적 특수성을 더 상세하게 반영하는 연구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성아 (2019). 김정은시대 북한 국가정책 및 교육의 변화와 통일준비. 통일교육 연구, 16(2), 51-71.
- 김민채 (2020). 남북한 언어 이질화 요인으로서의 언어 정책: 외래 용어 순화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8(1), 29-53.
- 김석향 (200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통일부 통일교육원.
- 박광기 (2012).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정치정보연구, 15(1), 187-214.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2019 통일의식조사.
- 신봉철 (2010). 민족 정체성 변화와 통일교육. 통일교육연구, 7(1), 52-63.
- 신봉철, 정훈. (2010). 헬무트 콜의 독일 통일 정책이 한반도 통일 정책에 주는 시사점 연구.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9(2), 103-121.
- 신장철. (2016). 북한의 경제현황과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사업의 정책적 의의 및 기대효과. 유라시아연구, 13(2), 17-38.
- 신중섭 (2021).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의미 변화에 대한 철학적 분석. 哲學論叢, 104(2), 193-214.
- 심양섭. (2016). 탈북자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양문수, 이우영. (2019).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에 대한 비교 연구 상호 간 및 내/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감정/태도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5(1), 65-103.
- 이경희. (1997). 현행 남북한의 표기법 연구. 牛岩斯黎, 7, 133-163.
- 이인정. (2020). 다문화 시대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평화·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6), 227-250.
- 정진리, & 유가현. (2020). 국민정체성 인식과 접촉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다문화교육연구, 13(3), 85-111.

- 추병완. (2011). 다문화 사회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새 활로. *교육과정평가연구*, 14(1), 55-78.
- 통일연구원 (2017),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황미애. (2020). 사회지배성향과 미디어 노출이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시민교육연구*, 52(3), 239-270.
- KBS 남북교류협력단 (2020). 2020년 국민통일의식조사.
- KBS (2021. 7. 3). “한국은 선진국” 공식 인정...UNCTAD ‘개도국→선진국’ 지위 변경.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4508>에서 2021. 10. 1 자료 얻음.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
- Apfelbaum, E. P., Sommers, S. R., & Norton, M. I. (2008). Seeing race and seeming racist? Evaluating strategic colorblindnes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4), 918.
- Chiu, C., Mallorie, L., Hean Tat Keh, & Law, W. (2009). Perceptions of Culture in Multicultural Spac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2), 282-300.
- Chiu, C. Y., & Cheng, S. Y. (2007).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culture and globalization: Some social cognitive consequences of activating two cultures simultaneousl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84-100.
- Cho, J., Morris, M. W., Slepian, M. L., & Tadmor, C. T. (2017). Choosing fusion: The effects of diversity ideologies on preference for culturally mixed experi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9, 163-171.
- Craig, M. A., & Richeson, J. A. (2014). On the precipice of a “majority-minority” America: Perceived status threat from the

- racial demographic shift affects White Americans' political ideology. *Psychological Science*, 25(6), 1189–1197.
- Craig, M. A., & Richeson, J. A. (2017). Hispanic Population Growth Engenders Conservative Shift Among Non-Hispanic Racial Minoriti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4), 383–392.
- Danbold, F., & Huo, Y. J. (2015). No longer “all-American” ? Whites' defensive reactions to their numerical declin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2), 210–218.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ryberg, S. A., & Stephens, N. M. (2010). When the world is colorblind, American Indians are invisible: A diversity science approach. *Psychological Inquiry*, 21(2), 115–119.
- Gündemir, S., & Galinsky, A. D. (2018). Multicolored blindfolds: how organizational multiculturalism can conceal racial discrimination and delegitimize racial discrimination claim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7), 825–834.
- Gündemir, S., Homan, A. C., Usova, A., & Galinsky, A. D. (2017). Multicultural meritocracy: The synergistic benefits of valuing diversity and meri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3, 34–41.
- Gündemir, S., Martin, A. E., & Homan, A. C. (2019). Understanding Diversity Ideologies From the Target's Perspective: A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10:282.
- Hahn, A., Banchevsky, S., Park, B., & Judd, C. M. (2015). Measuring intergroup ideologie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emphasizing versus looking beyond group differ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12), 1646–1664.

- Hahn, A., Judd, C. M., & Park, B. (2010). Thinking about group differences: ideologies and national identities. *Psychological Inquiry* 21(2), 120-126.
- Ho, A. K., Sidanius, J., Kteily, N., Sheehy-Skeffington, J., Pratto, F., Henkel, K. E., ... & Stewart, A. L.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₇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1003.
- Levin, S., Matthews, M., Guimond, S., Sidanius, J., Pratto, F., Kteily, N., ... & Dover, T. (2012).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colorblindness: Mediated and moderated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1), 207-212.
- Maddux, W. W., Galinsky, A. D., Cuddy, A. J. C., & Polifroni, M. (2008). When Being a Model Minority Is Good ... and Bad: Realistic Threat Explains Negativity Toward Asian Americ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 74-89. [KBShttps://doi.org/10.1177/0146167207309195](https://doi.org/10.1177/0146167207309195)
- Major, B., Blodorn, A., & Major Blascovich, G. (2018). The threat of increasing diversity: Why many White Americans support Trump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1(6), 931-940.
- Osborn, H. J., Sosa, N., & Rios, K. (2020). Perceiving demographic diversity as a threat: Divergent effects of multiculturalism and polyculturalism.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3(7), 1014-1031.
- Outten, H. R., Schmitt, M. T., Miller, D. A., & Garcia, A. L. (2012). Feeling threatened about the future: Whites' emotional reactions to anticipated ethnic demographic cha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1), 14-25.

- Plaut, V. C., Thomas, K. M., & Goren, M. J. (2009). Is multiculturalism or color blindness better for minorities? *Psychological Science*, *20*(4), 444-446.
- Plaut, V. C., Garnett, F. G., Buffardi, L. E., & Sanchez-Burks, J. (2011). "What about me?" Perceptions of exclusion and Whites' reactions to multicultur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37-353.
- Richard, F. D., Bond Jr, C. F., & Stokes-Zoota, J. J. (2003). One hundred years of social psychology quantitatively describe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4), 331-363.
- Rosenthal, L., & Levy, S. R. (2010). The Colorblind, Multicultural, and Polycultural Ideological Approaches to Improving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Ideological Approache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4*(1), 215-246.
- Rosenthal, L., & Levy, S. R. (2012). The relation between polyculturalism and intergroup attitudes among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adul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8*(1), 1-16.
- Rosenthal, L., & Levy, S. R. (2016). Endorsement of polyculturalism predicts increased positive intergroup contact and friendship across the beginning of college.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472-488.
- Rosenthal, L., Levy, S. R., Katser, M., & Bazile, C. (2015). Polyculturalism and attitudes toward Muslim American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21*(4), 535.
- Schoemann, A. M., Boulton, A. J., & Short, S. D. (2017). Determining power and sample size for simple and complex mediation model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4), 379-386.
- Stephan, W. G., Ybarra, O., & Bachman, G. (1999). Prejudice toward immigra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11), 2221-2237.

- Verkuyten, M., Yogeeswaran, K., Mepham, K., & Sprong, S. (2020). Interculturalism: A new diversity ideology with interrelated components of dialogue, unity, and identity flexi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3), 505-519.
- Verkuyten, M. (2005). Ethnic group identification and group evaluation among minority and majority groups: Testing the multicultural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21.
- Vorauer, J. D., & Sasaki, S. J. (2011). In the worst rather than the best of times: Effects of salient intergroup ideology in threatening intergroup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07.
- Wolsko, C. V., Park, B., Judd, C. M., & Wittenbrink, B. (2000). *Framing interethnic ideology: Effects of multicultural and color-blind perspectives on judgments of groups an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635-654.
- Wolsko, C., Park, B., & Judd, C.M. (2006). Considering the tower of Babel: Correlates of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among ethnic minority and majority group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Justice Research, 19*(3), 277-306.